

1991

民主 統一論

(北韓實態)

1991年度版을 펴내면서

새해 劈頭부터 중동지역에 밀어닥친 걸프戰爭으로 온 세계가 超非常 事態를 맞고 있다.

그리고 과연 이 전쟁은 어떤 양상으로 진전이 되고, 어떻게 결말이 지어질 것인가에 地球村의 耳目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분단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할 우리 입장에서 걸프전쟁이 韓半島와 南北關係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나아가 戰後 새로운 국제 질서는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된다.

우리는 새해에도 開放·改革과 和解·協力을 지향하는 이른바 『世紀的인 大變革』의 물결이 국제질서의 主流를 형성함으로써 남북관계에도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돌아보건대 지난 1990년은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총리간의 고위당국자 회담이 세차례나 이루어지고, 비록 한정된 범위이나마 여러갈래의 인적·물적교류가 直·間接으로 실현된 의미있는 해였다.

뿐만아니라 밖으로는 北方政策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들과 국교를 수립하고 협력관계가 증진되어 우리의 國際的 地位向上은 물론, 統一環境造成에도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줄기찬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의 이같은 노력에 同參하기는 커녕 아직도 부질없는 對南革命戰略과 統一戰線戰術에 얽매어 있는가 하면 오늘의 歷史的 大勢인 사회개방과 민주화를 외면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과연 북한이 1人絕對權力體制와 閉鎖社會를 얼마나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 스스로가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도 早晚間에 변화할 수 밖에 없고 이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지혜와 힘을 모아 이같은 북한내부의 情況과 틈새를 놓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세계를 향해 문을 열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때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합의기반을 확충하고 사회안정을 바탕으로 國家力量을 結集하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더구나 1991年은 국내적으로 모처럼만에 地方自治制가 실시되는 元年으로서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해다.

獨逸統一의 경우를 보아도 西獨의 막강한 경제력과 함께 민주발전과 사회안정이 그 原動力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示唆해주는 바 크다.

當院이 올해 統一教育의 方向을 自主·平和·民主統一觀을 확립하고 다가올 남북한개방시대에 대비하여 북한실상을 정확하게 알려주며 아울러 건전한 民主市民精神 涵養에 두고 있는 것도 이때문이다.

이에 당원은 급변하는 내외상황과 북한의 최근동향에 유의하여 명실상부한 중추적 統一教育 및 國民精神教育機關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표준교재인 1991年度版 『민주통일론』을 펴내게 되었다.

아무쪼록 本書가 우리국민의 올바른 통일관을 심어주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원고집필 및 내용검토에 참여해 주신 원내외 教授陣과 斯界專門家 그리고 원고교정에 많은 애를 써준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統一 研修 院長

차례

I. 政治篇

北韓의 統治理念과 權力構造	9
1. 序 論	11
2. 政治體制의 形成過程	15
3. 統治理念과 思想體系	24
4. 權力構造와 世襲體制	37
5. 政治社會化와 人權	47
6. 對外政策과 宣傳	57
7. 結 論	71

II. 經濟篇

北韓의 經濟構造와 現況	73
1. 序 言	75
2. 北韓의 經濟體制와 政策	77
3. 主要 部門別 現況	87
4. 南北經濟統合의 可能性	109
5. 結 言	115

III. 社會篇

北韓의 社會構造와 住民生活	117
1. 序 言	119

2. 社會構造	121
3. 住民生活	128
4. 結 言	164

IV. 教育·文化篇

北韓의 教育·文化	169
1. 序 論	171
2. 北韓의 教育	172
3. 北韓의 文化	205
4. 結 論	223

I. 政治篇

北韓의 統治理念과 權力構造

尹 炳 益 (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論	11
2. 政治體制의 形成過程	15
가. 蘇聯軍政 政策과 北韓政權의 樹立	15
나. 肅清史	19
3. 統治理念과 思想體系	24
가. 「抗日 빨치산鬪爭史」의 虛構性	24
나. 主體思想	28
4. 權力構造와 世襲體制	37
가. 「朝鮮勞動黨」	37
나. 主權機關과 政權機關	41
다. 世襲後繼體制的 構築	45
5. 政治社會化와 人權	47
가. 政治權威의 造作	48
나. 強制力의 使用	50
다. 人權問題	53
6. 對外政策과 宣傳	57
가. 對外政策	58
나. 宣傳	66
7. 結 論	71

1. 序 論

우리 민족은 1945년 日帝의 식민통치로 부터 벗어나는 민족해방과 동시에 국제정치의 희생물로서 타의적으로 민족분단을 강요당하여 이제 46년의 비극적인 분단민족사를 맞고 있다.

우리 민족은 급변하는 대내외정세 속에서 분단된 조국을 민족자주적으로 통일시키지 않으면 안 될 민족사적 소명 앞에 섰다. 이같은 민족사적 시대적 소명을 절감한 제 6 공화국은 냉전구조적 적대의식을 청산하고 북한을 민족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 인정, 남북한 동반자관계의 지향을 제시한 「7·7선언」에 이어 1989년 9월 11일 국회개원 대통령연설에서 역사적인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대내외에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이 방안은 기존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민족통일의 중간단계로서 「남북연합」단계를 이론화·체계화시킨 기본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우리 민족의 자유와 인권, 행복을 보장하는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민족통일이 궁극적으로 달성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립하여 민족통일을 달성 시키겠다고 하면서도 남북한간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그대로 둔다는 북한의 주장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하나의 헌법하에서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여 민족통일을 이룩하려면 만일 어떤 결합이 있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체제도 물론 보완되어야 되겠지만 오늘날 「주체사상」으로 위장된 북한의 김일성 「神政體制」¹⁾는 결정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1) 李相禹: 김일성체제의 특징, 「북한40년」 을유문화사, 참조

다행히 오늘날 중·소·동구 공산권등 공산권 전반에서 노도와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개혁·개방의 물결은 비록 지금은 북한연안에 스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나, 결국 북한땅을 비켜지나가지는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는 민족통일의 앞날은 그만큼 밝아질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민족통일의 문제는 결국 體制統合의 문제이므로 북한 체제가 최소한 오늘날 공산권전반의 개혁·개방 수준으로라도 언제쯤 변화될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결된다.

그러므로 공산권의 개혁·개방정책의 본질과 북한에서 이런 현상이 아직 일어나지 않는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북한정치의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 작업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唯物辨證法과 唯物史觀에 따라 자본주의 사회는 必滅하고 사회주의사회가 도래한다는 마르크스·엔겔스의 “아래로 부터의 혁명”으로서의 「사회혁명론」이 이론적허구로 드러난 상황에서 레닌은 직업혁명가집단(공산당)의 폭력혁명방식에 의한 이른바 “위로부터의 혁명”으로서의 후진국 사회주의 혁명론에 기초하여 1917년 볼셰비키혁명을 성공시킴으로써 인류역사상 공산주의 시대를 개막하였다.

그리고 레닌의 뒤를 이은 스탈린은 소련 사회주의국가들은 자본주의국가들로 부터 포위되어 있다는 이른바 「자본주의 국가에 의한 포위론」을 내세워 「국제혁명론」 대신 소련을 먼저 사회주의혁명기지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른바 「일국사회주의론」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가권력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명분밑에 무자비한 專制政治를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공산당 1당독재, 경제적으로는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사회적으로는 2,000~4,000 만명을 숙청한 공포사회를 만들었다.

즉, 마르크스·엔겔스의 공산주의이론은 현실화되지 않았고, 공산주의는 레닌의 공산당이론, 폭력혁명론, 스탈린의 공산당1당독재,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공포사회, 그리고 브레즈네프시대를 거치면서 요지부동으로 굳어진 공산관료집단으로 정형화되었으며, 특히 공산주의는 스탈

린주의를 말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 공산권진반에서의 개혁·개방정책은 바로 스탈린주의의 체제적 한계성에서 탈피하자는 데서부터 문제가 제기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공산권의 개혁·개방정책은 사회주의국가와 자본주의 국가간의 「戰爭可避論」에 따라 平和共存論을 내세워 스탈린格下運動을 전개시킨 후루시초프시대로 소급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주지하는 바와같이 후루시초프가 평화공존론을 제기하자 중국은 이를 修正主義로 규정, 毛澤東思想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주장함으로써 中·蘇理念紛爭이 발생하였다.

毛澤東思想은 농민(인민)을 사회주의혁명의 主力軍으로 삼아 「농촌에 의한 도시 포위 전략」, 유격전, 지구전으로 抗日戰과 國共內戰을 승리로 이끈 中國革命을 사상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이른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중국의 현실에 창조적·실천적으로 적용」시킨 것이다. 그러나 이른바 「中國的 社會主義」라는 명분밑에 진행된 스탈린主義로 부터의 본격적인 離脫은 鄧小平의 實用主義路線에 따른 「4個現代化政策」의 추진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른바 「黑猫白猫論」에 따른 경제건설지향적인 실용주의노선은 市場經濟原理를 도입하고 「經濟特區」를 만드는 등 對外開放的經濟政策과 對內經濟體制의 개혁정책을 실시하면서도 공산당1당독재를 고수하여 정치적 民主化를 거부하는 한계성을 드러내기는 하였으나 스탈린主義로 부터의 획기적 이탈임에는 틀림이 없다.

한편, 정치적 민주화를 단행한 東歐共產國의 개혁·개방은 단순한 스탈린主義로 부터의 離脫만이 아닌 체제자체의 혁명적 변혁이었다. 東西歐는 이데올로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동일문화권을 유지하여 왔을 뿐만아니라, 전후의 동·서냉전체제의 공식적 종결이 선포될 정도로 급격히 완화된 국제정세가 혁명적 변혁의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동구공산권의 변혁을 몰고 온 主力은 고르바초프다. 그의 「新

思考」에 입각한 개혁·개방정책은 대외적 파급효과에 비해 대내적 성과는 아직 대수롭지 않으나, 점차 소련국민이 70여년간 체질화된 공산주의적 사고와 행동유형에서 벗어남에 따라 모습을 달리할것으로 전망된다.

여하튼 이와같이 모든 공산권이 개혁·개방의 물결속에 변혁되고 있는데도 변하지 않는 곳이, 아니 변혁의 물결이 마지막 닿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 바로 북한이다.

김일성은 1984년 소련 및 동구공산권 방문을 계기로 그곳의 경제발전상에 큰 충격을 받고 돌아와 1984년 9월 8일 중국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모방하여 「合營法」을 만들고 부분적인 대외개방경제정책을 추구하면서도 對內經濟體制의 개혁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며, 오히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표방, “협동적 소유의 국가적소유화”와 “전인민의 노동계급화”를 지향함으로써 공산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의 물결을 본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김일성 「神政體制」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공산권 전반의 개혁·개방정책의 물결속에서 북한체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힘 또한 김일성 「神政體制」로 부터 나온다.

오늘날 북한은 「조선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는 일방, 마침 1989년 「6·4天安門事態」를 계기로 정치개혁을 더욱더 거부하고 있는 中國과 이념적·정책적 제휴를 강화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朝·蘇關係」의 이완에 따른 경제적 위기상황하에서 對日修交를 시도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은 체제고수와 개혁·개방의 갈림길 위에 서 있다. 이런 배경위에서 김일성 「神政體制」의 본질을 파헤침으로써 민족통일을 위한 북한정치체제의 변화가능성 진단작업의 기초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2. 政治體制的 形成過程

오늘날 공산권전반에서 노도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개혁·개방의 물결을 본질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체제를 전문가들은 김일성 「神政體制」라고 말한다. 이러한 「神政體制」가 형성되기까지는 (1) 스탈린主義에 따른 북한사회의 무자비한 사회주의화단계와 (2) 김일성의 「항일빨치산투쟁사」의 조작과 「주체사상」에 의한 북한주민의 政治社會化 과정을 거쳤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의 정치경험을 가진바 없는 북한사회의 사회주의화·공산화과정을 蘇聯軍政과 김일성에 의한 무자비한 숙청사가 뒷받침하였다.

가. 蘇聯軍政 政策과 北韓政權의 樹立

소련은 北半部에 위치한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帝政러시아 이래 부동항을 얻기 위한 南進政策을 추구해 왔으며 2차대전의 종결과 함께 金日成을 내세워 북한정권을 수립한 것은 거시적으로 이같은 소련의 전통적인 국가전략의 일환이었다.

미국의 원자탄투하로 일본군의 패망이 임박한 1945년 8월 8일 對日선전포고를 전격적으로 한 붉은군대는 연해주, 하바로프스크, 자바이칼 등 3개 전선에서 공격을 개시, 일본 「關東軍」을 격파하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직후인 8월 21일에는 소련 붉은군대의 선발대가 함흥, 원산으로 들어왔고 24일에는 평양에 진주하였다. 이보다 앞서 8월 16일 스탈린은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한 미·소간의 38도선 분할점령안인 미태평양 최고사령부의 「일반명령 제 1 호」를 수락하였다.

전한반도를 석권할 수 있는 유리한 군사정세²⁾ 하에서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한 이른바 「잠정적 군사분계선」이라고는 하나 38도선 분할 점령안을 스탈린이 선뜻 수락한 것은 한반도에서 다소 양보하는 대가로 일본 本土의 미소분할 점령을 흥정하려는 속셈이 있었다고 한다.³⁾ 여하튼 소련당국은 38도선을 「철의 장벽」으로 만들고 북한지역의 소비에트화를 위한 군정정책을 실시하였다.

소련은 우선 8월 25일 평양에 치스차코프대장을 사령관으로 제25군 사령부를 설치하였다. 당관료로서 연해주 군관구 군사회의 위원이며 훗날 미·소공동위원회 소련측 수석대표와 북한주재 초대대사(1948~1951)를 역임한 스티코프대장이 치스차코프를 직접 지휘하였다. 그리고 치스차코프의 점령정책을 집적 보좌한 핵심막료는 군사령부 민정장관 로마넨코소장이었다.

소련군 점령정책은 우선 각도 인민위원회를 조직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曹晩植을 위원장으로한 평안남도 건국준비위원회가 대변하듯 민족주의자 중심으로 이미 조직되어 있는 자치기관들을, 산발적으로 출현한 공산주의자의 참가비율을 높임으로써, 「인민위원회」 혹은 「인민정치위원회」로 개편시키는 작업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조만식이하 「建準」측 민족주의자와 玄俊赫이하 조선공산당 평남지구 위원회소속 공산주의자를 각각 16명씩으로 8월 26일 조직된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였다.

소련군사령부는 日帝로부터 접수한 행정권과 日帝소유재산을 「인민위원회」에 이관하고 내정불간섭을 표방하였다. 1945년 10월 12일 발표된 「북조선 주둔 제25군사령부 성명서」는 (1) 소련군대는 조선에 소비에트 질서를 설정할 목적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히고 (2) 반일민주주의 단체와 각종 사회단체의 결성을 허가함으로써 북한이 민주주의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장하고 있으나 이 때는 이미 북한 각도에 「인민위원회」

2) 소련군선발부대는 春川까지 들어왔으나 38도선 획정을 수락함으로써 퇴각하여야만 했다.

3) 金一平교수 등의 견해.

및 「인민정치위원회」의 조직이 완료된 단계여서 결국 반일민주단체결성의 허용은 공산당집권과정의 민족통일전선의 허용에 지나지 않았다. 소련군 사령부는 1945년 11월 3일 曹晩植을 당수로 한 조선민주당 창건을 허용하였으나, 김일성과인 공산주의자 崔庸健을 부당수직에, 金策을 金在民이란 가명으로 서기장겸 정치부장에 앉힘으로써 평안남도 인민정치위원회를 조선민주당, 공산당, 무소속인사로 구성된 형식상의 聯立형태로 만들었다. 그러나 1945년 12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결정된 信託統治案 반대를 계기로 曹晩植은 반동, 민족반역자로 몰려 崔庸健이 당수로 선출되었으며 당명도 「북조선민주당」으로 개칭되어 공산당의 이른바 民主友黨으로 변질되고 曹晩植은 결국 숙청당하고 만다.

다음, 소련군정당국의 핵심정책은 심복인 金日成을 북한통치자로 만드는 작업이었다. 군정당국은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장군환영 평양시 민중대회」에서 처음으로 대중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한 다음 매스미디어를 총동원하여 “민족적 영웅”으로 부각시켰다. 김일성은 1945년 10월 10~13일 평양시 민중대회 직전 극비리에 개최된 조선공산당 서북 5도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새 조선건설과 민족통일 전략에 대하여”란 이른바 강령적 연설을 하였는데, 이는 스탈린이 김일성을 북한통치자로 확정하였음을 반증한 것이다. 이 서북 5도 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창설되었다. 이는 朝鮮勞動黨의 모체로서 — 대회소집일인 10월 10일은 조선노동당의 창당일로 정해짐 — 1945년 12월 17~18일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 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金日成은 드디어 당비서로 선출된다.

소련군정당국은 북한에 진주한지 반년도 안되는 1946년 2월 8일 극비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급조하고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선출”토록 하였으며, 그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북조선 중앙주권기관」이라고 선포함으로써 미·소공동위원회 제 1차 본회의개막(1946. 3. 2)을 앞두고 북조선 단독정부의 모체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리고 「북조

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예의 통일전선전술에 따라 조선민주당, 조선신민당—延安派中心—, 공산당이 가담한 연립정권의 모습을 갖추었다.

그리고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하에서 金日成은 토지개혁법령(1946. 3. 5), 중요산업국유화법령(1946. 8. 10), 노동법령(1946. 6. 24), 남녀평등에 관한 법령(1946. 7. 30), 선거법령(1946. 6. 4), 농업현물세법령(1946. 6. 27) 등을 제정 이른바 반제 반봉건민주개혁을 즉각 단행함으로써 북한은 이미 사회주의화 예비단계에 돌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1946년 11월 3일 도·시·군인민위원회선거를 실시하여 「북조선인민회의」를 구성하였으며, 이 인민회의는 1947년 2월 첫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으로써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총 22명의 「북조선인민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1947년 11월 유엔총회가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실시와 선거를 감시할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설치를 결의하자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북한정권의 수립을 서둘렀다. 1948년 8월 25일 최초로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이어서 북조선 출신 대의원 212명 이외에 남한에서는 「인민대표자대회대표」를 「連判狀」방식으로 비밀리에 조작적으로 선출하고 1945년 8월 21일부터 26일까지의 사이에 「조선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위한 「남조선 인민대표자대회」를 황해도 해주시에서 개최, 여기서 간접선거 방식으로 360명의 남조선 출신 「조선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을 선출하여 「북조선 인민위원회」로 부터 정권을 위양받아 1948년 9월 9일 金日成을 수상으로 각 정파를 안배하여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수립하였다.

이상과 같이 북한정권은 소련군정당국의 조직적인 계획과 감시하에 수립되었으며, 특히 최초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정권이라고 자처한 「북조선 인민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1947년 2월이었다. 뿐만 아니라 1948년 9월 9일 인민공화국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이전인 1948년 2월 8일 이

미 조선인민군을 창설하였음에도 불구하고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시기를 늦춘 것은 분단을 선도하지 않았다는 한낱 허울좋은 정치선전 목적 때문이었다.

나. 肅 淸 史

金日成은 소련당국의 비호밑에 1945년 12월 17~18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제 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당권을 장악한 이래 오늘날까지 46년 동안 국제공산주의 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집권을 해 오고 있는바, 그 동안 독재체제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권력투쟁에 골몰해 왔고 이에는 처참한 피의 숙청이 수반되었다.

그러므로 북한정치사는 한마디로 숙청사였다.

김일성의 리더십은 6·25남침전쟁의 실패로 도전받기 시작하였으며, 1956년 후루시초프의 「평화공존론」이후 스탈린격하운동이 전개되면서 「작은 스탈린」적인 김일성의 리더십은 또 한번 중대한 도전을 받았다. 김일성은 그 때마다 도전에 맞섰을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하여 오히려 권력기반을 강화함으로써 1970년 11월 조선노동당 제 5차 당대회 이후부터는 북한지배층은 완전히 김일성·김정일 일파로 일색화되었다.⁵⁾

김일성은 숙청을 단계적으로 진행시켰는바, 제 1 단계에서는 남조선노동당파(1952), 제 2 단계에서는 소련파(1953~1956)와 延安派(1956~1958), 제 3 단계에서는 국내파(1953~1970) 그리고 제 4 단계에서는 자파

4) 북한은 1977년까지 2월 8일을 「인민군」창건일로 기념해오다가 1978년부터는 1932년 「항일유격대」를 창설했다는 4월 25일로 「인민군」창건일을 변경하였음.

5) 모든 반대세력을 숙청시킨 바탕위에서 개최된 제 5차당대회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당지도이념으로 공식화하고 대남전략면에서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노골적으로 표방, 합법·반합법·비합법투쟁을 주장하였음.

인 빨치산파(1969~)를 각각 숙청하였다. 이 4단계 숙청과정에서 金日成의 빨치산파는 소련파, 연안파, 국내파와 동맹하여 남로당파를, 다음은 국내파와 제휴하여 소련파와 연안파를 소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파를 숙청하는데는 누구와도 손잡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모든 정적을 소탕한 다음 자파인 빨치산파의 비판세력에 화살을 돌렸다. 이상 숙청과정에서 배반자와 이탈자도 생기고 제2~3단계는 부분적으로 중첩도 되어 권력투쟁의 양상은 복잡하였다.

김일성은 숙청을 권력투쟁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분장시켰다. 1928년 코민테른의 「12월 테제」에서 「조선의 당면한 혁명노선」을 “반제 반봉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방후에는 소련 군사령부의 직접 지휘하에 북한에서 공산당이 조직되었으므로 노선상의 혼란이 크게 일어날 까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투쟁은 항상 이데올로기 투쟁으로 분장되어 권력투쟁에서 패배당한 종파는 「우익적편향」, 「좌익적 기회주의」, 「종파분자」로 낙인이 찍히고 金日成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南勞黨」파를 대표한 것은 박헌영이었다. 대중조직과 지식인포섭에 유능했던 박헌영은 해방 후 「조선공산당재건준비회」를 결성하고 이어서 「조선공산당」을 발족, 세칭 「장안파공산당」(이영, 정백, 최익한)파의 이념투쟁에 승리함으로써 통일적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그는 장안파의 노선을 「극좌적 기회주의」로 규탄하면서 「조선혁명」의 현단계 과업을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규정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표방, 통일전선의 조직을 강조함으로써 金日成의 노선과 하등 다를바가 없었다. 그러나 오랜 투쟁경력을 가진 박헌영이 정치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을 재건함으로써 「당중앙」의 권위는 이미 북한 국내파 공산세력으로 까지 암암리에 미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김일성은 1948년 정권수립과정에서 박헌영을 부수상겸 외상으로 옹립하였으나 6·25남침전

쟁의 발발원인이 김일성과 박헌영 사이의 권력투쟁의 산물이라는 이른바 「전쟁발발의 북한내부기원설」이⁶⁾ 나올 정도로 두사람 사이의 권력암투가 지속되었다. 결국 김일성은 6·25남침전쟁의 패전책임을 엉뚱하게 박헌영등 남로당파에 전가시켜 전면 숙청을 단행했다. 김일성은 1950년 12월 유엔군의 반격에 쫓겨 후퇴하던 중 평북 강계 「별오리」에서 당중앙위원회 제 3기 정기회의를 열고 “전투를 옳게 조직하지 않았다”는 책임을 물어 무정등을 일단 숙청하였으나 휴전직후인 1953년 8월 최고재판소는 「미제국주의를 위하여 감행한 간첩행위」와 「공화국정부전복을 위한 무장폭력 음모행위」라는 죄목을 걸어 남로당파(이승엽, 이강국, 조일명 등 12명)에 대한 재판을 열고 이어서 1955년 12월 최용건을 재판장으로 한 군사재판은 같은 죄목으로 박헌영에게 사형을 구형·집행함으로써 남로당파를 전면 숙청하였다.

김일성은 다음으로 소련파와 延安派를 숙청했다. 소련파는 소련에서 이주해 온 「고려인」(조선인)1세 또는 2세로서 소련공민권을 갖고 소련공산당원 경험을 쌓은 정치·행정상의 일종의 테크노크라트인 소련군정요원 출신이며 대표적인 인물은 許哥而, 朴昌玉, 南日 등이었다. 한편 延安派는 中國延安에 본거지를 두고 중국공산당의 비호를 받으면서 항일 게릴라전을 해 오다가 1945년 9월 하순경부터 신의주를 거쳐 분산적으로 입국한 「조선독립동맹」계로서 대표적인 인물은 김두봉, 최창익, 무정, 김창만, 허정숙, 李相朝 등이었다.

김일성은 6·25남침전쟁시 당 부위원장겸 조직담당서기의 요직에 있었던 소련파의 거두 許哥而를 1953년 3월 숙청(자살 혹은 암살설)하였으며, 당 부위원장겸 선전부장, 내각의 부수상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등의 고위직에 있었던 박창옥을 비판하였으나, 소련파, 연안파에 대한 본격적인 숙청은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를 계기로 진행하였다. 이 당대회에서는 앞에서 밝힌 바와같이 후루시초프의 「평화공존

6) 金學俊교수 등의 주장.

론」이 제기되었으며, 동시에 스탈린격하운동이 진행되었다. 후루시초프에게 정면으로 도전할 처지가 아닌 김일성은 일단 소련공산당대회가 있는지 2개월만에 열린 노동당 제 3 차 대회에서 평화공존정책과 핵무기등의 군비축소안을 전적으로 찬양하면서도 북한에서 개인숭배를 퍼뜨린 것은 오히려 「종파분자」들이라고 역습, 개인숭배반대운동을 자기의 독재권력을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역이용하였다. 이에 최창익(연안파)과 박창옥(소련파) 등은 김일성이 경제원조를 얻기 위해 소련과 동구공산권을 방문한(1956년 7~8월) 틈을 타 김일성제거모의를 감행, 1956년 8월 30일 김일성귀국보고를 위한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반김일성파를 중심으로 그의 개인숭배 및 전후복구 경제정책의 실패를 정면으로 공격한 이른바 「8월종파사건」을 일으켰다. 그러나 김일성파의 소동으로 회의가 유산됨으로써 엉성한 김일성제거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8월종파사건」에 놀란 중·소양국이 그 때는 중·소분쟁이 표면화되기 이전이어서 미코안과 彭德懷를 각각 평양에 파견, 공동수습에 나서 일단락되는듯 하였으나, 김일성은 1958년 5월 30일 「당중앙집중지도사업」을 단행, 반당반혁명분자 색출운동을 일으켜 전 북한사회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 와중에서 연안파, 소련파, 국내파를 막론하고 반김일성세력을 모조리 숙청하였는바, 김두봉, 최창익, 한빈등 연안파는 모조리 숙청되고 駐蘇大使였던 李相朝와 김일성편에 가담했던 허정숙 정도가 살아남았다. 소련파는 소련으로 피신하여 상당수 살아남았으나 박창옥은 숙청되었으며, 국내파 오기섭도 숙청되었다. 이리하여 1961년 9월 제 4 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 80명과 후보위원 50명은 모두 김일성의 빨치산파와 그의 맹종자들이었다.

그 후 숙청의 표적은 김일성 자파가 되었다. 1962년 12월 당중앙위원회 제 4 기 5차 전원회의에서 「4大軍事路線」이 제기되어 국방력강화문제가 당면과업으로 등장하자 김일성의 대남군사 노선에 반기를 든 빨치산파(甲山派)의 朴金喆(당부위원장 및 비서국 비서)과 李孝淳(당부위원장

및 중앙연락국장) 및 그들의 부하들을 1967년 5월 모조리 숙청하였다. 그리고 숙청의 불똥은 군부안으로 번져 1969년 허봉학(전군정치총국장, 대남공작비서), 金昌奉(민족보위상), 최광(군총참모장)등을⁷⁾ 숙청하였다. 이어서 1970년 일찍이 민족보위상(1960~1962)을 역임한 부수상 김광협을 국방정책을 반대하였다는 죄목으로 숙청하고 1977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이며 군정치 총국장이었던 金勇武를 반김일성계로 몰아 숙청하였다. 그리하여 1970년 제 5 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북한의 정치세력은 완전히 김일성·김정일 세력으로 일색화되었으며 오늘날 북한의 「神政體制」는 이같은 피의 숙청사가 뒷받침하고 있다.

7) 최광은 현재 인민군총참모장으로 복권되었는바, 소련88특별여단시절 최광의 처가 김정숙사후의 어린 김정일을 보살펴준 인연이 있다고 함.

3. 統治理念과 思想體系

북한의 통치이념은 「주체사상」이다. 1980년 제 6 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규약은 그 전문에서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1972년 최고인민회의 제 5 기 제 1 차회의에서 채택된 사회주의헌법은 제 4 조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의 뿌리 속에는 이른바 “抗日革命투쟁”의 혁명전통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1956년 4월, 1961년 9월 각각 개최된 제3·4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규약은 이를 명백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른바 김일성 「抗日빨치산투쟁사」와 주체사상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 「抗日빨치산鬪爭史」의 虛構性

일반적으로 공산주의는 유물변증법을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에 적용시킨 이른바 唯物史觀에 입각한 「역사발전 5단계설」에 따라 “자본주의는 망하고 필연적으로 사회주의사회가 도래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역사교육을 정치이데올로기 교육과 직결시키고 있다. 물론 북한에서의 역사연구 및 교육도 당과 국가의 이데올로기, 본질적으로는 김일성 「神政體制」의 구축에서 핵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이데올로기의 목적론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현실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기본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에서의 역사연구 및 교육은 국가에 의하여 독점되어 매우 의도적이며 체계적방식으로 김일성 「神政體制」의 구축에 결정적으로 봉사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1972년 김일성 60회 생

일을 기하여 「조선사」 재평가작업의 기준으로서 「주체사상에 의한 민족 문화연구」라는 책을 내놓았는데 “민족문화유산을 평가할 때는 현재의 노동자계급의 입장에서 그 역사적·계급적제약을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역사재평가작업에 적용될 기본원칙으로서 역사주의, 당파성, 노동계급성을 제시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석굴암의 부처조각이 한국미술문화를 대표하는 뛰어난 민족문화유산임을 인정하면서도 어디까지나 불교미신의 선전수단으로써 시대적·계급적제약이란 기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으며, 이순신이 왜적을 물리쳐 인민의 평화와 생활을 지키고 인민의 애국적전통을 굳건히 하는데 이바지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애국심은 인민의 입장에 선것이 아니라 봉건적 忠君思想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비판하고, 특히 옛날의 명장이 아무리 훌륭하여도 김일성장군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암시하고 있다. 나아가서 북한은 朝鮮後期の 實學者들이 당시 정치·경제·문화·군사상의 폐해를 깊이 인식한 바탕위에서 여러가지 사회개혁안을 내놓은 진보적인 학자였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은 儒敎思想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봉건적 신분제도를 용인하는 한편 농민폭동을 반대하였으며 사회주의 사상의 萌芽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한계성을 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같이 북한은 우리의 민족사를 유물계급사관에 기초하여 서술함으로써 민족사를 이질화시키고 있다.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이질화현상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것이 역사의 이질화이다. 역사의 이질화는 우리민족을 갈라놓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김일성의 통치명분을 확보하여 독재체제를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민족사를 양분시킨 결정적 죄악을 범하고 있다.

김일성체제가 감행한 민족사의 왜곡·날조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른바 「抗日빨치산 투쟁사」이다. 북한의 민족사 연구의 결정판인 방대한 「조선전사」 33권 중 16권으로 부터 시작되는 이른바 「현대편」은 바로 김일성 항일빨치산 투쟁사 날조의 결정판이다. 북한은 이 「현대편」에서 우

리 민족의 현대사를 김일성 「항일 빨치산 투쟁사」와 그의 가계사로 완전히 매꾸어 장식하였다.

북한의 김일성 「항일 빨치산 투쟁사」의 날조가 워낙 오랜기간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되어서 국내외 전문가 간에 시시비비가 계속되어 온 것도 사실이나 최근 김일성의 측근이었던 林隱의 「김일성왕조비사」 및 이 책의 바탕이었던 李相朝⁸⁾, 그리고 6·25남침전쟁당시 인민군 작전국장이었던 兪成哲등의 증언이⁹⁾ 공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東北抗日烈士傳 등 빨치산투쟁의 본거지였던 中國측 자료가¹⁰⁾ 이미 부분적으로 발간되고 앞으로 소련측자료가 공개될 날이 멀지 않으므로 김일성 항일 빨치산투쟁사의 허구성이 불윈 백일하에 드러날 전망이다.

본명이 金成柱인 김일성은 1912년 4월 15일 평남 대동군 고평면 남리 칠골(현재의 만경대)에서 출생했다. 1930년대 당시의 자료에 의하면, 김일성은 1934년 5월에 조직된 중국공산당 東滿특별위원회 휘하의 동북인민혁명군 제 2군 제 2 독립사 소속 정치위원이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

8) 李相朝는 延安派로 休戰會談 時 北側代表를 역임하였으며 1958년 연안과 숙청당시 駐蘇北韓大使였음. 소환에 불응하고 소련에 망명, 최근 訪韓하여 金日成의 正體와 6·25南侵戰爭에 대하여 증언함.

9) 6·25南侵當時 人民軍作戰局長으로서 소련으로 망명하였음. 최근 방한하여 金日成의 正體와 6·25南侵戰爭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하였음. 한국일보 1990년 11월 1일부터 연재.

10) 중국측자료로는

① 東北抗日烈士傳 3 卷(1920年代~1930年代 前後) 1980, 1981. 黑龍江省人民出版社

② 조선혁명열사전, 요녕인민출판사, 1983, 1986.

-같은 시기 中國共產黨에 가입하여 활동한 40여명 취급

③ 조선족혁명투쟁사, 요녕민족출판사

-舊韓末부터 8·15까지

※ 黑龍江省 省都 하얼빈에 「抗日烈士紀念館」이 있음. 이상 中國側資料는 김일성의 抗日빨치산 투쟁사에 대하여 언급이 없음.

다. 그리고 그는 동북인민 혁명군의 後身인 「東北抗日聯軍」 제 1 路軍 제 2 군 제 3 사장(뒤에는 6 師長)을 역임한 것으로 史料들은 기록하고 있다.

북한의 관용역사가들은 그가 중국계 항일유격대인 「東北抗日聯軍」에 소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초기부터 숨겨 오면서 “김일성장군은 「조선 인민혁명군」을 조직하여 東滿을 무대로 수십만번의 전투를 벌여 日帝를 물리치고 민족해방을 실현시킨 전설적 영웅”으로 묘사, 장엄한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애국적 항일무장투쟁을 조작하여 김일성神話를 만들어 내었다.

다음으로 북한당국은 김일성의 소련으로의 도피와 그 곳에서의 생활을 숨기고 있다. 1940년말 또는 1941년초 김일성은 日本關東軍의 토벌작전에 쫓겨 그가 소속됐던 中國 東北抗日聯軍의 극소수 부대원들에 기여 소련으로 도피한 후, 그 곳에서 1945년 8월 해방시 까지 소련군의 특수정찰훈련을 받았다. 김일성의 소련망명생활에 관한 가장 상세하고 신빙성 있는 證言은 林隱(본명 許眞-在蘇作家-의 筆名)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에 의하면 김일성은 1940년 말 아니면 1941년초 朝·中빨치산 부대와 같이 入蘇한 후 하바로프스크 근처 비야츠크라는 촌락의 密營에서 5년간을 보냈다고 한다. 소련군 극동정찰국은 이 망명부대원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한 후, 제88특별여단이란 이름의 부대를 편성하여 앞으로의 對日戰에 대비하여 정찰활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여단의 총인원은 200명 정도이고 여단장은 중국인 周保中이었으며 그 중 조선인 부대원은 부인까지 합쳐 60명정도였다. 김일성은 여단 4개 대대중 제 1 대대장이었고 계급은 대위였다. 그리고 강건은 제 4 대대장, 최용건은 여단 정치지도원, 김책, .안길은 정치부 대대장이었다고 한다. 이들의 계급은 모두 대위였다. 김일, 최현, 김광협, 박성철, 서철 등도 이 부대의 부대원이었다. 이들은 1945년 9월 귀국직전 여단에서의 근무와 정찰소조활동의 공로로 戰鬥赤旗勳章을 받았다고 한다. 이 부대원으로서 김일성의 蘇聯語통역을 맡았던 6·25당시 인민군작전국장 兪成哲은 “김일성은 몸이 말랐고 정찰

활동을 직접한적은 없었다”고 당시를 회고하였다. 김일성은 해방후 소련배로 원산에 입항하여 평양으로 왔다.

김일성의 入蘇와 소련에서의 생활은 귀국직후 그 자신의 부주의한 발설과 몇몇 자료가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으나, 북한당국은 이 사실을 極秘에 부치고 있으며, 아직 소련의 당·정부 공식 문건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당국은 1982년 김일성 70회 생일을 기하여 평양에 세계최대규모의 개선문을 만들어 놓고 日帝로 부터의 우리 민족의 해방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抗日 빨치산투쟁의 결과”라는 선전을 펴고 있으며, 최근에는 김일성 抗日 빨치산 투쟁의 物證으로서 이른바 「口號나무」를 조작하는 희극을 벌이고 있으나 서대숙교수의 지적처럼 그의 빨치산투쟁이 부분적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엄청난 역사날조는 그의 공마저 퇴색시켰을 뿐,¹¹⁾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온통 자신의 抗日빨치산 투쟁사로 둔갑시킴으로써 민족사 앞에 저지른 죄과는 마땅히 민족의 이름으로 규탄되어야 할 것이다.

나. 主體思想

「抗日빨치산 鬪爭史」의 날조와 더불어 김일성 「神政體制」를 지탱시키고 있는 것은 “김일성이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창시하였다”고 하는 「主體思想」이란 통치이데올로기이다.

(1) 형성배경

북한공산정권은 제 2 차 세계대전후 소련의 대극동정책에 따른 소련의 「위성정권」이었으며 따라서 소련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통치이념으로

11) 徐大肅교수는 抗日빨치산투쟁사를 과장·날조함으로서 東北抗日聯軍으로서의 活動, 普天堡전투 등의 업적마저 退色시켰다고 봄. 서대숙, 「북한지도자 김일성」참조

차용할 수 밖에 없었다. 소련판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과정에서 변질된 스탈린주의였다. 그것은 공산당1당독재, 중앙집중적 계획경제 및 중공업우선정책, 사회의 인적·물적자원의 총동원, 농업의 강제적집단화, 전산업의 국유화, 유일지도자의 神格化·우상화를 기본내용으로 하였다. 김일성은 이러한 스탈린주의를 북한땅에 그대로 이식시킨 「작은 스탈린」이었다.

이러한 「작은 스탈린」格인 김일성이 「주체」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것은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일꾼모임에서 한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란 연설에서¹²⁾ 였다고 한다. 이 연설은 朴憲永을 처형한지 2주되는 날 행한 것으로서 「조선혁명의 주체」를 자부해온 박헌영일파를 전부 숙청하고 오직 자신만이 사대주의도, 수정주의도, 형식주의도, 종파주의도 아닌 「조선혁명의 진정한 주체」임을 내세우는데 목적을 둔 것이다. 그 후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가 개최되었다. 제20차 당대회에서는 지지하는 바와 같이 후루시초프가 「평화공존론」을 제기하였으며, 동시에 스탈린格下運動을 전개하였다. 이를 계기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정통을 계승한 것은 毛澤東思想”이라고 주장하면서 「平和共存論」을 修正主義라고 공격하고 나선 中國과 蘇聯 사이에 이념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스탈린格下運動의 餘震으로 북한에서는 延安派, 蘇聯派가 중심이 되어 「작은 스탈린」격인 김일성을 축출시키려는 「8월 종파사건」이 발생하여, 김일성은 1958년 5월 30일 「당중앙 집중지도 사업」을 감행, 연안파·소련파를 거의 전부 숙청하였음을 앞에서 밝힌바 있다. 이들을 숙청한 명분은 이른바 「反黨宗派分子」의 소탕이었다.

김일성은 자신의 통치이념을 「주체사상」으로 표방하면서 그것은 곧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시킨 것”으로 주장하기에 이르렀는데 이같은 표현방법은 중국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12) 김일성 저작집 제9권 참조

를 중국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시켰다”는 毛澤東思想과 논리적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그런데 김일성은 1956년 2월 소련공산당 제20차 당대회보다 다소 앞선 1955년 12월 당선전선동모임에서 주체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하였다고 하여 그야말로 「주체사상의 주체적 창조」를 과시하려 하였으나 시기가 엇비슷하여 선전효과가 빈약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이에 북한은 김정일 세습후계체제 구축작업의 일환으로 이른바 “주체사상을 계승·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주체사상의 창시시기를 1930년대의 김일성의 「抗日빨치산 투쟁」시기까지 대폭 소급시킴으로써 또 하나의 엄청난 역사날조를 감행하고 있다. 즉, “수령님께서는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 마르크스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을 반대하고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투쟁과정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발견하였으며 마침내 1930년 6월 카툰에서 진행된 共靑 및 反帝靑年同盟 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노선을 밝혔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20대에도 이르지 못한 젊은 나이에 “민족개량주의, 좌우기회주의 등 온갖 어지러운 사상들이 판을 치던 혼란속에서 시대의 지향과 인민의 염원,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꿰뚫어보고 주체의 진리를 밝혔다”고 말함으로써 이른바 주체사상 창시연대의 허구성을 스스로 드러내었다.

(2) 내용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한다는 것이다.¹³⁾ 여기서 모든 것은 “세계와 자기의 운

13) 「주체사상」의 이론체계를 가장 체계적으로 밝힌 것은 김일성 70회 생일기념 「주체사상학술회의」를 기하여 발표한 김정일 논문 「주체사상에 대하여」임. 김정일 : 주체사상에 대하여, 조선노동당출판사, 1982.

명”이란 것이다. 이 철학적 원리에서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사회역사적원리가 나온다고 말한다. 여기서 모든 것은 “혁명과 건설”이란 것이다.

지난날 세계관의 발전역사는 상반되는 두 철학적조류인 유물론과 관념론, 변증법과 형이상학간의 투쟁의 역사였는데 마르크스주의는 이 투쟁에서 唯物論과 辨證法의 승리를 확정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주의는 노동계급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은 하였으나 역사의 주인은 아니었던 시대상황을 반영한 사상이며, 노동계급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세계관이 「주체사상」이란 것이다. 그리고 물질과 의식, 존재와 思惟의 관계에서 물질과 존재의 일차성을 과학적으로 밝힌 것이 마르크스의 唯物論이라면, 세계의 시원문제가 유물론적으로 밝혀진 조건에서 세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사람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결정한다는 철학적 원리를 밝힌 것이 「주체사상」이란 것이다.

또 「주체사상」은 세계와 사람의 운명이 초자연적인 힘에 의하여 지배된다는 신비주의에 귀착한 관념론이나, 세계의 모든 것은 고정불변이므로 사람은 주어진 운명에 순종해야 한다는宿命론에 귀착한 형이상학을 배격한 마르크스주의를 인정하면서도 (1) 자주성 (2) 창조성 (3) 의식성이란 인간의 사회역사적 본질적 특성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 「주체사상」이란 것이다.

사람과 인민대중의 기본속성인 「自主性」은 세계와 자기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이며, 사회개조, 자연개조, 인간개조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의 중요구성부분이란 것이다.

創造性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으로서 자연을 정복하고 사회적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창조적 활동은 낡은 사회제도를 개혁하고 인민대중의

사회적 해방을 이룩해 나가는 투쟁이며 투쟁을 떠나서는 새것의 창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意識性은 세계와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인간의 속성으로서 인민대중의 계급적 사상의식이며 혁명과 건설은 투철한 계급적 사상의식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사회적 역사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운동이며 혁명투쟁에서 인민대중의 자주적 사상의식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회역사원리가 「주체사상」의 기본내용이란 것이다. 그런데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역할을 다하자면 반드시 인민대중과 수령의 지도가 결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급을 비롯한 광범한 인민대중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은 그 자체가 고도의 의식적 조직적 운동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함으로써 옳은 지도가 없이는 승리할 수 없으므로 인민대중에 대한 혁명의 참모부인 당과 혁명의 최고 영도자인 수령의 영도를 받을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首領論」의 내용이다.

이어서 「주체사상」은 당 및 국가활동,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여 주체를 세우기 위한 기본지침으로서 (1) 사상에서 주체 (2) 정치에서 자주 (3) 경제에서 자립 (4) 국방에서 자위를 제기하고 있다.

「사상에서의 주체」는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만들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시키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일꾼들에게 행한 김일성의 연설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1973년 2월 김일성의 발의와 김정일의 주도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소조」가 조직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이 보다 앞서 1972년 12월 27일 김일성을 명실상부한 절대 권력자로 만들기 위하여 중국식 국가주석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976년 4월 어린이를 주체형의 혁명적 새인간으로 교화시키기 위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하였다.

「정치에서의 자주」는 내부의 권력투쟁과 中·蘇理念紛爭의 와중에서 김일성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유력한 무기였다. 김일성은 자주를 내세워 소련과, 연안파를 종파분자로 몰아 숙청하였으며, 중·소이념분쟁에서 자주를 내세워 이른바 「양다리 외교」를 전개할 수 있었다. 1966년 8월 12일자 「로동신문」 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정치·외교에서 자주를 대외적으로 공식선언한 것으로서 “지배주의 정책으로 부터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주장은 비동맹외교의 명분일 뿐 아니라 이른바 「남조선의 美帝植民地論」과 연계되어 대남전략의 기본명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오늘날 공산권 전반의 개혁·개방정책을 거부하는 정치적 명분이기도 하다.

「經濟에서의 자립」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한다는 명분으로 1956년 12월 11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의 김일성연설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나 실은 소련으로 부터의 경제원조획득에 실패하자 「사회주의 총노선」, 「대약진운동」등 毛澤東의 자력갱생방식을 모방한 자구책이었다. 김일성은 1958년 「천리마 운동」을 시작한 이래 북한주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켜—물질적 자주방식 개념에 대응하는 정치·도덕적 자주방식—이른바 자립적 사회주의 민족경제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공산권 전반의 경제개혁·개방물결을 외면하면서도 1984년 「습營法」 채택을 계기로 제한적이나마 대외개방 경제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자력갱생식 경제건설 정책의 한계성을 자인한 결과이기도 하다.

끝으로 「國防에서의 自衛」는 1962년 12월 10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4大軍事路線」을 표방하면서 “경제발전을 몇년 지연시키더라도 국방력을 일층 강화시켜야 한다”고 김일성이 말함으로써 표면화되었다. 북한은 「4대군사노선」을 표방한 이래 국민총생산 대비 24% 내외의 방대한 군사비를 지출하여 국방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최신무기를 소련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에서의 자위」는 정치

선전상의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오늘날 국제적 긴장완화 추세와 북한·소련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소련의 대북한군사원조는 한계상태에 이르렀으므로 핵무기개발등 앞으로 북한의 대응방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3) 역할의 한계성

1955년 당선전선동모임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로 발단되었다고 하는 주체문제의 계기는 1966년 8월 12일 「자주성을 옹호하자」는 「로동신문」 사설을 계기로 대외적인 자주노선의 선포에 이르고, 이어서 1967년 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동격으로 격상되면서 「唯一思想體系」라는 용어로 공식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70년 11월 제 5차 당대회는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함께 당지도 이념으로 공식화하고, 1972년 12월 27일 제정된 「사회주의헌법」 제 4 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김정일은 후계자로 부상하면서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까지 격상시켰다.

앞에서 밝힌 바와같이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내세워 독재체제를 확립하였을 뿐만아니라, 공산주의 이념을 여기면서 김정일로 공산세습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인민대중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명분을 세워 이른바 정치·도덕적 자주방식으로 인민의 노동력을 무자비하게 동원함으로써 자력갱생식 경제건설을 하고 있다. 「주체사상」을 앞세워 비동맹외교를 강화시킴으로써 이른바 「국제혁명역량」을 강화시켰을 뿐만아니라 중·소의 대북한 영향력을 견제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주체사상」을 내세워 「4대군사노선」을 강행하였을 뿐만아니라, 「남조선」을 美帝의 식민지로 규정,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론」을 이론화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정치, 경제, 외교, 사

회·문화, 통일 등 모든 영역에서 金日成 「神政體制」를 떠받들고 있는 萬病通治藥이며 「傳家の 寶刀」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은 바로 그 「주체사상」으로 말미암아 체제적 한계성에 직면하게 되었으니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人民主體論」을 표방한 「주체사상」은 「首領論」과 결부되어 결국 독재론으로 전락함으로써 오늘날 북한인민은 세계에서 가장 비주체적인 인민이 되었다. 「주체사상」은 인간의 사회·역사적 속성에서 「창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주민을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가장 비창조적인 인간로버트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야말로 인민대중이 지닌 무한한 잠재적역량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뿐만아니라 「주체사상」은 선진기술정보의 수입을 차단시킴으로써 「우리식으로 사는 사회」를 만들었다. 이상의 모든 요인들은 북한경제의 후진화를 가속화시켰다.¹⁴⁾ 경제발전은 선진국에로의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필수조건이다. 그리고 「주체사상」은 정치적민주화를 제동시켰을 뿐만아니라 결국 공산세습체제로 귀착될 수 밖에 없었으며, 국가이익추구에 도움이 안되는 소모성 비동맹외교를 가져왔을 뿐 북한의 국제적 고립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주체사상」이 만들어 낸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은 남북한 민족의 화해를 가로막아 통일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걸림돌이 됨으로써 민족사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었다.

사실 「주체사상」이 제기하고 있는 「인민대중의 주체」는 계급개념이며 민족성원전체의 주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외형적인상과는 달리 우리 민족의 분열을 조장시키는 공산주의 사상이며, 우리민족의 고립화를 자초하는 시대역행적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위장함으로써 특히 남쪽의 좌경·급진세력을 매혹하고

14) 북한의 경제실상에 대해서는 李佑泓 : 「가난의 공화국」, 「어둠의 공화국」이 실감나게 증언하고 있음. 원래 朝總聯系農業技術者인 저자는 농업기술지도를 위한 4年間の 北韓生活體驗과 專門知識을 바탕으로 증언함.

있으나, 진정한 현대적민족주의는 무조건적인 「저항민족주의」이어서는 안되며 민족의 번영과 통일을 보장하는 정신적활력으로써 재정립되어야 한다.

4. 權力構造와 世襲體制

북한의 김일성 「神政體制」와 김정일 공산세습체제는 권력구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헌법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최고 주권기관은 입법권을 행사하고 「주석」을 선거하는 「최고인민회의」이나 현실적으로는 형식적 기구에 지나지 않는다. 1972년 12월 27일 개정된 이른바 「사회주의헌법」과 1980년 10월 13일 개정된 「조선노동당 규약」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지도 밑에,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의 지도 밑에 활동하도록 되어 있다. 김일성은 「조선노동당」의 총비서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을 겸임함으로써 전면적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가. 「朝鮮勞動黨」

(1) 형성과정

북한은 「조선노동당」의 창건일을 1945년 10월 10일로 공식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평양에서 개최된 「조선공산당 서북 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대회」에서 창설된 것은 「조선노동당」의 모체였던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었다. 「분국」은 1946년 4월 18일 미·소공동위원회가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협의대상, 정당·사회단체의 자격문제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자 1946년 4월 말경 「북조선 공산당」으로 개명하였고, 이어서 동년 8월 중국 延安에서 평양으로 돌아온 「조선독립동맹계」를 중심으로 지식층, 소시민층을 망라하고 있던 「조선신민당」과 합당, 「북조선노동당」을 발족하였다. 「북조선노동당」은 1948년 8월 「인민공화국」 정권수립을 위하여 「남조선 노동당」과 「연합중앙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권수립 이후 1949년 6월 30일 남북노동당은 1국 1 당원칙에 따라 「조선노동당」으로

합당하였다.

(2) 指導理念 및 목표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조선노동당 규약」은 김일성 「주체사상」이 당의 지도이념임을 밝히고 있다. 당의 지도이념은 지금까지 6번 개최된 당대회에서 채택된 당 규약에 따라 마르크스·레닌주의로부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조선인민의 혁명전통, 마르크스·레닌주의와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 마르크스·레닌주의와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변천과정을 거쳐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되었다.

그리고 6차당대회에서 채택된 현 당 규약은 “조선노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복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 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주체형의 혁명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당으로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미르크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하며, 오직 김일성 수령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밝히고 있다.

(3) 조직

당규약에 의하면 노동자, 농민, 근로「인테리」를 망라하는 근로인민 가운데 선봉적 투사로 「조선노동당」을 조직한다. 그리고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따라 당을 조직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민주주의는 한낱 장식품 또는 선전적 의미를 가질 뿐이며 실제 강조되는 것은 「중앙집권제」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당조직에, 소수는 다수에, 하급당조직은 상급당조직에 모든 당조직은 당중앙위원회에 절대 복종하여야 한다.

당의 최고지도기관은 원칙적으로 매 5년마다 열리도록 규정된 「당대

회)이다.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는 6개월마다 1회이상 전원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된 「당중앙위원회」가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전원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는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당의 모든 사업을 조직·지도한다. 따라서 모든 정치적 주요결정은 정치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치국안에서의 최고실력자로 구성된 政治局常務委員會에서 결정된다. 1980년 6차 당대회 당시 김일성, 김일, 오진우, 이종옥(정무원총리) 그리고 김정일등 5인으로 출발한 정치국상무위원회는 김일의 사망과 이종옥의 탈락으로 김일성, 김정일, 오진우로 축소되어 김일성·김정일 공산세습체제가 제도적으로 구축되었다.

한편,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당인사 및 당면문제등 당내문제를 토의·결정하며 그 결정의 집행을 조직·보장한다.

그리고 당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는 당군사정책을 토의·결정하며 그 밖에 당중앙위원회는 반당, 반혁명 종파행위 및 당의 유일사상을 지적하는 당원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당중앙위원회 「검열위원회」와 당의 재정경리사업을 검사하는 「당중앙검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지방당조직으로 전국을 거미줄처럼 묶어 놓았다. 도(직할시), 시(구역) 및 군 수준에 중앙당의 당대회와 당중앙위원회에 상응하는 각급 「당대표회」와 「당위원회」가 있고, 1급, 2급 공장기업소에는 「공장당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당의 기층조직은 「黨細胞」로서 공장, 기업소, 협동조합, 각급기관, 단체등 당원 5명이상 30명 미만의 단위에 조직되며, 당원 31명 이상의 단위에서는 「초급당 위원회」가 조직된다. 당세포는 당정책을 직접 수행하는 「전투단위」이다.

(4) 友黨과 外廓團體

사회주의 헌법 제53조는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주주의적 정

당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정치단체와 조직들은 유일당인 「조선노동당」의 지도와 통제를 받고 있다. 물론 형식상의 정당으로 「조선노동당」의 이른바 「友黨」으로서 1945년 11월 3일 창립된 「조선사회민주당」— 1981년 「조선민주당」 제 6 차대회에서 「조선사회민주당」으로 개칭 — 과 1946년 2월 8일 창립된 「天道敎靑友黨」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들은 실제적인 당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대남비난성명 발표 및 남북한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개최 주장 때만 그 존재를 나타내는 이름뿐인 당이다.

그리고 당과 대중 사이의 「引傳帶」이며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으로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등 이른바 당의 외곽단체들이 있다.

이 밖에 「조국통일민주주의 전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재북평화통일축전협의회」등 위장평화통일단체를 비롯하여 “세계평화와 반제·반식민주의 투쟁을 하는 인민들과의 연대성” 표방의 「조선평화옹호 전국민족위원회」 및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 조선위원회」 등이 있고 「조선기독교도 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등 위장종교 단체들이 있으나 이들은 한결같이 「조선노동당」의 혁명노선 선전과 反韓·反美 선전·선동을 하는 「조선노동당」의 下級組織일 뿐이다.

(5) 黨·軍 관계

「조선노동당 규약」 제7장 46조는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계승한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다”고 밝히고 있다.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직속이며 조선인민군 정치국과 그 소속 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북한의 軍은 黨의 軍隊이며 首領의 軍隊로서 사실상 김일성의 個人的 武裝力이다. 따라서 “혁명군대는 오직 수령의 혁명사상, 유일사상으로 무장하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 主權機關과 政權機關

북한정권은 勞農同盟에 기초한 혁명적 인민정권으로서 인민대중을 당과 수령의 주위에 묶어 세우는 가장 포괄적인 引傳帶라는 것이다.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 5기 제 1차회의는 종래의 「인민민주주의 헌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의 수반이며 국가주권을 대표하는「主席」과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를 신설하고 종래의 內閣을 단순한 행정적 집행기관인 「政務院」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1990년 5월 최고인민회의 제 9기 1차회의는 「중앙인민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를 분리·격상시키고 제 1부위원장제를 신설하여 김정일을 앉힘으로써 김정일이 처음 정권기관으로 진출하였을 뿐만아니라 軍을 장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정권기관의 조직과 운영은 「民主主義 中央集權制의 원칙」에 입각하도록 되어 있다. 이 원칙은 상부의 지도와 하부의 창의성을 결합시킨 이상적인 제도라고 선전되고 있으나 上命下服의 형식적인 민주주의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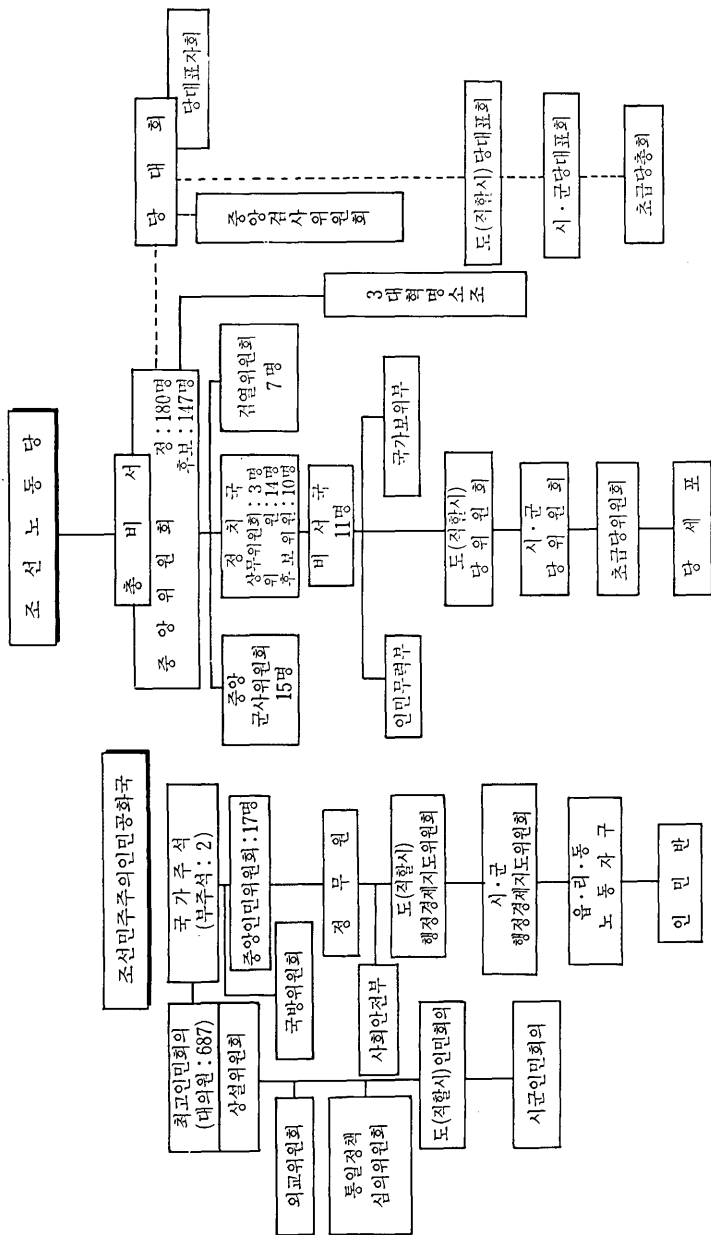
(1) 최고인민회의

헌법상 입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실제로는 형식적 追認機關에 지나지 않는다. 최고인민회의는 인구 3만명에 1명의 비율로 선출되는 임기 4년의 代議員으로 구성된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및 법령을 채택·수정하고 국가예산 및 인민경제발전계획의 승인, 전쟁과 평화에 관한 문제의 결정등 대내외정책의 기본원칙을 수립하며 「주석」을 선거하며, 주석의 제의에 따라 정무원총리등을 선거하는 권한이 헌법상 부여되어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회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가 있으며 휴회중의 업무대행을 위해 「最高人民會議 常設會議」를 두고 있다.

북한 정치 체계



최고인민회의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 따라 기존의 권한의 많은 부분을 中央人民委員會에 이양하여 더욱 형식적인 기관이 되었으나 1989년 11월 20일 외교위원회의 신설에 이어 제 9기 최고인민회의의 구성에서 새로이 통일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하여 의원외교와 대남통일전선 차원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90년에 실시된 9기 대의원 선거에서는 투표율과 찬성률을 다소 낮추고 무소속후보도 당선 시킴으로서 민주적 선거를 과시하려 하고 있으나 노동당이 지명한 단일 후보를 무조건 당선시켜 구성된 최고인민회의는 결코 진정한 민주주의의 대의기관이 될 수 없다.

(2)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

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은 북한의 정권기관이다. 헌법상 「주석」은 국가의 首班으로, 「중앙인민위원회」의 首位로,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절대권력을 행사한다. 「주석」은 4년 임기로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나 무한정 연임이 가능하며 主席有故時 부주석의 지위계승권이 없을 뿐만아니라 「최고인민회의」의 주석 召換權이 없으므로 김일성 1인독재체제를 정당화시키는 제도적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주석」은 「중앙인민위원회」를 직접 지휘·통제하여 운영한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정권기관의 정책의결기관으로서 政令, 決定, 指示등 입법적 기능을 수행할 뿐만아니라 재판 및 검찰기관에 대한 지도권을 가진다. 「중앙인민위원회」는 이른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따라 행정부 쪽의 권한을 장악한 가운데 「주석」의 지도를 받도록 되어 김일성의 1인독재체제의 제도적 장치로 되었다.

「정무원」은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와 통제밑에 행정집행 업무를 담당한다.

정무원총리는 「주석」의 제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소환

된다. 정무원은 경제부서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988년 11월 26일 신설된 「합영공업부」는 합영공업총국으로 개편되어 대외경제사업부에 통합되었다.

(3) 특수기능조직

당규약이나 헌법상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1970년대 초반이래 김일성·김정일의 권력체계 확립을 위한 주요통치 장치로서 특수조직이 있다. 「국가보위부」와 「3大革命小組」등이 대표적인 것이다.

「국가보위부」는 1973년 정무원부서인 「사회안전부」의 기능 중 정치보위부문만을 독립시켜 신설한 기구로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제 7기 제1차회의에서의 중앙국가기관 개편시 그 이름이 「국가정치보위부」에서 「국가보위부」로 개칭되었다, 「국가보위부」는 행정체계에 따라 중앙으로부터 도·시(직할시), 군은 물론 군대조직에 까지 설치되어 정치사찰을 담당하고 있으나 책임자 및 기타 인적구성등은 일체 비밀에 쌓여 있다.

한편, 「3大革命小組」는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이 규정한 사상, 기술, 문화등 3대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1973년 2월 「노동당정치위원회」 확대회의의 결정에 따라 발기되어 각급 생산단위로 파견되었다. 「3대혁명소조」는 노동당일꾼, 국가경제기관일꾼, 대학생·대학교원, 공장기업소의 기술자·과학자 등으로 구성되어 지도대상에 따라 20~50명의 미혼남녀로 구성되었다.

「3대혁명소조」는 인민경제 부문 뿐만아니라 행정, 문화기관 및 학교등 각급 기관에 파견되어 「당중앙」인 김정일의 직접지도 밑에 「사상혁명소조」는 「주체사상」의 보급과 이행을, 「기술혁명소조」는 기술혁신을, 「문화혁명소조」는 문화시설면의 낙후성 개선을 집중지도하고 있는데 노간부들의 보수주의, 경험주의, 요령주의, 기관본위주의, 관료주의를 개조하기 위한 정치사상적 지도와 과학기술적 지도를 결합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나 김정일세습체제의 구축을 위한 체제개편 작업의 일

환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며 실제로 1980년 6차당대회때 3대혁명소조의 전 후 세대들이 대거 입당하고 오늘날 이들이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과 당·정 주요직위를 차지하여 김정일의 권력기반으로 성장하였다.

다. 世襲後繼體制의 構築

공산체제의 결정적 약점중의 하나는 안정적 권력이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김일성은 「神政體制」를 구축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의 「首領論」을 만들었듯이 세습공산왕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1) 혁명계승론-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해 완수한다.— (2) 혈연계승론-수령의 핏줄을 이어 받은자가 후계자로 되어야 한다.— (3) 金日成化身論-김일성의 사상과 이론을 완벽하게 체득한 지도자이어야 한다.—등을 만들어 내었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어느 정치이론에도 없는 것들이다.

金正日은 1973년 9월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공개회의에서 중앙위원회 비서국의 조직 및 선전·선동담당비서로 선출되면서 후계자로 부상되었으나, 본격적인 옹립운동은 1974년 2월 노동당중앙위원회 제 5기 제8차 전원회의 이후 부터였다. 김일성의 實弟 金英柱가 당비서에서 물러나면서 그와 함께 권력의 중심부로 급성장했던 南日, 金東奎(부주석)등이 잠적한 반면 김정일을 옹호하는 林春秋, 吳振宇등의 위치가 강화되며 「3대혁명소조운동」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1975년 1월경부터 김정일의 자질예찬론을 펴기 시작하였고 1977년경 조총련교육자료등 해외선전책자는 「당중앙」이란 別稱대신 김정일이름을 직접 거론, 후계자로 지칭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0년 노동당 제 6 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 군사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공식화되었으며 김일성은 1986년 5월 31일 許鎭이 대독한 김일성 고급당학교 창설 제40주년기념연설 「조선노동당창건의 역사적 경험」에서

노동당의 후계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공언하였다. 김정일은 1990년 5월 제 9 기 제 1 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중앙인민위원회」에서 분리되어 지위가 격상된 「국방위원회」 제 1 부위원장이 됨으로써 당권과 더불어 政權으로 처음 진출하였으며 軍權을 장악함으로써 후계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다.

김정일이 공식적 권력기반은 물론 「조선노동당」이지만 구체적으로는 「萬景台혁명학원」 출신자들과 3대혁명소조원들이 김정일의 친위대로서 실질적인 권력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만경대혁명학원 졸업생들은 대부분 김일성종합대학으로 진학하여 당정고급관리로 등용되고 있으며 김정일은 이 학원 제 1 기생으로 1953년 졸업하였다. 한편, 김정일의 분신인 3대혁명소조원들 또한 20여년이 지나는 동안 당·정·군의 고위직으로 진출하고 특히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성장하여 김정일의 권력기반을 형성하였다.

북한은 김일성 「神政體制」와 맞먹는 김정일의 정치적 카리스마를 조작하기 위하여 (1) 김정일은 김일성동지의 抗日빨치산투쟁의 참모부였던 白頭山 密營에서 백두산정기를 타고 출생하였으며—백두산 일대를 聖域化하고 있으나 김정일은 蘇聯 태생임—(2) 예술의 천재이며—일련의 「혁명가극」은 물론 「安重根 이등박문을 쏘다」, 「돌아오지 않는 密使」 「춘향전」등 신상옥·최은희 작품을 김정일이 지도한 것으로 부각시킴—(3)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가 창조한 주체사상을 계승·발전시킨” 사상의 천재이며 (4) 주체사상담, 인민대학습당등 「조선노동당 시대의 기념비적 건조물」을 세워 혁명의 수도인 平壤을 웅장·화려하게 꾸몄다고 선전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김정일 우상화작업은 꼬리를 이어 그에 대한 호칭을 「당중앙」,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당·국가의 首位」, 「향도의 별」, 「白頭星」으로 바뀌고 「正日峰」, 「正日花」가 생겨났다. 그러나 金日成有故後 집권한 金正日이 집중되어 가는 對內外的 挑戰을 극복하고 김일성과 같은 神政體制를 유지시킬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 政治社會化와 人權

정치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수단은 동서고금의 정치사에서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1) 「정치권위」(Political Authority)의 창출과 (2) 「강제력」의 사용이다. 전자는 정치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승복을 창출해냄으로써 정치체제나 정권에 대한 국민의 저항을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정치체제나 정권에 도전하는 세력을 경찰력이나 때로는 군사력으로 강압적으로 제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자가 고급의 정치라면 후자는 저급의 정치이다. 현실정치는 복잡다양하므로 권위의 창출만으로도 안되며 강제력만으로도 안되므로 일반적으로 양자를 적절히 배합하고 있으나 권위의 비중이 높을수록 훌륭한 정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치권위는 왕권형 권위등 여러가지 형태를 갖출 수 있으나 크게 보아 (1) 독재형 권위—나치, 무쏘리니 등 파쇼적 권위 및 공산형 권위—와 (2) 민주형 권위로 양분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치권위를 창출하거나 강제력을 발동하여 정치체제 및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기반을 정착화시키는 과정을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라고 말하며, 정치사회화는 주로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김일성 「神政體制」로 표현되는 특이한 북한정치체제가 형성되기까지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같이 김일성 「抗日빨치산鬪爭史」의 날조와 「主體思想」의 조작등 정치권위를 만들어내는 한편, 북한정권수립 과정에서의 소련 군정정책과 무자비하게 진행된 숙청등 강제력이 동반되었다. 이와같은 政治社會化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김일성 「神政體制」를 구축하는 정치사회화 과정의 부산물로서 북한정치는 이제는 세계인권기관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人權問題를 만

들어 냈으므로 이를 아울러 살펴 보기로 한다.

가. 政治權威의 造作

김일성은 1977년 9월 5일 발표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남은 사회가 남겨놓은 사상·문화적 낙후성을 없애고, 모든 사람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육성할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다. 공산주의 혁명사상에 기초하지 않은 지식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하여 북한정치교육의 목적이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만드는 데 있음을 명백히 밝혔다. 그런데 보편적 의미의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만들어 내기 위한 교육은 「주체사상」의 체계화와 병행하여 김일성 唯一思想體系에 대한 신앙화된 충성심교육으로 모습을 바꾸게 된다. 이를 위해 로동신문은 “당의 유일사상, 혁명전통, 당정책교양을 더 한층 강화하여 수령의 친위대·결사대로 준비시켜 나아가야하며, 언제, 어떤 환경에서나 수령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워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정치사상교육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선전기관들은 “우리 인민이 가지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에서 根本核을 이루는 것은 수령을 모시는 것이며, 그를 옹호·보위하는 사업을 떠난 조국보위란 무의미한 것이며, 진정한 애국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길이 간직하고 그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해야 한다. 어떤 역경속에서도 그의 교시를 무조건 접수하고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정열과 헌신성·혁명가적 기풍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金日成 神格化 및 共產王朝 건설에 정치사상교육의 목적이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운동이 본격화 되기 시작한 것은 반김일성세력을 숙청하고 1인 지배체제의 기반을 구축한 1958년 부터였다. 김일성은 최상위의 권위와 능력을 보유한 탁월한 영도자로,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마르크스·레닌을 능가하는 사상가일 뿐 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학, 예술의 탁월한 이론가로 묘사되고 있다. 김일성 가문을 「혁명가문」으로 내세우기 위해 선조와 외가, 친척등이 공식역사서에서 항일혁명투사등으로 날조되었으며, 「열사능」이 축조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업적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내외에 선전하기 위해 주요도시나 명승지에 각종 우상화 상징물을 건설해 오고 있다. 이와같은 상징물은 혁명박물관과 기념관과 같은 건축물외에 주체사상탑과 개선문과 같은 정치적 상징물을 비롯하여 사적지, 전적지 또는 동상(약 3만개의 석고상 포함), 비석등으로 대별되며, 이러한 유형의 건조물들은 각 지방에도 갖추어져 있다. 평양시내의 대표적인 정치적 상징물은 인민문화궁전, 평양학생소년궁전, 주석궁, 개선문, 주체사상탑, 인민대학습당 등이다. 그리고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 항일빨치산 투쟁장소로 왕재산일대와 백두산일대 등이 완전히 성역화되었다. 김일성과 김정일생일을 가장 “경사스러운 명절”로 만들었으며, 김일성은 10살도 채 못된 나이에 벌써 일본헌병들을 혼내주었으며, 술방울로 총알을 만들고, 손 한번만 쳐들면 순식간에 공장이 일어서고 노적가리가 솟아나고, 앞은땀이도 서게 만드는 신통력을 지녔으며, 嚮導星의 빛발이 한번 금을 짚 굶고 지나가면 그곳이 금방 옥토로 변한다는 것이다.¹⁵⁾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는 김일성 가계에 대한 우상화로 비약된다. 즉, 증조부 김응우는 1866년 대동강에 나타난 미국군함 서만호를 민중을 지휘하여 방화한 반미애국영웅으로, 조부 김보현과 조모 이보익은 민족적 절개를 지키면서 자손들을 탁월한 혁명가로 키운 反日帝 愛國의 귀감으로, 아버지 김형직은 3·1운동을 주도한 독립운동가로, 어머니 강반석은 反日부녀회를 결성·지휘한 애국자이며 여성해방운동가로 서슴없이 날조되고 있

15) 김일성·김정일에 우상화 實相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北韓의 實相」 참조.

다. 이밖에도 김일성의 삼촌 김형권은 혁명가, 동생 김철주는 소년 반일 선봉대로, 그의 전처 김정숙은 불굴의 혁명전사—최근 김정일 우상화를 목적으로 「구호 나무」에 새겨졌다는 문구를 위조하여 김정숙장군으로 호칭—로, 외조부 강양육을 비롯하여 외가 전부가 반일투사로 날조되고 있다.

이같은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는 김정일어로의 세습후계체제가 굳어지면서 김정일 우상화로 계승된다. 옛날에는 수령이 축지법을 쓰셨는데 오늘날에는 주체의 별님(김정일)이 땅을 넓히는 토지확장술과 시간을 주름잡는 縮時法을 쓴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건전한 인간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김일성·김정일 우상화가 통용되고 있는 것은 이른바 「북한사회에서의 人間改造」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증이기도 하다. 復古主義, 形式主義, 資本主義, 修正主義 등 온갖 잡사상을 극복하고 人間改造를 이룩하기 위하여 집단의 원리,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의 원리, 공개적 賞罰의 원리, 통제와 자제의 원리, 조직화의 원리 등 온갖 정치사상교육방법이 총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에 따라 黨과 각종 대중조직—社勞靑, 직업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등—을 통해 매일 2시간씩 정치사상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산권 전반이 개혁·개방의 물결속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체제수호를 위하여 이른바 「조선식 사회주의」를 표방, 정치사상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국민의 사상적 동요 방지에 혈안이 되어 있다.

나. 強制力의 使用

김일성·김정일 「神政體制」는 앞에서 밝힌 일련의 정치사회화 과정 뿐만아니라 철저한 주민통제 등 강제력의 발동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주민통제를 목적으로 사회안전부, 국가보위부, 국가검열위원

회, 사회주의 법무생활지도위원회등 복잡한 2중, 3중의 사찰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표적인 것은 國家保衛部와 社會安全部이다.

국가보위부는 1973년 종래의 사회안전부 내 정치보위부분만을 분리·독립시켜 조직된 정치사찰 전담기구로서 이른바 反黨·反體制 음모자의 색출, 검거와 일반주민들의 상시동태를 파악하여 유사시 변절자와 지지자를 구분하기 위한 사상사찰을 전담한다. 특히,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따른 남북한접촉과 때를 같이 할 뿐만아니라, 마침 1973년 부터 후계자로 부상한 金正日의 당권장악을 위한 통제강화의 필요성으로 국가보위부를 서둘러 조직하였다.

한편, 사회안전부는 북한사회의 일반 치안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나, 가장 중요한 실질적 임무는 노동당의 독재를 강화하고, 사회주의 건설에 장애가 되는 일체요소를 적발·제거하여, 궁극적으로 전체 주민을 김일성 1인 독재체제, 나아가서 김정일 후계체제에 순응토록 만드는 주민통제기능을 주임무로 하고 있다.

북한은 이상과 같은 사찰기관 이외에 방대한 주민 監視網을 운영하고 있는바, 대표적인 것이 「人民班組織」과 「5戶擔當制」이다. 인민반은 북한주민들을 보통 15~20세대로 묶어 놓고 반장, 위생반장, 선동원등을 두어 감시·통제한다. 그들은 반원의 사상동향을 감시할 뿐만아니라, 학습지도, 세뇌교육, 반원의 동원, 관혼상제의 주관등 일상생활을 파악·지도하는 막중한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소등 직장간부의 경우에도 가정생활에서는 반장의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인민반은 월 2 회 생활총화집회를 갖고 어린이 양육문제, 노력동원, 청소동원, 공공질서 유지, 사회사고, 목욕 및 이발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토론과 자아비판을 한다. 특히 인민반에는 국가보위부와 사회안전부의 비밀 감시원(정보원)이 배치되어 「불순계층」의 주민동태를 내사·보고하고 있다.

한편, 「5戶擔當制」는 1957년 5월 30일 「반혁명분자들과의 투쟁을 쏠

黨·全人民的으로 전개할 데 대하여」라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당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북한의 전세대를 5戶씩 나누고 그 속에 숙성분자(노동당원) 1家口씩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의 세밀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 철저히 감시·통제하는 정치조직이다.

그리고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수차례에 걸쳐 成分檢討事業을 실시하여 주민들을 성분별로 엄격히 구분하여, 성분에 따른 계층별 직종·직위를 부여하고 있다. 북한은 1958~65년 동안 북한주민들의 사상에비조사를 마쳤고, 1966~70년에는 철저한 사상검토를 끝냈으며, 1972~74년에는 남북대화에 따른 住民了解事業의 일환으로 전주민을 반신반의자, 변절자, 믿을 수 있는자로 분류한 바 있고, 1980~83년에는 金正日의 직접지시에 따라 공민증을 대조 및 재교부함으로써 불순계층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북한주민들을 그 충성도에 따라 27% 상당의 핵심계층, 45% 상당의 기본계층, 28% 상당의 복잡계층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또 다시 51개 그룹으로 세분하여 지극히 위험스런 계층은 집단수용소에 수용·격리시키고 있다.

성분을 구분하는 기준은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이다. 북한사회의 지배계층인 「핵심계층」은 혁명전사 유가족, 피살·전사자 가족, 당행정 간부 가족, 군간부 가족으로서 당, 정권기관, 군의 간부로 등용되고 진학, 승진, 배급, 거주, 의료등에서 특혜조치를 받는다. 사회주의체제의 기본계층—동요계층—은 일반근로자, 농민 및 일반사무원, 과거중소상인, 수공업자, 하위접객업자, 중농, 단신월북자들로서 각종 하급간부 및 기술자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나 유사시 동요가능 계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적대계층—복잡계층—으로서 구지주, 자본가와 그 가족, 월남자 가족, 日帝공직자 가족, 종교인과 그 가족, 親日, 親美행위자, 포로 가족, 사회도덕적 범죄자 가족 등을 말한다. 이들은 有害重勞動에 종사하고 진학, 입학, 입당이 봉쇄되어 있다. 金日成은 그의 저작

집에서 “사람의 성분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지금 혁명활동에 적극 참가하고 있는가 어떤가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경쟁적 충성심을 유발시키는 수단으로 성분구분을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社會逸脫의 예방이나 통제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경제적 고통을 주는데 착안하고 있다. 북한은 이른바 사회주의적 개조를 통하여 전재산을 당과 수령이 소유함으로써 모든 주민을 김일성 독재체제에 예속된 사실상의 노예로 전락시켰다. 수령과 당은 직장의 배치, 승진, 이동, 보수, 배급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장악함으로써 광범한 주민층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식량, 의류, 주택정책에서 「핵심계층」에 특혜를 주고 「적대계층」에 경제적 불이익을 줌으로써 북한주민들이 한결같이 체제에 순응하고 충성을 바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뿐만아니라 천리마운동(1956), 속도전(1974),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1975), '80년대 속도창조운동등 과중한 노동력 동원운동을 계속적으로 벌임으로써 체제를 반대할 수 있는 정신적 여유를 박탈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평등사회」, 「계급없는 사회」라는 주장과는 달리 당정관료들을 중심으로 특권층이 형성되고 특정지역민(평양시민)등을 중심으로 귀족계급이 형성됨으로써 대부분의 주민과 구별되는 「신홍 붉은 귀족계급」이 등장하였다.

다. 人權問題

김일성 독재체제와 김정일 세습후계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일련의 政治社會化 과정은 결국 북한사회를 인권 불모지대로 만들었다. 북한당국은 대내외 정보교류를 차단시킴으로써 국제적 인권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왔으나, 마침내 국제인권기관은 북한의 인권사항에 관한 공식보고서

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¹⁶⁾ 북한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그리고 「전쟁희생자를 위한 제네바협정」등에 가입하여 국제적 조사활동을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호를 폐쇄하여 왔으나 국제적 감시의 눈길을 가릴 수 없었다.

북한당국은 주민의 기본인권과 자유를 박탈하기 위한 포괄적인 제도를 만들었다. 국경과 주민들의 주변에 공포의 벽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을 봉쇄시켰다. 북한주민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에 100% 참석하여 사전 지명된 단일 후보에 100% 찬성투표를 하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궁극적으로 김일성으로 부터 하달된 안건을 한번도 부결시킨 예가 없다.

북한의 인권사항을 상징적으로 대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정치범 집단 수용소이다. 대표적인 정치범 수용소는 이른바 「특별독재대상구역」이다. 적대계층중에서도 북한의 권력층이 가장 우려하는 「위해분자」 즉, 反黨宗派分子, 반당반혁명분자, 악질지주, 친일파, 종교인등, 특히 黨政高位간부로 있다가 숙청된 자를 수용하는 특수지역이다. 1982년 4월 11일자 뉴욕타임즈는 8개의 특별독재대상구역에 반체제인사 10만 5천명 정도를 수용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으나, 최근 함남 덕천의 「23호 관리소」, 함남 개마고원지역의 「5호 농장」, 평남 북천군 광산지역의 「17호 관리소」, 평남 개천군의 「개천탄광관리소」등 4개의 특별독재대상구역이 확인됨으로써 총 12개소에 15만명 이상이 수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기철조망과 지뢰밭으로 포위된 산간벽지에 완전히 격리되어 강제노동과 사상학습에 시달리고 있다. 이 밖에도 반혁명·적대분자를 이주시켜 감시하는 「149호 대상지역」을 비롯하여 각종 격리·수용시설이 있

16) Minnesota Lawyers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ittee와 Asia Watch가 공동으로 작성한 1988년판 「Human Rights in D.P.R.K」 북한의 인권, 국토통일원.

다.

다음,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북한형법의 反人權의 性格이다.¹⁷⁾ 북한은 1950년 3월 3일 蘇聯의 스탈린刑法을 모방하여 그들의 형법을 제정·시행해 오다가 1974년 12월 19일 사회주의혁명을 완수하고 유일독재체제와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형법을 개정하여 1975년 2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면서 개정형법을 비밀로 취급하여 북한주민은 물론 그들의 동맹국에게도 숨겨 오고있다. 북한의 신형법은 구형법에 비하여 반혁명분자를 엄단하기 위한 반혁명범죄의 종류와 내용을 확대하면서, 그 처벌을 대폭 강화, 대부분 사형 및 전 재산 몰수로 극형화하였으며, 형법의 편제도 반혁명범죄를 앞에 내세우고 절도죄, 상해죄등 기타 일반형법상의 범죄를 뒤에 취급하고 있다. 북한형법은 범죄의 類推解釋制度和 형벌의 溯及效를 인정하고 있으며, 조문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근대 형법의 기본원칙인 罪刑法定主義에 위배될 뿐아니라 형벌이 가혹하고 남한을 「원수」라고 규정하면서 남북왕래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같은 북한형법의 비민주성, 반인권성, 반통일성을 검토하면 근대 문명국가의 형법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간다. 북한형법교과서는 형법이론의 전개나 연구·검토는 거의 없고 각 法條의 해설 머리 부분에 김일성교시를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어 형법학 그 자체도 유일체제하에 있다. 북한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반혁명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 제도의 대내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반혁명범죄, 사회주의 건설을 방해하는 반혁명범죄, 조선민족해방을 반대하는 반혁명범죄, 그리고 반혁명범죄와의 투쟁을 방해하는 범죄 등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처벌은 사형과 전 재산 몰수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전근대적인 북한의 형법은 김일성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을뿐 북한주민의 인권을 유린하여 수많은

17) 북한형법의 실상, 북한연구소, 참조.

정치범수용소를 만들어 내었다. 특히 「특별독재대상구역」에는 전 총리 이근모, 전부총리 홍성룡, 김경련, 전부수상 김창봉, 박금철, 전 대남사업총국장 허봉학 등도 수용되어 있다고 하니 김일성독재체제와 김정일세습후계체제가 강요한 북한주민의 인권유린 상황을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6. 對外政策과 宣傳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이 수립된 후 43년이 흘렀다. 정권 수립후 43년이 흐른 지금 북한정권은 (1) 정치적으로는 金正日 후계체제의 강화 (2) 경제적으로는 인민생활의 향상을 위한 경제발전 (3) 그리고 「남조선 공산화를 위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실현이란 기본적 정책과제를 안고 있다. 북한은 김일성의 高齡化에 따라 1973년 이래 김일성·김정일 공산세습체제 구축을 기도하여, 1980년 조선노동당 제 6 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을 신설된 노동당 정치국상무위원회 위원으로 앉혔으며, 1986년 4월 30일 「김일성고급당학교」 창설 제40주년 기념 “조선노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이란 김일성연설(許談 대독)에서 “조선노동당의 후계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정일은 1990년 제 9 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개편된 「국방위원회」에서 제 1 부위원장직을 확보함으로써 정권기관을 장악하기 시작, 1990년대 중반, 김일성의 퇴진과 동시에 북한정권을 장악할 준비를 완료한 상태에 있다.

한편, 북한은 최근 남북한간 경제발전의 격차를 강력히 의식한 나머지 1984년 「合營法」을 제정한 이래 대외개방경제정책을 부분적으로 시도하면서도,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다”는 명분밑에 노동력 동원 중심의 이른바 자력갱생식 경제건설에 집착하고 있다. 공산권 전반에서 노도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을 받아들일 경우 김일성의 「神政體制」가 위협받을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다. 북한은 경제발전을 위한 탈출구를 찾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서 對日接近을 선택하게 된다.

그리고 북한은 전한반도의 공산화를 위한 현단계 전략으로서 이른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견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른바 「3大革命力量」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김일성은 1965년 4월 14일 인도네시아

를 방문, 알리 아르함 사회과학원에서 행한 연설에서 “(1)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 하여 혁명기지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며 —「북반부의 사회주의혁명역량」—, (2) 「남조선」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며 —「남조선 사회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역량」—, (3) 조선인민과 국제혁명역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國際革命力量」”—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 없는 북한정권당국의 기본의식으로서 이들 「3大革命力量」이 유기적 보완관계속에서 강화되었을 경우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 —공산화통일—가 달성된다는 것이다.

이들 3대혁명역량 중 국제혁명역량을 강화시키는 수단이 대외정책과 대외선전이다.

가. 對外政策

북한정권 수립이래 지난 43년 동안 북한의 대외정책은 정세의 변화에 따라 中蘇中心에서 非同盟圈과 自由圈으로 範域을 확대시켜 왔으며, 내용면에서는 군사·경제외교에서 경제·통일외교 중심으로 변질되어 왔다.

(1) 對中蘇關係

정권수립 과정과 6·25 남침전쟁까지의 북한의 對外關係는 對蘇 일변도였다. 앞에서 밝힌 바와같이 김일성은 「東北抗日聯軍」의 일원으로서 「抗日빨치산鬪爭」을 하다가 1940년말, 1941년초 일본군의 토벌에 쫓겨 蘇領 하바로브스크지역의 비야르크로 피신, 蘇軍88특별여단에 편입되었다가 해방과 더불어 平壤에 들어와 스탈린의 선택으로 執權하였으므로 북한정권은 독립국가다운 對外政策을 추진할 수 없었다. 다만 김일성은 1949년과 1950년 초 스탈린을 찾아가 6·25南侵戰爭을 모의했던 바, 「후르시초프」는 回顧錄에서 “한국전쟁은 스탈린의 작품이 아니라 金日成의 작

품”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김일성이 독자적으로 6·25남침을 감행한것은 아니며, 결국 스탈린의 對極東政策을 수행하기 위한 하수인노릇을 한 것이다.

그런데 「애치슨宣言」을 통하여 한반도를 美극동방어선에서 배제시킨 미국이 예상을 깨고 유엔軍의 이름으로 참전하자, 戰勢는 역전되어 유엔軍은 38度線을 넘고, 북한정권의 운명은 경각에 이르렀다. 中共軍이 참전하여 戰線이 교착된 상태에서 蘇聯은 「말리크」駐유엔大使를 통하여 休戰問題를 제기하였다. 1953년 스탈린의 사망과 더불어 그해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38線대신 休戰線이 생김으로써 우리 민족의 비극적 분단역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김일성은 韓國戰爭을 계기로 미군이 참전하자 전쟁지원에 소극적으로 되었던 소련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1949년 대륙공산화 직후의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참전하여 血盟關係를 맺은 중국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毛澤東의 장남, 모안녕의 묘는 지금도 북한땅에서 「朝中親善」을 대변하고 있다.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는 1953년 스탈린의 사망을 계기로 더욱 멀어졌다. 스탈린 사망후 권력투쟁과정에서 집권한 후르시초프는 주지하는 바와같이 1956년 제20차 소련공산당 대회에서 「戰爭可避論」을 바탕으로 동·서진영간의 平和共存論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修正主義라고 비판하고 나선 中國과 이념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후르시초프는 평화공존론을 제기하면서 스탈린格下運動을 벌였다. 스탈린格下運動의 波長이 북한땅에도 밀려와 蘇聯派·延安派가 중심이 되어 이른바 「8月宗派事件」이 일어났음은 앞에서 밝힌바 있다. 이때 김일성은 宗派分子로 몰아 蘇聯派·延安派를 숙청하였으며, 활용한 무기는 「主體思想」이었다. “마르크스·레닌主義를 조선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는 「主體思想」은 결국 反蘇獨自路線으로서 “마르크스·레닌主義를 中國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였다”고 하는 毛澤東思想과 이념적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즉, 후르시초프의 平和共存論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은 理想的 同志가 된 셈이다.

그 후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졌다. 1961년 한국에서 5·16군사혁명이 일어나자 김일성은 中國과 蘇聯을 방문하여 각각 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 — 군사동맹조약 — 을 체결하였다. 특히 김일성은 1961년 7월 10일 체결된 「朝·蘇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을 믿었으나, 1962년 「쿠바事態」에서 소련의 無能이 드러나고, 같은 해 「캐쉬미르」지역 영유권 문제를 계기로 발단된 「中·印國境紛爭」에서 소련이 印度를 지원함으로써 中蘇共產大國의 분열이 표면화되자 朝·蘇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에 북한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 이에 북한은 1962년 12월 당 중앙위원회 제 4기 제 5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된 國防力強化問題」를 제기하고 “인민경제의 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國防力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國防에 있어서의 自衛」원칙을 결의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이른바 「4大軍事路線」을 표방하기에 이른다. ① 全人民의 武裝化 ② 全國土의 要塞化 ③ 全軍의 幹部化 그리고 ④ 全軍의 現代化를 내용으로 하는 4大軍事路線은 이를테면 「북한식 자주국방 의지」의 표현으로서 「國防에 있어서의 自衛」라는 「主體思想」의 指導指針과 脈을 같이한다. 「主體思想」이 이념적으로 反蘇獨自路線이라면 「4大軍事路線」은 군사적으로 對蘇 自主路線이다.

「4大軍事路線」에 따라 소련에 대한 군사적 의존이 상대적으로 감소되면서 동시에 북한의 대소관계가 멀어졌다. 이에 따라 소련으로 부터의 經濟援助마저 끊어지면서 북한은 마침내 제 1차 7개년 경제계획(1961~1967)에 차질을 가져와 3개년을 연장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7개년계획에 차질이 온것은 「4大軍事路線」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조달도 중요 원인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북한의 對蘇關係가 소원해지면서 북한의 對中關係는 상대적으로 밀착화되었다. 원래 김일성의 「東北抗日聯軍」으로서의 「抗日

빨치산鬪爭」의 무대는 滿洲地域이었다. 滿洲地域은 지리적으로 韓半島와 連接되어 있을뿐만아니라, 북한은 중국과 대부분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 朝·中兩國은 전통적으로 같은 儒敎文化圈이었으며, 같은 共產主義發展段階에 있다. 특히 中國은 북한을 滿洲地域을 방어하기 위한 완충지역으로 간주하여 韓國戰爭에 참전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朝·中兩國은 血盟關係, 唇齒關係로 되었음은 앞에서 밝힌 바 있다. 朝·中兩國은 한때 「白頭山領有權 紛爭」으로 관계가 弛緩된 적이 있었으나, 앞에서 밝힌 이유등으로 기본적으로 密着關係를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런데 이와같은 朝·中密着關係는 中國이 1978년경부터 「4大現代化政策」을 추진하기 위한 實用主義路線에 따라 對外開放 經濟政策을 추구하면서 美·日 등 이른바 帝國主義국가와 손을 잡으면서 자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북한에 있어서 중국은 「남조선」에서 美帝를 몰아내기 위한 血盟의 同志였으나, 「經濟特區」를 만들어 帝國主義資本을 끌어들이고, 「人民公社」를 「鄉鎮制」로 대치시키고 資本主義의 市場經濟原理를 도입하는등 修正主義路線으로 기울뿐만 아니라, 對日, 對美修交에 이어 「남조선」과 경제관계를 가속화해 나아가자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점점 더 서먹해졌다. 그러던중 김일성과 김정일은 1982년과 1983년 각각 중국을 방문하여 김정일후계문제를 양해받는등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다짐하였으나, 김일성은 중국에서 돌아오자마자 實用主義路線으로의 경제정책의 전환을 종용하는 중국의 뜻과는 달리 “우리는 우리식으로 살자”고 표방하면서 개혁·개방정책을 거부하고 「자력갱생」을 바탕으로한 敎條主義路線을 고수하게 된다. 그러나 김일성은 1984년 5월 공식적으로 23년만에 이루어진 蘇聯방문과 뒤이은 東歐共產圈 방문을 계기로 특히 東歐共產圈의 경제발전상에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1984년 9월 8일 中國의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을 모방한 「合營法」을 채택하여 부분적인 대외개방경제정책을 시도하기에 이르러 드디어 변화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1984년 공식적으로 23년만에 이루어진 김일성의 소련방문은 오

랜 우여곡절 끝에 북한과 소련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다. 소련은 미그 23, 미그 29, 스커드 미사일 등 최신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은 소련붉은기 태평양함대에게 나진항의 入港權을 부여하였다. 소련의 對北韓 군사지원이 강화되었을 뿐만아니라, 뒤이어 소련을 방문한 당시 강성산정무원총리와 44만Kw 원자력 발전소 4기의 건설협정을 체결하는 등 경제지원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북한·소련간의 밀착관계는 1985년 고르바초프의 등장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른바 「新思考」에 입각하여 동·서냉전체제를 종식시키고 동구공산권의 혁명적 변혁을 몰고 온 고르바초프는 시베리아경제개발을 경제개혁·개방정책의 한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하였으며, 마침내 韓·蘇修交를 단행하였다. 한·소수교는 이른바 「두개의 조선정책」으로서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바탕을 둔 북한의 「하나의 조선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소련은 매스컴과 전문가의 힘을 빌어 「김일성抗日빨치산鬪爭史」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韓國戰爭이 김일성과 스탈린이 공모한 남침전쟁임을 밝힐뿐만 아니라 對北韓交易에서 적용되어 왔던 경제적 특혜조치를 중단시키는 등 남북한 평화공존관계를 수용하도록 북한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북한은 소련이 한반도 분단책임이 있음을 처음으로 추궁하면서 오늘날 美帝와 공모하여 「두개조선 조작책동」에 매달리고 있다는 外交備忘錄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공산권전반을 노도와 같이 휩쓸고 있는 改革·開放의 물결속에서 정치개혁을 거부하는 정치이념적 동지로서 다시 中國쪽으로 기울어지면 서, 다른 한편으로는 소련의 군사·경제지원이 단절되어 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제국주의세력으로 규탄해 온 日本과 修交의 길을 모색하는 혁명적 정책전환을 하기에 이른다.

(2) 對非同盟圈 및 自由圈外交

북한은 이른바 「남조선 혁명」의 기본성격을 「反帝·反팃쇼人民民主主

義革命」으로 규정하고 우선 「남조선」을 美帝의 「식민통치」로 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당면과제로 설정, 이를 위하여 국제적 통일전선을 이룩한다는 전략적 발상에서 이른바 「빨럭 불가담국가외교」를 강화하여 왔다. 이를 위한 이론적 뒷받침으로서 북한은 「主體思想」의 연장선위에서 세계를 지배주의정책을 추구하는 세력과 자주성을 옹호하려는 세력으로 양분하고 있다. 이는 세계를 자본주의국가, 공산주의국가 그리고 식민지로 3분하는 고전적인 공산주의 국제관과 구별되며, 鄧小平의 「第3世界論」과도 구별되는 2分論이다. 덩소평은 1974년 4월 9일 유엔자원문제 특별총회에서 “사회제국주의의 등장으로 사회주의 진영은 존재하지 않으며, 자본주의의 불균등한 발전으로 서방제국주의 진영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의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 제 1 세계,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의 후진국이 제 3 세계, 그리고 이들 사이에 낀 선진국이 제 2 세계라고 말한바 있다.

북한은 “지배주의 정책을 추구하는 국가중에는 자본주의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나라도 있다”고 하여 사실상 소련의 팽창정책을 공격함으로써 비동맹운동의 이념적 순수성을 강조하는듯이 위장, 비동맹운동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광분하여왔다. 그리하여 북한은 1960년대 초반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등지의 戰前식민국가들이 대부분 독립을 쟁취하여 국제정치적 세력권으로 등장함을 계기로 對中立圈外交를 강화하여 마침내 1975년 8월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개최된 비동맹외상회의에서 비동맹회의 정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된다. 이 때는 마침 越南共產化의 餘勢가 비동맹운동의 분위기를 지배했던 시점으로서 한국의 비동맹권 가입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여하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 해 제 30차 유엔총회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관한 상호모순된 동서방측 결의안이 동시에 통과됨으로서 유엔기능의 한계성을 드러내었다. 서방측 안은 “모든 직접당사자가 休戰協定代案 및 항구적 평화보장을 지향하는 협상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고, 공산측 결의안은 “한국을 배제시키고 휴전

협정의 실제적 당사자 — real parties — 인 미·북한만이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였다. 이 이질적인 동·서방측 결의안이 동시 채택됨을 계기로 한반도문제는 유엔총회에 상정되지 않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마치 공산측안만이 가결된 듯이 선전·선동하면서 주한미군의 철수와 대미 평화협정의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親善協會, 金日成研究小組, 連帶性委員會 등 각종 친북 단체를 조직하여 「주체사상」을 전파시킴으로써 反韓統一戰線의 형성에 혈안이 되어 있으나, 비동맹운동의 성격이 점차 정치운동에서 경제건설 중심운동으로 전환되면서 북한의 입김은 먹혀들지 않기 시작하였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대부분 국가들이 독립쟁취단계에서 국가 경제건설단계로 접어들면서 韓國의 경제발전모델에서 교훈을 찾으려함으로써 북한의 「블럭불가담외교」는 사실상 설자리를 잃고 말았다.

한편, 북한은 1960년대의 비동맹권외교에 이어 1970년대에 들어와 對自由圈外交에 눈을 뜨게 된다.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국방문, 미·중국 관계개선, 그리고 미·소간 平和共存關係의 수립등에 자극을 받아, 북한은 1971년 11월 조선노동당 제 5기 3차 전원회의에서 「당면한 제문제의 전술적전환」을 결의함으로써 對自由圈外交를 본격화시켰는바, 대상 국가의 저명인사에 대한 개별초청 및 방문을 주내용으로 한 「人民外交」로 부터 시작하여 通商代表部 및 總代表部를 설치함으로써 우선 半政府的次元의 관계로 발전시킨 다음 公式修交로 들어가는 방식을 주로 활용하였다.

북한의 對自由圈外交는 (1) 西歐地域에서의 무역대표부설치및 對日民間貿易 확대등 경제적 동기와 (2) 對「朝總聯」工作 「平和協定」 체결을 위한 對美接近 시도등 韓國孤立化가 정책적 동기였다.

특히 북한은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남북한간 경제발전의 격차를 의식하기 시작하였으나 中·蘇로 부터의 經援이 여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마

침내 西歐 및 日本과 準政府급 경제교류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으며, 1984년 9월 8일 「合營法」제정 이후는 서방선진국의 對北韓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기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구조적 취약성 및 국내경제 체제의 改革을 동반하지 않은 對外開放經濟政策의 파행성 등으로 북한의 대서방경제 접근시도는 外債累増만을 가속화시켰을 뿐 실패로 끝났다. 이와같이 북한경제는 국제경제면에서 사실상 파산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극한상황에서 日帝35년과 戰後46년에 대한 배상명목으로 일본으로부터 경제적지원을 획득하려는 것이 對日修交를 서두르는 근본이유이다.

한편, 북한은 北京을 중심으로 참사관급회담을 십여차례 갖는 등 對美接近을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 이것은 對美平和協定을 체결하여 駐韓美軍을 철수시키려는 일관된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함이다. 북한은 休戰協定을 대치시키기 위한 平和協定체결을 南쪽에 제의해 오다가 1973년 당시 키신저美大統領 安保擔當特補와 레독토 越盟共產黨 政治局員 사이의 비밀교섭으로 「파리越南平和協定」을 체결하여 駐越美軍이 철수된 사실에 자극을 받아, 1974년부터 對美平和協定체결을 고집해 오고 있다. 북한은 한국이 1953년 休戰協定 서명 당사자가 아니므로 平和協定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休戰協定은 유엔軍司令官 클라크 大將을 일방당사자로 하고 朝鮮人民軍 司令官 김일성과 中國人民支援軍 司令官 彭德懷를 타방 당사자로 하였다. 그런데 유엔軍司令官 이름으로 서명하였다고 하여 美國만이 서명당사국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한국은 「大田協定」에 따라 유엔軍의 일원으로 休戰協定에 서명한 결과가 된 것이다. 韓國軍을 배제시키고 休戰이 성립될 수 없음은 不問可知이다. 한반도 군사문제의 제 1 차적 당사자는 좋든싫든 南北韓이다. 북한은 한국을 국군통수권을 갖지 못한 美帝의 植民地로 매도하여 對南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의 명분을 확보함으로써 越南型 共產化 統一을 기도하고 있으나, 南北韓을 직접 당사자로한 한반도 평화정착이 실현될

때 민족통일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꾸고 南北韓間 不可侵宣言, 北韓·美國間 平和協定체결의 헛된 고집을 하루빨리 버려야 할 것이다.

나. 宣 傳

(1) 공산정치와 선전

북한 정치편을 마무리하면서 宣傳, 煽動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공산주의에 있어서 정치는 한마디로 宣傳·煽動이다. 물론 인류의 근대정치사에 있어서 선전문제를 본격적으로 처음 제기한 것은 나치·히틀러의 정치적 상징조작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宣傳相 게벨스로 부터였다. 그의 宣傳理論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레닌이다. 레닌은 자본주의가 발달되면 필연적으로 사회주의혁명이 일어난다는 마르크스의 이른바 「社會革命論」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주의가 발전되지 못한 後進國家인 帝政러시아에서 혁명을 유발시키기 위한 불가결의 수단으로서 政治心理戰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며, 그 정치심리전의 手段이 바로 宣傳·煽動이라고 생각하였다. 레닌은 1900년 流刑地 시베리아를 탈출, 제네바로 가서 플레하노프의 「勞動解放國」에 가담하는데, 거기서 그는 각종 혁명단체를 결합, 黨을 만들기 위한 준비로서 新聞 「이스크라」—불꽃—를 편집하고, 이것을 러시아國內로 반입·유포시켰는데 한마디로 레닌의 혁명활동은 신문없이는 불가능했다. 신문은 바로 宣傳·煽動手段이다. 「이스크라」이외에도 「前進」, 「新生活」, 「波濤」, 「프롤레타리아」등 많은 신문이 레닌의 지도로 발간되었으며, 특히 레닌이 1912년 스탈린에게 명령하여 「프라우다」를 창간한 것은 특기할 일이다. 그런데 오늘날 북한에서도 例外가 아니지만 레닌은 宣傳과 煽動의 개념을 구별하였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宣傳이란 “여러가지 「理念」을 제한된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설명해서 社會主義社會로 필

연적으로 변해가는 理由를 밝히되, 보다 理性的이며 原則의 內容을 포함하여, 인쇄물을 主媒體로 하는 것"에 비하여, 煽動이란 "하나의 「理念」을 대중에게 — 계속적이 아니라도 — 설명하고, 그의 激憤을 자극하되, 보다 감정적으로, 보다 절박한 實例에 입각해서 口頭를 媒體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전과 선동의 엄격한 구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레닌 자신도 후에 가서는 그의 원래의 선전·선동의 개념구분을 실질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말을 한 적도 있다. 다만 宣傳이 理性—로고스—에 호소하는 것이라면 煽動은 感性—파토스—에 호소하는 것이란 정도의 개념구분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공산주의 宣傳·煽動은 혁명전과 혁명후 그 特性을 달리하고 있다. 혁명전 공산당원은 항상 선전·선동에 의하여 이데올로기의 統制的 單一性속에 있어야 하며, 밖으로는 선전·선동에 의한 이데올로기의 傳播를 위하여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선전·선동은 전투적이며, 중앙집권적인 공산당조직에 의하여 대중의 계급의식을 조장하고, 광범위한 대중조직을 편성하여 기존국가, 정부에 항거케 하고 마침내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끝으로 「暴力革命」으로 이끌어 가야한다. 그리고 선전·선동의 기본은 「暴露」전술에 있다. 상대방의 약점을 조직적으로 구체적으로 폭로하여 대중의 계급의식을 조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선전·선동의 또다른 특성은 항상 戰略과 戰術意識에 의하여 計量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객관적상황을 計量하여 戰略을 결정하고, 초기단계에서는 暴露, 同盟罷業 그리고 합법적 의회 투쟁전술을 채택하며, 정부내부침투, 사회불안조성, 暴力으로 이어지되 매단계에서 적절한 선전·선동이 호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은 혁명전의 선전·선동이론이다. 그러나 일단 공산정권이 수립되면 선전·선동은 독점적인 매스·미디어와 정치조직을 통하여 共產權力과 權威의 유지에 총동원된다. 나치·파쇼型的 獨裁型 선전·선동원칙을 적용하여 국민을 대중적 성격에서 파악하여 集團感情을 중요시하

고, 대규모 군중시위, 제복, 휘장, 표어, 의식같은 상징화의 수단을 총동원한다. 단순화와 반복원리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집단적 原始意識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쉴새없이 위기의 도래나 역사적사명을 高唱하면서 위기적 불안감정의 대중적 流出을 조작하거나, 폭발적인 대중심리의 희생대상을 표적화시킨다.

(2) 북한정치와 선전

이상 공산주의 선전·선동의 일반적 원리를 생각해 보았다. 오늘날 북한의 선전·선동도 예외일 수 없다. 북한은 김일성 「神政體制」와 김정일 후계체제의 유지와 이른바 對南革命基地를 강화하기 위한 對內心理戰, 이른바 「남반부에서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실현하기 위한 對南心理戰」 그리고 「國際革命力量」의 강화를 위한 對外心理戰 등 3重의 선전·선동을 悽絶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 중 對內心理戰을 위한 선전·선동은 앞의 일반론에서 밝힌 「혁명후의 선전·선동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김일성은 이미 1958년 12월 28일 「선전·선동일꾼대회」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연설을 했다고 주장하듯이 선전·선동의 내용은 「主體思想」이며, 특히 오늘날 공산권 전반에서 노도와 같이 일어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이 북한의 「神政體制」를 이념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식 사회주의」의 정당성 부각에 혈안이 되어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같은 「정치선동」과 병행하여 노동력동원을 위하여 노동현장에 선전·선동대를 투입하는 등 독특한 「경제선동」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

다음, 對南선전·선동에는 앞의 일반론에서 밝힌 「革命前의 선전·선동」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대남선전·선동을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과 민족통일이라는 2개의 큰 기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철수를 실현시키기 위한 「남조선인민」의 反美感情과 「남조선정

권」의 붕괴를 위한 反政府 활동을 유발시키는 일방, 연방제통일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끝으로 「국제혁명역량」과의 連帶성을 강화하여 「조선혁명의 전국적 승리」를 촉진시키기 위한 對外宣傳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오늘날 북한의 대외선전활동은 陣營別 外交目標에 맞추어 전개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순수성 표방,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원칙의 견지, 사회주의 운동의 통일단결 강화를 지향했던 對共產圈宣傳은 동구공산권의 민주화와 中·蘇의 개혁·개방정책으로 공산권의 통일단결개념이 퇴색되면서 「조선식 사회주의」의 정당성 부각으로 방향을 선회시키고 있다. 그리고 韓·蘇修交에 따른 朝·蘇關係의 이완현상을 반영하여 소련의 대한반도정책을 「두개조선 조작 책동」이라고 공격하는 일방, 對中國紐帶關係의 선전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한편, 비동맹권에 대해서는 「반제·반식민주의」와 「민족해방투쟁」에서의 연대성을 표방하면서 「주체사상」과 북한 통일방안의 정당성 선전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해외친북단체들을 동원하여 韓國에 대한 진상왜곡과 반정부투쟁에 중점을 둔 모략선전을 전개하여 反韓輿論을 조성하는 한편, 이를 위하여 平壤 혹은 해외에서 정치, 문화·예술 등 각종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북한의 海外親北團體 조직은 우선 「친선협회」를 들 수 있다. 상대국의 좌경·친북인사들로 구성된 「人民外交」의 전위단체로서 북한체제의 우월성 및 주재국의 친북정책 유도에 활용되며, 현재 약 100여 개국에 400여 개의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金日成主體思想研究小組」로서 「金日成勞作」에 대한 학습과 토론으로 「주체사상」의 해외전파 기능을 하며, 주로 비동맹권을 대상으로 현재 약 80여개국에 700여개 소소가 조직되어 있다. 그리고 친북반한활동을 하고 있는 「連帶性委員會」가 있다. 아시아, 西歐, 美洲 등 한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西方圈地域을

중심으로 현재 약 70여개국에 근 400개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각국에 산발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조선통일지지 연대성 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통제하고 국제적 규모의 북한지지 활동을 전개시킬 목적으로 1977년 6월 프랑스 파리에 「조선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國際連絡委員會」를 설립하여 「연방제」등 북한의 통일방안을 선전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끝으로 西方自由圈에 대해서는 상호 평등 및 주권존중을 표방하면서 남북한 등거리외교, 한국의 고립화를 겨냥한 북한의 평화 이미지 부각과 對外認識의 쇄신에 주력하는 일방, 특히 최근에는 경제지원획득을 겨냥한 對日修交와 평화협정 체결로 주한미군 철수를 겨냥한 對美接近의 여건을 조성시키기 위한 선전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在日同胞를 북한지지세력으로 轉向시켜 對南 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前進基地로 활용할 목적으로 조직한 「朝總聯」을 「주체사상」과 북한통일정책의 선전기구로 무장시키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다.

7. 結 論

북한의 정치를 김일성의 「神政體制」 및 김정일의 후계체제의 구축이란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오늘날 공산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개방의 물결이 아직 북한에 미치지 못하는 원인을 생각해 보았다.

1945년 해방과 더불어 소련 軍政政策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출범한 북한정권은 토착민족주의세력, 토착공산세력, 남로당세력, 소련파, 延安派 그리고 自派인 빨치산세력중의 반발세력에 대한 가혹한 숙청을 감행하여 늦어도 1970년 제 5차 노동당 당대회를 기점으로 김일성·김정일 세력으로 북한의 정치무대를 일색화시켰으며,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의 현대사를 김일성의 「抗日빨치산鬪爭史」로 날조하고, 김일성 「主體思想」으로 북한주민을 현혹시킴으로써 김일성 「神政體制」를 가능케 하였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김일성의 고령화와 더불어 「공산세습왕조」의 공식적인 출범이 임박하고 있다. 1992년 김일성 80회생일을 계기로 이루어 온 제 7차 당대회를 개최하여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공식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일성 「神政體制」와 김정일후계체제를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주체사상」은 공산권 전반에서 불가결한 요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혁·개방의 물결이 북한으로 밀려들어 오는것을 차단시킴으로써 오늘날 북한체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외교 그리고 대남정책면에서 완전히 한계상황에 직면하였다. 북한은 1984년 「합영법」을 제정한 이래 對外開放經濟政策을 제한적으로 시도하고 있으나 김일성 「神政體制」의 훼손을 막기 위하여 對內經濟體制的 개혁을 거부함으로써 절름발이 개방경제정책이 되었다. 경제가 한계상황에 이르면 결국 정치도 한계상황에 이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며 이것은 결국 북한측논리대로 말한다면 「3대혁명역량」 가운데 「북한사회의 사회주의 혁명역량」이 한계상황에

이르렀다는 말이다.

한편, 북한의 「국제혁명역량」도 한계상황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의 망상에 사로잡혀 남북한간 평화공존관계의 정립을 거부하는 이른바 「하나의 조선정책」은 실리추구를 겨냥하는 소련의 한반도 정책과 정면충돌을 빚었다. 소련과의 군사·경제관계가 어려워지자 북한은 「抗日빨치산투쟁」과 反帝투쟁이란 정권존립의 기반을 훼손시키면서 對美·日接近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특히 경제 지원을 받기위하여 對日修交를 서두르게 되었다.

북한당국은 체제의 전반적 한계상황에서 사활이 걸린 對美·日接近을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일응 南北對話를 표방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우여곡절이 예상되지만 남북한 체제공존이 장기화되면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면 「神政體制」를 지탱시킬 수 없다는 판단아래 주한미군철수와 연방제통일을 겨냥한 南北對話를 적극화시킬 가능성도 예상된다. 김일성은 이미 1993년까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각각 10만이하로 남북군축을 실현시켜 한반도 군사문제를 해결한 다음 1995년까지 연방제로 통일하자는 통일일정을 밝히고 있다. 북한의 정치상황분석을 통하여 얻어진 금후 한반도 정세관을 바탕으로 자유민주통일을 위한 우리의 대응전략이 하루속히 정립되고 추진되어야 할것이다.

Ⅱ. 經濟篇

北韓의 經濟構造와 現況

李 浩 (統一院 研究官)

1. 序 言	75
2. 北韓의 經濟體制와 政策	77
가. 經濟體制	77
나. 經濟政策 및 開發戰略	81
다. 經濟構造的 問題點	85
3. 主要 部門別 現況	87
가. 國民總生産과 成長	87
나. 財政規模와 歲出內譯	89
다. 農·水産業	91
라. 鑛·工業	94
마. 輸送·通信	101
바. 對外經濟關係	103
4. 南北經濟統合의 可能性	109
가. 民族共同體 回復의 必要性	109
나. 南北交易 現況	110
다. 經濟統合의 可能性	112
5. 結 言	115

1. 序 言

20세기를 마감하는 10년간의 世界史는 전후 冷戰構造 하의 동서 양극 체제가 붕괴되고 소위 脫 이데올로기적인 새로운 국제질서로 재편성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混沌期로 기록될 것이며 이는 地殼의 大變動期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미 1989년부터 共產主義 이상을 추구하던 東歐의 사회주의 政權이 차례로 붕괴됨으로써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우리 民族史의 흐름에서 보더라도 1995년은 민족과 국토가 남북으로 분단된지 반세기가 되는 해이므로 남과 북을 막론하고 통일에 대한 열기가 그 어느때 보다 강하게 표출됨으로써 남북관계의 급진적인 변화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국의 시련을 우리와 함께 겪어 왔던 東西獨은 1990년 7월 2일을 기해 經濟統合을 실현하였음은 물론 그 여세를 몰아 동년 10월 3일에는 대망의 政治統合을 이루어 냄으로써 지금은 양 지역간의 정치, 경제, 사회적 동질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제정세의 이와 같은 변화를 몰고 온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극심한 경제침체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양독간의 지속적인 경제교류는 독일통일의 촉매제가 되었으며, 그것은 서독의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우리의 경우에도 통일에의 접근은 경제교류를 포함한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상호불신의 벽을 허물고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작업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주의 경제체제 하에서의 최근 북한실

태를 사실대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인식하에 지금까지의 북한경제실태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완하여 정리하였다.

2. 北韓의 經濟體制와 政策

가. 經濟體制

경제체제라 함은 인간이 경제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이용이 가능한 인적·물적 제자원의 配分方式에 대한 특징을 총체적으로 표시하는 말로서 그것은 인간이 可用한 生産手段을 사용하는 하나의 조직 또는 질서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은 기본적으로 各國이 추구하는 理念의 지배를 받는 것이지만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이 제각기 다르고 그 나라가 처한 역사적 배경이 相異하므로 인하여 엄밀하게 말하면 지구상에 현존하는 경제체제의 종류는 그 經濟社會의 수 만큼 많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항상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 없이 再形成되고 變容되어 가는 것이다.¹⁾

1917년 러시아의 10월 혁명으로 소련에서의 사회주의경제체제가 출현한 이후 지금까지 세계 각국이 추구해 온 경제체제는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경제체제로 양분되어 왔다.

「마르크스」는 경제체제 구분상의 특징을 經濟精神,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 경제적 配分の 決定機構 등으로 보았으나, 이러한 기준은 학자에 따라 다르며 가장 보편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특징은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와 경제적 배분의 결정기구이다.

북한은 8·15해방과 더불어 소련으로부터 공산주의사회의 건설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여 「스탈린」식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지령경제 혹은 명령경제)를 이식하였다.

'80년대 중반 이후 공산권 국가들의 宗主國이었던 소련이 사회주의 경

1) 金榮奉, 「經濟體制論」, 博英社 1987. p.29 및 조용범, 「經濟體制論」 한울, pp.19-20

제체제를 사실상 포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의 도입을 골간으로 한 개혁·개방을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경직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다.

(1) 사회주의적 소유

북한은 생산수단에 대한 私的所有을 철저히 배제하고 社會主義的 소유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이 1972년 12월에 改正한 소위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에 의하면 북한의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²⁾

1977년 4월 29일에 공포된 북한의 「토지법」에서도 토지는 국가 및 협동단체만이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³⁾ 뿐만 아니라 同法 제13조에서는 “토지는 오직 국가만이 지배할 수 있고 협동농장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 및 공민들은 다만 이를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협동단체의 토지 소유권은 사실상 토지 이용권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협동농장은 자기 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판매나 양도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토지법」 제 9 조에서도 “토지는 누구도 팔고 사거나 개인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협동농장원들은 가구당 20~30평 정도의 터밭(채전)을 개인이 경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소유는 아니며 다만 협동농장 規約에 의해서 주어지는 利用權이다.

협동단체의 소유 대상에는 “協同經理에 들어 있는 토지, 役畜, 농기구, 어선, 건물 등과 中小工場, 企業所”로 한정하고 있다.

1986년 12월에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 8기 1차회의에서 김일

2)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 2 장 18~22조 참조

3) 북한 「토지법」 제 9 조 참조

성은 시정연설을 통해 현재 협동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생산수단은 점차 「전인민적 소유」(국유)로 전환시킨다는 방침을 제시하였는데⁴⁾ 이 단계를 북한은 소위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 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북한주민들이 私的으로 所有할 수 있는 재산의 대상과 범위는 근로자가 자기를 위한 노동⁵⁾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나 협동농장원들이 자기 몫으로 분배받은 현물 및 화폐, 또한 그것으로 구입한 소비재로 한정된다. 북한 헌법 제 2 장 22조에서는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소비를 위한 소유이며, 이는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 분배와 국가 및 사회의 추가적인 혜택으로 이루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협동농장원들에게 주어진 터밭의 생산물이나 개인부업에 의한 생산물은 개인소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2) 계획적 자원배분과 중앙집권적 관리

어떠한 경제체제를 막론하고 모든 經濟社會가 직면하게 되는 공통적인 경제문제는 ① 무엇을(생산물의 構成) ② 어떻게(생산의 方法) ③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생산물의 配分)하는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市場과 價格機構에 의해 媒介되고 調整됨으로써 자동적으로 均衡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북한은 자본주의체제의 市場經濟 원리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資源의 配分은 中央集權의 계획에 의존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의 均衡은 우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불경기와 경제공황이 반복되고 이로 인하여 경제발전의 속도가 느릴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失業이 발생하게 되고 자본가들은 이 실업을 노동의 착취수단으로 이용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사회주의 계획

4) 이점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 2 장 22조에서도 규정하고 있다.

5) 북한에서는 노동의 성격을 자기를 위한 노동과 사회를 위한 노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는 생산수단의 社會化를 기초로 하여 생산, 분배, 소비를 전면 계획화함으로써 市場經濟와는 달리 안정된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1948년 공산정권 수립과 동시에 內閣에 「國家計劃委員會」를 설치하고 계획경제의 실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1958년 토지 및 생산수단의 국공유화가 완료됨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시 기반이 확립되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경제운영은 「政務院」의 「국가계획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黨의 지침을 받아 작성하는 「인민경제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인민경제계획」의 구체적인 항목을 살펴보면 각 부문별 생산계획, 기본건설계획, 기술발전계획, 물자계획, 상품유통계획, 수매양정계획, 무역계획, 노동계획, 원가계획, 재정계획, 교육계획, 문화계획, 보건계획 등 모든 활동이 구체적인 계획항목으로 작성된다. 물론 이러한 계획항목들은 다시 수없이 많은 계획지표들로 세분화 되는데 이들 항목과 지표들은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며, 당이 제기하는 그때그때의 정치경제적 과업과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변하게 된다.

북한과 같이 경직된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계획업무의 방대성으로 인해 불충분하고 완벽하지 못한 계획지표가 작성될 수 밖에 없으므로 경제부문간에는 필연적으로 자원배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위 「계획화 사업에서의 一元化, 細部化 원칙」이다.

계획의 一元化는 중앙집권화를 의미하는데 북한은 1965년 9월 이후 省(지금의 정무원 部, 委員會), 중앙기관, 도 인민위원회(지금의 道 行政經濟指導委員會), 道 農村經理委員會 등 각급기관과 공장·기업소의 계획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의 하부 단위로 개편하였고 계획의 세부화를 위해 김일성은 당시의 경제여건을 고려할때 현실적으로는 10,000여종의 계획지표가 작성되어야 하나 최소한 5,000여개 까지라도 계획지표화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⁶⁾

생산수단을 사회적 소유에 기초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관리체계는 “기업소로부터 전반적 인민경제에 이르기까지, 지방으로부터 중앙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국가적인 경제관리체계로 조직”되어 있다.⁷⁾고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북한은 고도의 중앙집권적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김일성의 주체사상과 대안의 사업체계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경제지도 관리원칙을 보면 “첫째 당 정치사업과 경제조직사업의 밀접한 결합, 둘째 집체적지도와 유일적지휘의 옳은 배합, 셋째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의 철저한 실현, 넷째 독립채산제의 올바른 실시”등이다.⁸⁾

북한에서의 경제관리는 한마디로 인민경제계획의 부문별 목표를 얼마나 차질없이 수행하는가 하는 것이 척도가 되며, 계획수립업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경제관리업무는 그 포괄범위가 크고 방대하여 시장경제체제의 분권적 관리보다 비대화 된 관리기구와 조직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경우 비서직에 소속된 27개 부 중에서 11개 부가 경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며, 중앙행정기구인 政務院의 경우는 1990년 5월 현재 총 14개위원회, 25개부 1원 중 80%인 11개위원회, 20개부 1원이 경제관련 행정기관으로 되어 있다.

나. 經濟政策 및 開發戰略

어떠한 국가를 막론하고 그 나라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

6)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 제 3권 참조

7) 북한사회과학원 주체경제연구소, 「경제사전 (1)」 1985, p.93

8) 1985년도 발간 북한사회과학 출판사 「경제사전」에서는 1970년도 출판 경제사전의 서술내용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1970년 경제사전에는 경제관리원칙으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 정치사업우선, 중앙집중제, 독립채산제, 균중노선 등으로 되어있다.

표는 국민후생의 증대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소득의 증대(成長), 소득분배의 衡平, 물가 및 雇傭의 安定 등 세가지의 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배의 형평과 물가 및 고용의 안정은 경제성장을 통한 물질적 부가 뒷받침 되는 바탕위에서 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經濟成長은 일반적으로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적인 과제가 되고 있다.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당과 국가의 경제정책은 근로인민대중의 이익에 맞게 경제를 건설하고 발전시키며, 사회 모든 성원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생활을 이끌어 나가는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정책은 경제문제에 대한 인민대중의 의사를 전면적으로 체현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익에 전면적으로 맞게 수립된다”고 합리화 시키고 있다.⁹⁾ 그러나 실제로 북한이 추진해 온 경제정책들을 보면 사실상 주민들의 복지·후생의 증대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를 목표로 한 노동당 정책노선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음을 알 수 있다.

(1) 경제정책의 기본방향

북한은 정권수립 이후 지금까지 소위 「自立的 民族經濟」의 건설을 경제건설 목표로 표방해 왔다.

「自立的 民族經濟」는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및 인민생활이 다양하고 부단히 成長하며, 중공업 및 경공업제품과 농업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국내생산으로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발전되고 최신기술로 장비된, 그리고 자체의 민족간부와 자기나라의 自然賦源과 원료·자재에 의하여 움직일 수 있는 종합적인 경제”라고 긴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¹⁰⁾ 이러한 정책노선을 「自力更生」노선이라고도 한다.

9) 북한 사회과학원, 주체경제연구소, 「경제사건 (1)」 1985. pp.112~113

10) 노동당 출판사, 「자립적 민족경제의 건설경험」 1983. 8.

북한은 「自立的 民族經濟」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간산업부문인 重工業을 먼저 발전시켜야 한다는 「스탈린」식 사회주의 공업화이론을 내세워 사회주의 건설 초기단계에서 부터 重工業의 우선적 발전,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발전이란 重工業優先策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이와 같은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주체경제」, 「자력갱생」을 표방하고 있지만 자체자본축적이 미약하여 사실상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의 경제원조에 의존한 경제건설을 추진해 왔다. 따라서 현재 북한에서는 소련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기업들이 북한 공업총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는 63%, 석탄 및 정유산업은 50%, 강제생산은 33%가 소련 지원으로 건설된 공장·기업소로 되어 있다.¹¹⁾

한편 경제건설과 함께 「국방건설」을 병행해서 추진한다는 소위 「國防·經濟 並進策」 역시 북한 경제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되고 있다. 이 정책은 1962년 노동당 제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四大軍事路線」¹²⁾을 채택한 이후 표면화된 것이다. 특히 中·蘇 이념분쟁이 격화되기 시작하자 金日成은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국제정세의 변화를 이유로 내세워 “...경제발전을 다소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한층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물론 이 정책은 대외적으로 북한의 好戰性을 나타내게 되므로 70년대 이후부터는 이를 표면에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산 발표상의 군사비 비중도 실제와는 달리 낮추어 발표하고 있으나 「국방·경제 병진책」은 중공업 우선책과 함께 북한경제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으로 정착되어 왔다.

11) Marina Trigubenko and Vasily Mikheev, “Industrial Policy and Industrial Potential of the Korean People’s Democratic Republic”, The Environment for Economic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he 1990’s, KDI-IIEPS joint Conference.

12) 4대군사노선은 전국토의 요새화, 전인민의 무장화, 전군의 간부화, 전군의 현대화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경제개발 전략

북한이 표방해 온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목표나 사회주의 理想이란 측면에서 볼 때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은 전 산업부문이 동시 균형적으로 발전하고, 성장 결과의 배분면에서도 소비와 축적간에 균형이 유지되는, 소위 너시(Nurkse, R)가 주장한 均衡成長理論과 유사한 개발전략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오판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허쉬만(Hirschman A.O)의 不均衡成長理論에 가까운 경제개발 전략을 채택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업화의 과정은 남한의 경우 수입→수입대체→수출로 발전하는 모형에 의해 소비재→중간재→자본재의 산업으로 이행하는 개발전략을 추구한데 비해 북한은 자력갱생 노선에 따라 처음부터 자본재→소비재산업으로 역행하는 과정을 채택한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북한은 중공업의 발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일반적인 경제개발전략은 우선 농업부문의 유희노동력을 동원, 경공업부문을 발전시켜 국제적 비교우위를 통한 경공업제품의 수출과 이를 통한 자본축적 및 차관 도입을 통해 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全産業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인데 북한은 중공업의 발전이 全産業 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논리에 의존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중공업의 발전을 위해 대외적으로 중·소의 원조에 의존하면서 대내적으로는 사회주의 건설의 초기단계에서는 경공업과 농업부문에서 중공업건설자금을 조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천명, 금융, 세제, 투자면에서 이를 뒷받침 하기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금융정책에 있어서는 5개년계획(1957~1960) 기간에 농민은행을 국가은행으로 개편함으로써 농업부문에서 중공업 건설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한편 화폐개혁을 단행(1959)하여 전후 인플레이의 수습과 함께 민간부문에 사장된 화폐자금을 중공업을 비롯한 경제건설 자금으로 동원하였다.¹³⁾

13) 국토통일원,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북한상황변화예측」, 1986. 1. p.83

稅制面에서는 제 1 차 7개년계획(1961~1970) 기간 중 소비재에 부과하는 거래세율을 대폭 인상하여 주민 소비부문에서 경제건설자금을 조달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북한의 소비억제 정책은 국민소득의 1차분배과정인 소비와 축적(저축)비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1984년의 경우를 보면 국민소득의 1차 배분과정에서 소비와 축적비가 58對 42로 나타나 1960년대의 80對 20과 비교하여 날이 갈수록 소비억제책이 강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¹⁴⁾

한편 북한의 예산 내역을 분석해 보면 제 1 차 7개년계획기간에는 공업부문 투자의 80%가 중공업에 투자되고 나머지 20%가 경공업에 투자되었으나 6개년계획기간에는 중공업 대 경공업 투자비중이 83 대 17로 중공업 투자비중이 높아졌다.¹⁵⁾

이상과 같이 북한의 경제개발 전략은 공업과 농업간의 불균형, 중공업과 경공업간의 불균형, 소비와 축적간의 불균형 등 불균형 성장정책을 위주로 추진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 經濟構造的 問題點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경직된 계획경제체제의 구축과 비합리적인 정책노선을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결과 오늘의 북한경제 상황은 각종 구조적인 문제점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경제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첫째는 경제관리의 비능률성이다. 이로 인해 생산조직에 비해 관리조직이 비대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조직 내부에도 실제로는 표면상의 완전고용 형태로 위장된 잉여노동력이 과다하게 잠복함으로써 관리

14) 국토통일원,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북한상황변화예측」, 1986. 1. p.84
참조

15)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각년도 참조

및 생산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이나 경영합리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전략하였다.

둘째, 전반적인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상 불균형의 심화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산업부문간의 불균형인 바 특히 수송, 통신 등 사회간접시설과 에너지 부족, 경공업의 낙후문제는 북한경제의 고질적인 애로부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 격차, 당·정관료와 일반근로자의 소득수준 격차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의 이상과는 달리 사회·경제적 正義가 완전히 상실된 위기상황으로 지적되고 있다.¹⁶⁾

셋째, 산업기술수준의 낙후이다. 북한은 경제체제의 특징으로 인해 개인의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력갱생노선이 강조된 결과 자체기술 개발은 물론 선진 기술 도입의 차질을 초래함으로써 급속히 발전하는 국제기술수준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산업은 천연자원과 1차 가공상품 생산에 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북한의 경제정책은 정치·군사적 목적에 종속됨으로써 철저한 軍產複合體로 형성되어 있고 이로 인한 투자의 비효율성과 과중한 군사비 부담이 재정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는 한 오늘날 북한이 당면한 경제적 난관은 사실상 극복될 수 없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16) 국토통일원, 「한소북한경제문제 워크샵 결과보고서」, 1990. 5.

3. 主要 部門別 現況

가. 國民總生産과 成長

인구와 국토면적은 한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며 勞動力과 市場의 규모를 결정하는 조건이 되므로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89년 현재 북한의 인구는 약 2,137만 5천명으로 추계되고 있으며 인구 증가율은 1.64%로 전년도 보다 0.03%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지역의 면적은 약 12만 2천km²로, 인구밀도는 1km²당 175명으로 한국의 427명 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 있다.

북한은 인구와 면적 등 기초적 여건이 남한에 비해 다소 유리한 입장에 있으나 전체 면적의 80% 이상이 산간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경제활동 여건은 오히려 남한보다 불리한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북한경제는 제 2 차 7개년계획(1978~1984) 이래 급격한 성장 둔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1989년도 실질경제성장률은 전년도의 3.0%보다 낮은 2.4%로 평가되었다. 그 결과 현재 추진중인 제 3 차 7개년계획 3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은 2.9%로 계획목표인 7.9%의 절반에도 미달되는 부진한 실적을 나타내었다.¹⁷⁾

〈표1〉 최근 북한 경제성장률

(단위 : %)

年 度	1987	1988	1989	年平均
成 長 率	3.3	3.0	2.4	2.9

자료 : 국토통일원

17)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90. 9. p.5

1989년 현재 북한의 국민총생산(GNP) 규모는 전년도 보다 4.9억불이 증가된 210.9억불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1인당 GNP는 987불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같은 해 남한의 GNP 2,101억불, 1인당 GNP 4,968불과 비교하면 GNP는 약1/10, 1인당 GNP는 약1/5로 전년도 보다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¹⁸⁾

〈표2〉 인구 및 GNP

구 분	단 위	1988년	1989년	비고('89 한국)
인 구	만명	2,103.0	2,137.5	4,238.0
인 구 증 가 율	%	1.67	1.64	0.97
GNP	억\$	206.0	210.9	2,101.0
1 인 당 GNP	\$	980	987	4,968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들이 사용해 온 국민소득 개념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제국이 사용하는 GNP의 개념으로 북한의 경제총량 규모를 추계해 내는 문제는 용이하지 않으며 추계된 결과에 대해 항상 많은 문제점과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북한에서 발간된 가장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1986년의 1인당 국민소득은 2,400불로 기록되었으며¹⁹⁾ 평양축전 당시 평양을 방문 취재한 뉴욕타임즈 기자는 북한 관리의 말을 인용하여 1988년 북한의 국민소득은 2,530불이라고 인용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GNP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북한 화폐의 대외환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개념

18) 최근 소련의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1인당 GNP를 400불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음

19) 평양 외국문출판사. 「조선개관」 p.152

의 국민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생산적 서비스 부문의 규모를 어떻게 추정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본고에서 평가한 북한의 GNP는 북한이 발표한 국민소득을 근거로 하여 이를 서방개념의 GNP로 환산한 것이 아니며 분배적 측면에서의 접근 방법인 북한 국민소득의 1차 분배과정을 분석하여 북한개념의 국민소득을 북한 원화 기준으로 산출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GNP와의 개념상 차이를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북한 화폐의 상업환율을 적용하여 달러 표시액으로 환산한 결과이다.

최근 사회주의 국가들이 민주화 개혁과 개방의 결과 확인된 공통적인 사실은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들이 발표한 경제통계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된 것이었으며, 서방국가의 분석 결과 역시 실제보다 과대 평가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동·서독 경제통합 과정에서 밝혀진 과거 동독의 GNP평가 가치는 실제보다 2.5배나 높은 것이었다.²⁰⁾

나. 財政規模와 歲出內譯

일반적으로 財政이라 함은 국가 및 공공단체의 경제라고 定義되고 있다. 오늘날 국가나 공공단체는 經濟主體로서의 기능과 간섭의 폭이 확대됨에 따라서 財政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추세이다. 특히 북한경제에 있어서는 재정의 역할이 국민경제의 거의 모든 부문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규모나 중요성은 서방세계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북한의 예산은 서방국가의 정부예산은 물론이고 소위 「사회주의 공장·기업소」의 재정²¹⁾ 및 각종 보험이나 신용 등 金融機能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20)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1990. 9. p.4

21)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공장이나 기업소 경영에 소요되는 투자 및 운영자금을 충칭하는 개념으로 사용되며, 국가예산에 반영되고 있다.

1989년도 북한의 예산규모(결산기준)를 보면 전년보다 5.4% 증가된 149억 7천만불로 재정부담률(예산/GNP)은 70.9%로 분석되었다.

〈표3〉 재정 규모

구 분	단 위	1988년	1989년	비고('89 한국)
재 정 규 모	억\$	147.3	149.7	328.4
재 정 증 가 율	%	5.2	5.4	20.1
재정부담률 (재 정 / GNP)	%	71.5	70.9	15.6

자료 : 국토통일원

참고로 1989년도 남한의 재정규모는 328억 4천만불로 북한의 2.2배에 달하나 재정부담률은 15.6%에 불과하다.

한편 1989년도 북한 예산의 지출항목별 구성비를 보면 예산총액의 67.5%가 경제건설 투자를 포함한 소위 人民經濟費에 지출되었고 18.9%가 교육비를 포함한 社會文化費에 12%가 軍事費로 지출되었으며 나머지 1.7%가 國家機關管理費에 지출된 것으로 발표하였다.²²⁾

북한의 세출예산 내역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부문은 군사비 지출이다. 북한은 1966년 10월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소위 「國防·經濟 竝進策」이 발표된 이후 1967년부터 1971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세출예산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30.4%~32.4%로 공식 발표하였다.²³⁾

그런데 1972년 이후에도 북한의 군사력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계속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내역에서 군사비 비중은 17%이하로 급격히 감소된 것으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1990년 중에도 독

22)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 1 차회의 재정부장 윤기정 보고서 참조

23) 평화통일연구소, 「북한개요」, 1986. 12. p.180

자적인 탄도미사일 개발은 물론 핵무기 개발을 위한 핵연료 재처리시설 등에 막대한 군사비를 투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고 있으며, 99만명 이상의 막강한 지상군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²⁴⁾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1989년도 북한의 實質軍事費 지출액은 예산총액의 30%수준인 44억 9천 만불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규모가 남한의 1/10에 불과하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북한이 남한에 대해 군사비 지출 경쟁을 벌인다는 것은 사실상 무모한 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의 대남정책 수정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보인다.

다. 農 · 水産業

북한은 經濟體制를 사회주의화 하는 초기과정에서 부터 「쌀은 곧 공산주의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식량 증산을 독려해 왔다. 또한 중공업우선정책을 추진하면서도 60년대의 제 1 차 7개년계획에서 부터 농업의 수리화, 전기화, 화학화, 기계화를 추진하는 등 농업생산 기반의 강화에 주력한 결과 어느정도 생산성 향상을 달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한편 농업집단화에 의한 사회주의적 생산체계가 확립된 결과 농민들의 생산의욕이 침체됨으로써 농업생산력은 한계점에 달하게 되어 최근에는 식량의 부족이 북한경제가 해결해야 할 최대의 당면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농업은 協同農場과 國營農 · 牧場의 생산조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북한 당국은 농업관리를 공업화 한다는 목표하에 협동농장 관리조직인 郡 協同農場 經營委員會를 하나의 경영단위로 보고²⁵⁾ 그 산하에 협동농장의 생산을 지원하는 農機械作業所와 灌溉管理所, 자재공급소 등을 두고 있다. 물론 각 協同農場은 총생산물에서 이들 기관에 대

24) 국방부, 「국방백서」, 1990.

25) 국토통일원, 「평화통일기반조성을 위한 북한상황변화예측」, 1986.1. p.98

한 지원 대가를 생산비의 일부로 공제하여 지불한 후 농장원들에게 決算分配를 실시한다.

1989년 현재 북한의 耕地面積은 총 214만정보로 전년도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金日成은 식량증산의 한계를 인식하고 1980년 10월 노동당 제 6 차대회에서 '80년대 말까지 30만정보의 간석지 개간과 20만정보의 「새땅찾기운동」을 전개할 것을 목표로 農耕地 확대에 주력하고 있으나 실적은 극히 부진하여 식량 증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89년도 북한의 식량생산 실적은 전년도 보다 5.2%가 증가된 총 548.2만톤으로 평가되었는데²⁶⁾ 최근 북한의 식량생산은 농업수리화의 진척에도 불구하고 산림의 훼손으로 인해 기후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989년도의 증산요인은 기상조건의 호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穀種別 생산 내용을 보면 쌀이 215.9만톤, 옥수수 268.1만톤, 기타 잡곡이 64.2만톤이며 町步當 수확량은 쌀 3,400kg 옥수수 3,800kg 등으로 평가되어 여전히 남한보다 町步當 생산량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²⁷⁾

그러나 북한은 인구 1인당 耕地面積이 남한보다 넓기 때문에 잡곡을 포함한 전반적인 식량자급도는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1989년에도 연간 80만톤 이상의 식량수입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²⁸⁾ 특히 외화의 부족으로 인해 식량수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옥수수 등 잡곡의 생산비중이 높기 때문에 식량 소비구조도 잡곡 위주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의 식생활 여건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데 쌀과 잡곡의 배급 비율은 3 대 7이다.

26)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1990. 9. p.10

27) 앞의 자료. p.10

28) 앞의 자료. p.11

〈표4〉 경지면적 및 곡물생산량

구 분	단 위	1988년	1989년	비고('89 한국)
경 지 면 적	만정보	214.0	214.0	212.7
(논)	〃	(64.4)	(63.2)	(135.3)
(밭)	〃	(149.6)	(150.8)	
곡 물 생 산	만t	521.0	548.2	
(쌀)	〃	(209.9)	(215.9)	(589.8)
(옥수수)	〃	(250.3)	(268.1)	(12.1)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의 水産業은 국영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을 생산조직으로 하고 있는데 국영수산사업소는 동해안지역에 21개소, 서해안지역에 8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영수산사업소는 어로작업은 물론 冷凍, 鹽藏, 加工까지를 맡아서 수행하므로 어업은 채취공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북한의 水産資源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해안의 명태이며 어획량에서 명태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 따라서 7·7선언 이후 남북한 간접교역의 실시에 따라 북한산 명태는 이미 남한으로 반입된 바 있다. 이와 같이 수산물은 북한의 주요 수출상품으로 외화 가득원이 되고 있는데 특히 대구, 섬게, 어란 등 고급의 수산물은 對日 수출상품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원양어업은 어선 부족, 기술 낙후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0년 5월에는 일본 어선들이 북한 선적으로 위장하고 소련의 캄차카반도 부근 공해상에서 연어와 송어를 잡다가 소련 당국에 의해 나포되어 문제를 일으킨 사건은 북한이 원양어선의 부족으로 소련과의 어로협정에서 할당받은 연간 20만톤의 어획쿼타를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1989년 현재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총 218만 9천

튼으로 평가되고 있으나²⁹⁾ 도로 및 수송시설의 낙후로 주민들은 선도가 높은 수산물을 공급받지 못함은 물론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소비량은 극히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80년대 부터 서해안 간척사업의 추진에 따라 어로환경은 더욱 나빠지고 있으며, 소금생산도 매우 부족한 형편인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는 양식어업에 관심이 높아져 양식장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표5〉 수산물 생산량

구 분	단 위	1988년	1989년	비고('89 한국)
수 산 물 생 산	만t	214.6	218.9	331.9
(해 면 어 업)	〃	(204.1)	(207.3)	(328.9)
(내 수 면 어 업)	〃	(10.5)	(11.6)	(3.0)

자료 : 국토통일원

라. 鑛·工業

(1) 광업 및 에너지산업

북한은 自力更生 원칙에 따라서 공업발전에 필요한 原料 및 燃料의 需要를 자체생산으로 보장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소위 「採取工業」과 「電力工業」을 「製造工業」에 확고히 앞세울 것을 강조해 왔다.³⁰⁾

석탄, 철광석, 금, 亞鉛 등 非鐵金屬鑛 등은 북한 鑛業의 가장 중요한 부문이 되고 있다.

1989년 현재 북한의 철광석 생산능력은 精鑛 기준으로 약 1,030만톤으로 평가되고 있는데³¹⁾ 주요 철광산은 매장량이 13억톤으로 알려지고 있

29) 앞의 자료. p.12

30) 북한 사회과학출판사, 「자립적 민족 경제의 건설경험」 1983. p.89

31) 국토통일원, 「1989년도 북한경제종합평가」, 1990. 9. p.15

는 무산철광산과 은율광산, 재령광산 등이 있다.

亞鉛은 최근 북한의 중요한 전략 수출상품이 되고 있는데 함경남도 단천의 검덕광산은 북한 최대의 亞鉛鑛山으로 개발되어 1983년에 이미 연간 1천만톤의 광석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選鑛場이 건설된 바 있다.

북한의 에너지산업은 비교적 풍부한 石炭과 水力資源을 개발 이용하는데 정책의 중점을 두어 왔다. 석탄은 무연탄과 유연탄(갈탄)이 주로 매장되어 있으나 코크스의 원료가 되는 역청탄은 매장되어 있지 않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석탄 매장량은 약 147억톤에 달하나 채굴이 가능한 매장량은 79억톤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1989년 현재 북한의 석탄생산 능력은 총 4,330만톤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중 유연탄은 1,405만톤, 무연탄은 2,925만톤이다.³²⁾

최근 북한경제는 석탄 생산의 부진과 석유도입량의 감소로 인해 電力生産의 부족을 유발하여 전체 산업의 가동률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化學工業이 石炭을 원료로 하는 생산체제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석탄의 수요량이 많아 火力發電所의 연료는 대부분 열량이 낮은 저열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電力生産이 부족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산림훼손, 기상 및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수력발전소 가동률의 저하와 석탄 생산의 부진 및 저열탄의 사용에 따른 화력발전량 감소 등으로 분석된다.

1989년 현재 북한의 發電設備能力은 총 690.2만Kw로 평가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水力은 405.2만Kw, 火力은 285만Kw이고 原子力 발전소는 영변에 소형 연구용 원자로 2기가 가동되고 있으나 3차 7개년계획기간에 건설하기로 되어 있는 176만K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는 소련과의 협력이 원활하지 못해 아직 건설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³³⁾

32) 앞의 자료. p.15.

33) 앞의 자료. p.14.

북한의 정유능력은 연간 350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1989년도 원유도입 실적은 전년도에 316만톤에서 18% 이상이 감소된 260만톤으로 추정되고 있어서 산업생산활동을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³⁴⁾

〈표6〉 에너지산업 생산능력

구 분	단 위	1988년	1989년	비고('89한국)
석 탄	만t	4,070	4,330	2,078.5
발전설비용량	만kw	690.2	690.2	2,099.7
정유능력	만 BPSD	7.0	7.0	84.0
원유도입량	만톤	316.4	260.0	4,043.7

자료: 국토통일원

(2) 금속공업

금속공업은 기계공업과 함께 북한 重工業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부문이다. 금속공업은 製鐵·製鋼 등의 黑色金屬工業과 鉛, 亞鉛, 銅을 중심으로 한 有色金屬工業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북한의 제철·제강공업은 함경북도 청진의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황해남도 송림의 황해제철연합기업소를 동·서 양대축으로 그 주변에 각각 중소규모의 製鋼工場들을 배치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설비의 기술수준이 낙후하고 규모가 영세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1989년 현재 철강 생산능력은 銑鐵이 517만톤, 鋼鐵 594만톤, 壓延鋼材 404만톤 등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 강철과 압연강재의 생산능력은 소폭 증가되었다.³⁵⁾ 이는 제 2 차 7개년계획 ('78~'84)기간

34) 앞의 자료. p.15.

35) 앞의 자료. pp.16~17.

부터 추진되어 왔던 김책제철 제 2 단계 확장공사가 1989년 중에 완료된 데 기인하고 있다.

북한은 1970년대 부터 코크스 대신 무연탄을 이용하는 제철방법을 개발하여 이용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제품의 질이나 생산능률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非鐵金屬을 생산하는 주요 製鍊所로는 남포, 문평, 흥남, 해주, 단천, 평북제련소 등이 있고 1983년에는 소련의 지원으로 북창알미늄공장이 건설되었다.

非鐵金屬의 생산능력은 銅 9만톤, 鉛 8.8만톤, 亞鉛 29.5만톤 알미늄 2만톤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³⁶⁾ 이러한 제품은 북한의 수출전략상품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데 현재 남북한 간접교역을 통해 남한에도 반입되고 있으며 특히 亞鉛은 품질면에서도 국제수준에 크게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표〉 금속공업 생산능력

구 분	단 위	1988년	1989년	비고('89한국)
製 鐵	만톤	517	517	1,451.2
製 鋼	〃	504	594	2,220.6
압 연 강 재	〃	397	404	2,792.6
亞 鉛	〃	29.5	29.5	26.5
銅	〃	9.0	9.0	20.0
알 루 미 늬	〃	2.0	2.0	17.5

자료 : 국토통일원

(3) 기계공업

북한은 군수산업 육성문제와 관련하여 기계공업 발전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 그 결과 일반기계와 공작기계 생산부문은 자체수요의

36) 앞의 자료. p.17.

일부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으나 전반적인 생산기술은 국제수준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상실로 지금까지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출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해 오늘날 북한경제 침체의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도 경제건설에 필요한 주요 공장설비는 대부분 소련이나 서방 국가로 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기계를 비롯한 공장설비를 제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장은 용성기계, 북중기계, 대안기계, 낙원기계공장 등이며 공작기계는 희천, 구성, 만경대 및 평양공작 기계공장 등에서 생산되고 있다. 특히 희천공작기계공장은 精密工作機械를 생산하는 공장으로서 최근에는 소련의 고리끼 공작기계공장과 이바노브 공작기계공장 등과 합작으로 생산시설을 확장하여 일부 제품의 경우 이미 생산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運輸機械 부문에서는 북한 유일의 자동차공장인 승리자동차공장이 있고 전기기관차를 생산하는 김중태전기기관차공장, 원산철도차량공장, 청진조선소, 남포조선소들이 승리-58형 트럭, 8축전기기관차, 중량화차, 2만톤급 화물선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연간 생산능력은 크지 않다.

1989년 현재 북한의 주요 기계제품 생산능력을 보면, 자동차(트럭) 3.3만대, 각종 공작기계 3.5만대, TV 24만대 등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造船能力은 연간 21.4만톤(G/T)수준이다.³⁷⁾ 주요 설비를 제작하는 일반기계 부문에서는 3만Kw급 발전설비, 1만톤 프레스, 대형산소분리기 등을 자체로 생산하고 있으나 국제수준에 비해 낙후한 설비생산기술로 인해 북한의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재래식 兵器 생산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여 제 3 세계 및 중동 지역의 분쟁국가들에 상당량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7) 앞의 자료. pp.17~18.

〈표8〉 주요기계공업 생산능력

구 분	단 위	1988년	1989년	비고('89한국)
자 동 차	만대	1.8	3.3	178.3
TV 수 상 기	〃	24.	24.	1,300
조 선	만G/T	21.4	21.4	350.0

자료 : 국토통일원

(4) 화학 및 건재공업

북한의 化學工業은 해방 전 日帝가 건설하였던 흥남질소비료공장, 아 오지화학공장 등을 기초로 하여 발전되어 왔는데 주로 石炭을 원료로 하는 화학공업계열로 건설된 것이 특징이다.

精油工業을 비롯한 石油化學 분야는 아직 규모도 영세하고 계열화되지 못한 실정인데 정유공장은 소련과 중국이 각각 건설을 지원한 연간 200만톤 원유처리 능력의 승리화학공장(함북, 옹기)과 150만톤의 처리 능력을 가진 봉화화학공장(평북, 피현)이 있다. 그리고 西歐에서 플랜트를 도입하여 건설한 청년화학종합공장이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기초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본중화학, 명륜화학, 청수화학공장 등이 카바이트, 가성소다, 포르말린 등을 생산하며 화학비료는 흥남비료연합기업소,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 등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 개발한 화학섬유인 비날론은 2.8비날론연합기업소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으나 현재 추진중인 제 3차 7개년계획 기간 중에는 연산 비날론 10만톤 생산규모의 순천비날론연합기업소가 1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일부 가동되고 있다. 이 공장은 비날론 이외에도 각종 비료와 단백질 사료 등 다양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화학공업단지로 개발되고 있

다.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또 하나의 주요 공장은 사리원카리비료 공장이 있다.

建材工業은 시멘트, 마그네샤크링카, 판유리공장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는데 주요 시멘트공장은 승호리시멘트, 2.8마동시멘트, 해주시멘트, 고무산시멘트, 순천시멘트, 상원시멘트공장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순천과 상원시멘트 공장은 일본과 서독에서 설비를 도입하여 건설한 것으로 여기서 생산된 시멘트는 품질이 양호하여 일부는 수출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내화벽돌의 원료로 이용되는 마그네샤크링카는 단천마그네샤크링카 공장이 있고 판유리는 남포판유리공장이 비교적 대단위 공장으로 알려져지고 있다.

1989년 현재 주요 화학 및 건재공업의 생산능력은 화학비료 351만 4천톤, 정유 350만톤, 화학섬유 17만 7천톤, 시멘트 1,177만 5천톤, 마그네샤크링카 260만톤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³⁸⁾

〈표9〉 주요화학 및 건재공업 생산능력

구 분	단 위	1988년	1989년	비고('89한국)
화 학 비 료	만t	351.4	351.4	417.3
화 학 섬 유	〃	12.7	17.7	119.7
시 멘 트	〃	997.5	1,177.5	3,635.0

자료 : 국토통일원

(5) 경공업

북한주민들의 생필품을 비롯한 각종 소비제품을 생산하는 輕工業은 가장 뒤떨어진 산업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38) 앞의 자료. p.19.

북한의 工場·企業所는 규모에 따라 中央企業과 地方企業으로 나누어 관리되고 있는데, 輕工業은 일부 방직 및 견직물 공장과 가전제품 공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소규모의 지방산업 공장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생산규모도 영세하고 제품의 질도 조악하여 소비재 부족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80년대에는 이러한 소비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소위 「8·3 인민소비품 생산 운동」을 전개하여 모든 공장·기업소가 유희자재나 폐자재를 이용하여 각종 생필품을 만들어 내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대부분의 공장·기업소 내에는 生必品職場이나 生必品作業班이 별도로 조직되어 이를 담당하고 있다.

1984년 합영법이 발표된 이후 일본의 조총련계 상공인들이 輕工業 분야에 합작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할 뿐만 아니라 이들 공장은 가공 수출을 담당하고 있어서 아직도 북한주민들의 內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1989년 북한의 對日 섬유제품수출은 對日 수출총액의 9%에 달하고 있다.

마. 輸送·通信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구조는 일반적으로 사회간접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 역시 사회간접시설의 낙후가 북한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로 파악되고 있다.

북한은 휴전선으로 인해 동·서 海岸線이 단절되어 해운의 발달에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 地勢가 험준하여 도로의 건설에도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따라서 북한의 輸送은 도로나 해운수송 보다는 철도수송에 의존하는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60년 이후 북한은 새로운 철도의 부설이나 기존철도의 복선화, 중량레일화를 추진하는 한편 철도전기화를 통해 철도수송능력을 높이는데 주

력해 왔다.

1989년 중에도 철도가 新設된 길이는 2개노선에 97Km로 철도 총 연장은 5,024Km로 늘어났다. 그러나 460Km는 아직도 狹軌이고 4,564Km가 廣軌로 되어 있다. 또한 1989년 중에는 기존 철도 2개노선의 87.5Km구간이 電鐵化됨으로써 전철의 총 연장거리는 3,084Km로 철도전기화율은 61.4%에 이르고 있다.³⁹⁾ 그러나 선로 보수 등 관리의 소홀과 통제시설의 기술 수준이 낮아 화물수송능력은 극히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제 2차 총리회담 대표단의 방북시 개성-평양간 열차 운행속도는 시속 40~50Km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할 경우 북한의 철도 수송능력은 다른 조건이 남한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남한의 절반 이하로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도로는 1989년 현재 총 연장이 2만 3천Km에 도로 포장률은 6.4%에 불과하고 자동차 총 보유대수는 26만대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도로 사정이나 자동차 보유대수로 볼 때 도로수송능력은 극히 미약한 실정임을 알 수 있다.

고속도로는 평양-원산간을 비롯하여 총 연장이 354Km 정도인데 1989년 중에는 원산-금강산간 114Km가 완공되었고 현재 평양-개성간 200Km와 평양-희천간 120Km가 건설 중에 있다.

1989년도 북한의 선박 보유 현황은 전년도 보다 6만톤이 감소된 총 51만톤(G/T)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항만 하역능력은 연간 3,490만톤으로 전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다.⁴⁰⁾

최근 석유 도입량의 감소로 인해 북한수송문제는 더욱 심각한 국면에 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39) 앞의 자료. pp.21~22.

40) 앞의 자료. p.23.

〈표10〉 수송기반

구 분	단 위	1988년	1989년	비고('89한국)
철도총연장	km	4,927	5,024	6,437
(전 철)	〃	(2,996)	(3,084)	
도로총연장	〃	23,000	23,000	56,481
(고속도로)	〃	(240)	(354)	(1,552)
(포장도로)	〃		(1,469)	(37,493)
자동차보유	만대	24.8	26.0	266
항만능력	만톤/년	3,490	3,490	18,992.6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의 통신은 주로 행정통신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주민들에게는 아직도 개인 전화망이 설치되지 못한 상태이다.

그러나 평양축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평양 국제통신센터가 건설되고 시내 자동전화 시설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제통신은 중·소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간에는 통신위성을 이용한 통신이 가능하나 일본과의 통신은 아직도 단파전화(3회선)를 이용하고 있는데 1990년 9월의 일본 자민·사회 양당과 북한 노동당의 3당 공동선언에서는 우선적으로 통신위성 이용문제와 일·북한 직항로 개설에 관한 협정체결을 추진하기로 합의된 바 있다.

바. 對外經濟關係

북한경제가 안고 있는 중요한 취약요소의 하나는 흔히 국제경제와의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제경제협력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는 국제분업의 원리에 입각한 국제무역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북한의 무역은 國家管理에 의한 計劃貿易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무역

의 규모나 수출입 품목은 인민경제계획의 범위내에서 결정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경제계획의 수행상 필요한 설비나 원자재 등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품목의 輸入計劃이 먼저 작성되면 이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代金の 지불을 목적으로 輸出計劃이 중속적으로 세워지게 된다.

대외무역은 互惠平等의 원칙에 입각하여 「바터」 무역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공산국가들과의 사이에는 통상 5년을 기간으로 한 장기통상협정에 의해 輸出入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힘쓰고 있다.

그러나 對中·蘇 무역에 있어서도 장기간에 걸쳐 북한의 赤字가 지속됨으로써 이들 국가에 대한 북한 債務 증가의 근본적인 요인이 되어 왔다.

북한은 제 3 차7개년계획 기간에 무역을 3.2배로 증대시킨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18.1%씩의 무역성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980년 10월 6차당대회 이후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방향은 사실상 수정되기 시작하였고 특히 제 3 차7개년계획에서는 무역에 대한 정책 비중을 대폭 강화하였음을 의미한다.

1989년도 북한의 貿易總額은 전년도에 비해 8.6%가 줄어든 47.9억불로 推計되었는데 그 중 輸出은 19.5억불 輸入은 28.5억불로 약 9억불의 무역적자를 나타내었다.⁴¹⁾

〈표11〉 무역실적

구 분	단 위	1988년	1989년	비고('89한국)
무 역 총 액	억\$	52.4	47.9	1,182.2
(수 출)	〃	(20.3)	(19.5)	(614.1)
(수 입)	〃	(32.1)	(28.5)	(568.1)
무 역 수 지	〃	(-)11.8	(-) 9.0	46.0

자료 : 국토통일원

41) 앞의 자료. pp.24~25.

연도중 북한무역이 부진하였던 요인은 국내 생산활동의 침체로 인한 수출의 부진과 외화부족에 따른 수입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북한은 제 3차7개년계획의 착수와 함께 1989년의 제13차세계청년학생축전을 유치하고 그 준비에 돌입함으로써 약 50억불의 자금을 비생산적 건설 부문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생산활동이 극도로 위축되어 수출부진, 외화부족, 수입감소란 악순환의 모순에 빠진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대상국별 무역 실적을 보면 소련과의 무역이 북한 무역총액의 50%를 차지하여 가장 중요한 교역 대상국이 되고 있는데 1989년에는 수출 8.9억불, 수입 15억불로 북한이 6.1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중국과의 무역은 수출 1.8억불, 수입 3.8억불로 2억불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북한 무역총액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무역총액의 62%를 蘇聯과 中國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西方 국가들 중에서는 일본이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 되고 있는데 1989년 북한의 對日 무역총액은 5억불이며 그 중 수출은 3억불, 수입은 2억불로 1억불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따라서 圈域別 무역의존도를 분석해보면 東歐, 蘇聯 등을 포함한 구 사회주의권에 속했던 나라들과의 무역이 전체의 69.2%, 제 3 세계를 포함한 서방제국과의 무역은 30.8%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과 韓國과의 국교수립 등 국제환경의 변화는 앞으로 북한의 대외무역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변화는 결국 북한무역을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1980년대에 있어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 발전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요인은 外債의 증가와 원리금 상환의 불이행으로 인한 對外信用의 실추이다.

북한은 1970년대 중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경제지원이 감소된 가운데

추진하였던 6개년계획(1971~1976)의 수행을 위해 일부 서방 선진국들로부터 상업차관 및 연불수입 조건으로 외자도입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70년대의 에너지 파동, 국제 원자재가격의 하락 등 국제경제환경의 악화와 외자관리능력의 미숙 등으로 1975년부터 대외채무에 대한 상환능력을 상실함으로써 국제적인 신용이 크게 실추되었다.

1976년 이후 북한은 수차례에 걸쳐 서방 채권국들과의 교섭을 전개하고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등을 조정해 왔으나 북한의 경제사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지금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됨으로써 外債規模가 갈수록 증가되어 1989년 현재 북한의 對外債務 總額은 67.8억불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⁴²⁾

북한 외채 현황을 권역별로 나누어 보면 전체의 40%가 對西方 외채이며 나머지 60%가 蘇聯과 中國에 대한 채무로 되어 있어서 북한경제의 中·蘇 의존도는 무역이나 대외채무면에서 보더라도 60% 이상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2〉 외채 규모

구 분	단 위	1988년	1989년
외 채 총 액	억\$	52.0	67.8
(대 서 방)	〃	(27.3)	(27.4)
(대 공 산 권)	〃	(24.7)	(40.4)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은 외채상환 불능으로 인해 외국으로 부터 자본과 기술의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자 1984년 9월에는 「합영법」을 발표하여 외채 부담을 지지 않고서도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였

42) 앞의 자료. p.25.

다. 북한에서 발간된 자료에 의하면 「합영기업」이란 “한 나라의 會社·企業所와 다른 나라의 會社·企業所가 공동투자, 공동경영, 利潤의 공동분배, 損失에 대한 공동부담을 전제로 창설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³⁾ 반면 「경제합작」은 “서로 다른 나라들이 생산과 건설, 운수와 유통 등 분야에서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설정하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경제관계를 진행하는 국제 경제적 連繫의 형태”라고 한다. 그러므로 서방 국가와는 주로 합영형태를,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합작의 형태로 경제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합영법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의 합영 및 합작 실적을 보면 총 130여건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설립인가, 착공식, 조업식 등을 통해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유치건수는 66건 정도이다. 그 중에서 76%에 해당하는 50건이 在日 朝總聯 商工人들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합영분야는 대부분 輕工業과 서비스 부문으로 되어 있다.

1986~1989년 기간중 조총련 상공인들과 계약이 체결된 합영기업의 총 투자규모는 약 113억엔(약8천만불)으로 1건당 평균 1.6억엔(약114만불)로 알려지고 있다.⁴⁴⁾

북한이 합영법을 발표하여 서방국가들로 부터의 합영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방 선진국 기업들이 이를 외면함으로써 그 실적은 사실상 매우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이 최근 대외 경제관계에서 직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는 소련과의 경제협력마찰이다. 소련은 내부 경제사정의 악화와 북한이 폐쇄체제를 고수함으로써 쌍방 경제협력 방식의 전환을 모색해 왔는데, 1990년 11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무역회담에서는 1991년부터 북한과의 무역거래에 과거와는 달리 국제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경화로 결제한다는데 합

43) 북한사회과학원, 「경제사전」, 1985.12. 참조.

44) 월간 「조선자료」 1990.5 참조.

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 경제협력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최근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서두르는 중요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4. 南北經濟統合의 可能性

가. 民族共同體 回復의 必要性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경제는 분단 이후 45년동안 사회주의 計劃經濟體制의 원리 속에서 나름대로의 경제건설과 발전을 지속해 왔다고 하겠으나 그 성과는 자본주의 市場經濟體制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한국에 비해 매우 뒤떨어진 상태에 있으며, 최근 상황은 분단 이후 최대의 경제적 危機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89년 북한의 산업 생산활동은 에너지 및 원자재 부족으로 인해 산업 시설의 稼動率이 45% 수준으로 낮아지고 실질경제성장률은 2.4%로 떨어졌다. 따라서 남북한 경제력은 국민총생산(GNP)을 기준으로 할 경우 10對1로, 1인당 GNP는 5對1로 그 격차가 심화되었다. 또한 국제경제 관계에서 남북한의 현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무역 규모는 1989년 현재 남한이 북한의 25배, 수출은 31배나 되어 엄청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력의 격차로 인해 북한이 우세를 유지해 왔던 군사비 지출 규모도 '80년대 이후 열세로의 반전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북한은 대남군비 경쟁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89년 현재 북한은 GNP의 21.3%를 실질군사비로 지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비 규모는 44.9억불 정도이나 남한은 GNP의 4.4%만을 국방비로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는 북한의 2배 이상인 91.8억불에 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경제현실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敵對的 경쟁관계에서 共存의 協力關係로 전환시키지 않을 수 없는 기로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80년대 말 東歐 諸國의 민주화 개혁이 급진전을 보인 결과 '90년대의 국제질서는 동·서 이념적 갈등구조가 와해되는 반면

국가와 민족의 實利 문제가 새로운 갈등구조로 대두되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질서 속에서는 남북의 분단이 과거보다 더 큰 민족적 역량의 손실을 강요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이념적 대결 차원을 과감하게 탈피하여 남북경제통합이나 민족경제공동체의 회복을 반드시 실현해야할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다. 또한 그러한 노력은 경제력이 북한보다 우세한 남한이 이니셔티브를 쥐고 추진할 때에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南北交易 現況

남과 북이 현재와 같이 相異한 경제체제 위에서 經濟共同體를 회복하는 가장 초보적인 형태는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88년 「7·7 대통령 특별선언」의 발표와 동년 10월 7일 대통령 특별선언의 실천을 위한 경제부문 후속조치가 발표됨으로써 남북간에는 북한이 호응만 한다면 직접 교역도 가능한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치·군사문제의 우선적 해결을 주장함으로써 현재까지도 남북간에는 직접적인 물자교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제 3국을 통한 소규모의 간접교역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7·7선언 이후 지금까지 추진된 남북물자교역의 실적을 보면 1990년 10월 말 현재 정부가 북한으로 부터 물자반입을 승인한 실적은 총 120건이며 반입 품목 수는 144개, 반입 금액은 총 4061.6만불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반출 실적을 보면 총 3건에 3개 품목, 16.2만불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남북물자교역은 남한의 일방적인 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남북교역에서 나타난 반출입 상품내역을 분석해 보면 반입 규모가 가장 큰 상품의 순으로 亞鉛塊, 철강재, 감자, 시멘트, 무연탄, 電氣銅, 수산물, 한약재, 生絲, 니켈 및 鉛塊 등으로 되어 있으며 반출 품목은 담배필터, 의류(잠바), 설탕 등이다.

반출입 품목의 내용으로 볼 때 북한으로 부터 반입된 품목은 대부분이 1차 금속제품, 광산물, 농수산물 등 가공도가 낮은 제품으로 되어 있는 반면, 반출품은 소비재 상품으로 되어 있어서 남북교역은 수직교역의 형태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 공산품의 질적차이는 북한이 남북직교역을 거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되고 있다.

한편 남북물자 교역액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교역 첫해인 1988년의 반입은 3개월 동안 103.7만불로 월평균 34.6만불 수준이었으며 1989년에는 2,223.5만불을 기록하여 월평균 185.3만불로 급증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는 10월 말 현재까지 10개월동안 1,734.4만불을 기록하여 월평균 반입액은 173.4만불로 전년도 월평균 수준보다 6.4% 감소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1990년도 제130회 임시국회에서는 남북간의 人的·物的交流를 뒷받침하고 이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남북협력기금법」을 의결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정부는 1993년까지 총 3,000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중에 있다.

그러나 남북 경제교류·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북한의 경직된 태도이다. 북한은 경제회담 재개를 위한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중인 남북총리회담에서도 북한은 불가침문제와 교류협력문제를 포괄하는 기본합의서를 채택하자는 우리의 주장을 거부하고 불가침선언만을 고집함으로써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다. 經濟統合의 可能性

1990년 7월 東·西獨 간에 역사적인 經濟統合이 실현된 이후 남북 經濟統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은근히 이를 기대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한 남북경제공동체의 회복과 경제통합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공동체의 회복은 남과 북이 현 체제를 상호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국제분업의 원리에 따라 물자와 자본, 기술 및 노동력 등 전 부문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하나의 민족경제권을 회복하여 분단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제통합은 남과 북의 경제체제가 하나로 되는 조건 위에서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도 경제적 主權만은 남과 북에 별개로 귀속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남북경제공동체의 완결적 형태가 경제통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경제통합과 함께 정치적 통합이 실현되면 남과 북에 나누어져 있던 경제적 주권도 통합된 정부에 귀속되므로 완전 통일의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현 단계에서 남북경제통합이 실현될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은 첫째, 북한이 사회주의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선택하거나 둘째, 남한이 현 체제를 포기하고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선택하거나 셋째, 남북한이 현재의 자기 체제를 포기하고 제 3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공동으로 창출해 내어야 한다는 3가지 중의 하나가 만족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의 영향으로 동독 국민들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포기하고 서독의 경제에 흡수통합되는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경제통합이 가능했던 것이다.

한편 동독이 서독 경제에 흡수통합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분단직후 부터 양독간에 지속되어 왔던 인적·물적교류와 정보의 교환을 통해 서독의 경제력과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동독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남북경제통합은 먼저 북한사회의 개방과 개혁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북한은 1970년대 6개년계획의 착수와 함께 계획 수행에 필요한 자본과 설비의 조달을 위해 서방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고 1980년 10월 「로동당」 제 6 차대회를 계기로 북한에 우호적인 자본주의 국가와도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천명함으로써 경제개방의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1984년 9월에 발표된 「합영법」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것은 1979년 중국이 「중외 합자경영 기업법」을 발표하여 경제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데 영향을 받은 것이다.

한편 경제개혁의 측면에서도 1970년대 후반부터 미약하나마 부분적인 변화의 징후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예를들면 1978년 지방예산제 실시에 관한 중앙인민위원회 정령 발표, 1979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 6 기 3 차회의 이후 독립채산제의 강화, 1981년 및 1985년의 지방경제관리기구의 개편 등을 들 수 있다.

1985년 8월 「로동신문」은 「사회주의 經濟槓杆의 합리적 이용」이란 논설을 발표하여 시장경제적 요소를 경제관리에 도입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개혁의 징후를 나타내어 주목된 바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5년을 고비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는데 특히 동구 제국의 개혁·개방이 급진전 되자 북한은 이러한 추세를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는 한편 1989년 김일성 신년사에서는 「우리식대로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구호를 내어 걸고 주변 사회주의국가들의 개혁·개방에 따른 영향을 차단하는데 주력해 왔다.

그러나 1989년 말 동구 사회주의정권이 차례로 붕괴된 이후 부터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다소 유연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1990년 김일성 신년사에서는 동구사태에 대해 방어적 논리와 사회주의의 역사법칙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방법도 변천되는 현실에 맞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 「증산과 절약 투쟁」을 정치사상 교양사업과 연결시켜 주민들의 사상적 동요를 방지하기 위한 체제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근 북한의 태도는 체제유지를 위해 개혁은 외면하면서도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대외개방을 시도하는 양면 전략을 견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향후 부분적인 개혁과 개방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공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60년대와 '70년대 중 동구제국의 부분적 개혁이 모두 실패로 끝난 역사적 경험에서 입증되었다.

이러한 여건을 종합해 볼 때 북한내부 정치상황에 돌발적인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남북한간에도 당장 독일과 같은 경제통합이 가능하리라는 성급한 기대는 가질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내외 환경의 변화는 북한이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변화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전망도 가능케 하고 있다.

5. 結 言

資本主義와 社會主義 간의 體制 우월성에 관한 論爭은 최근 社會主義 국가들의 개혁·개방이 급진전됨으로써 이제 종결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북한은 共產主義의 理想이 실현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경직된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고수하고 있다.

1989년 현재 남북한 經濟力의 격차는 국민총생산(GNP)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북한은 남한의 1/10, 1인당 GNP는 1/5 정도의 열세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주변 사회주의국가들이 개방되면서 우회적으로 알려진 북한경제 실태는 더욱 비관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생활은 지역간, 계층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社會正義가 완전히 상실된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이 김일성 유일체제의 붕괴로 이어지는 정치적 위기를 우려한 나머지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는 달리 개혁과 개방을 외면할 수 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으며, 그것이 경제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과 같은 대내외 여건으로 인해 북한은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7·7선언 이후 우리의 지속적인 직접교역 제의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겨우 소규모의 間接交易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그러나 국제정세의 도도한 흐름과 북한의 경제침체는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무한정 거부할 수 만은 없는 한계상황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최근 북·소 경제협력 형태의 변화와 대일국교수립 교섭과정에서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현재의 남북관계로 볼 때 독일의 경우와 같이 당장 경제통합이 실현될 수 있다는 성급한 기대는 가질 수 없으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하여 남북한 직교역을 비롯한 각종 인적·물적 교류를 추진해 나갈 경우 경제통합의 시기가 의외로 빨리 닥쳐올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Ⅲ. 社會篇

北韓의 社會構造와 住民生活

任 鍾 燮 (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言	119
2. 社會構造	121
가. 社會政策	121
나. 北韓社會의 異質性	122
다. 統制的 組織社會	123
3. 住民生活	128
가. 衣食住生活	128
나. 家庭生活	135
다. 職場生活	137
라. 消費生活	141
마. 餘暇生活	143
바. 冠婚喪祭	145
사. 歲時風習	148
아. 宗教生活	149
자. 保健醫療	153
차. 言論實態	159
카. 社會的 逸脫	162
4. 結 言	164

1. 序 言

南北分斷 46年の 歴史는 南과 北을 思想과 理念을 달리하는 이질적 체제로 양극화 하였고, 이에 따라 南과 北은 각기 다른 생활양식과 감정을 형성시켜 왔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고 있는데 반해, 北韓은 北韓式 공산주의 이념에 따라 개인의 선택보다 전체의 이익을 앞세운 전사회적 동원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北韓은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내세워 김일성 일인독재체제를 정당화 하면서 김일성과 당이 제시한 방법으로 행동하고 생활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人間은 원래 다양한 욕구를 가진다. 생존과 관련된 의·식·주 등의 생리적인 욕구를 비롯하여 안전, 소속, 지위, 인정, 성취, 자유등의 사회적 욕구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 이러한 욕구들은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생긴다.

그러나 북한에 있어서 모든 생활의 조건은 黨의 統制에 의하여 개인의 욕구를 의도적으로 관리하여 집단의 욕구에 귀속시키고 있다.

북한사회는 金日成, 金正日과 黨을 위해서 그리고 革命과업 수행을 위해서 투쟁하는 方向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주민들이 지상목표로 삼고 있는 사회적 욕구는 당으로 부터 결정지어 진다. 그것은 당의 결정이 곧 보다 높은 지위, 권세, 안락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선전자료에 의하면 “국가가 인민의 생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인민생활을 골고루 급속히 향상시키면서 생활수준의 격차를 없애는데 힘을 쏟고 있다”고 한다.

즉 주민의 의·식·주 문제를 골고루 원활하게 해결하는 일에 국가의

깊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노동자, 사무원은 무료나 마찬가지로 가격으로 식량을 공급 받고 있으며, 의복도 그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고, 주택을 통해서도 막대한 추가적 혜택을 받고 있는데, 주택은 국가자금으로 건설되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상업은 본질에 있어서 주민에의 공급활동이며, 주민의 생활상의 편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기본적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계층별, 계절별의 수요를 고려하여 계획적으로 생산된 상품들은 전국의 상업망에 계획적으로 할당되며, 근로자들에게 균등하게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급식사업과 편의 서비스사업도 크게 신장되어 그러한 시설들은 근로자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문화적인 것으로 해주고 있다는 것이며, 그중에서도 부인들의 가사부담을 덜어주어 적극적으로 직장에 진출하여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북한은 “金日成의 人民的 시책에 의하여 失業者도 걸인도 없으며, 누구나 의식주 문제로 신경을 쓰는 일이 없이 넉넉하고 文化的인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다.¹⁾

그러나 북한의 선전대로 하더라도 주민생활은 集團主義原則에 따라 黨의 계획적 통제와 조직적 배려로 個人의 선택이 극도로 제약을 받고 있으며, 당과 政府에 의해 철저히 통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北韓의 이러한 자료를 참작하면서 그들의 사회구조와 주민생활에 관해 구체적으로 살펴 보겠다.

1) 조선개관(평양, 외국문출판사 1987) 국토통일원 번역자료 1988 pp.150-156

2. 社會構造

가. 社會政策

北韓社會政策의 기본은 계급정책인데 그 내용은 계급노선과 계급교양을 앞세워 金日成 體制의 기반을 공고화하고 정치권력의 안정유지를 도모하려는 일련의 지배체제 확립과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계급정책은 사회주의 건설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사회주의 혁명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北韓은 人類歷史를 계급투쟁과정에서 보는 공산주의의 계급투쟁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北韓의 계급정책은 프롤레타리아 독재이론에 입각한 온 사회의 革命化, 노동계급화의 실현에 있다.

金日成은 “사회주의·공산주의를 건설하는 과정이란 노동자, 농민, 인텔리 등 사회의 모든성원을 다 革命化하는 과정이며, 전 사회를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여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이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표면상으로 볼때,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는 것이며,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北韓이 주장하는 공산주의 사회정책이란 계급이 소멸되고 계급이 생성될 수 있는 특질적 토대를 없앤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강력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계급을 소멸시키기 위한 계급투쟁을 전개 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소위 반당, 반혁명분자에 대한 색출과 감시를 강화하여 전 사회를 조직화하며 전 주민을 공산주의적 人間

으로 개조하는 과정으로 일관된다.

북한이 이와같은 정책 목표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강화시켜온 사회분야의 정책으로는 계급정책을 비롯하여 전통적 가족제도와 생활품급의 말살정책, 의·식·주 생활 통제정책, 종교말살정책, 노력강화정책, 사회 통제정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반 사회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전주민에 대한 성분조사사업과 계층구분사업, 노동당의 조직적 지도사업과 감시계통의 조직화, 김일성 가계의 우상화 조작과 사상적 교화작업을 통하여 전사회적 동원 체제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나. 北韓社會의 異質性

北韓은 모든 歷史的사실을 프롤레타리아적 계급의식으로만 해석하는가 하면 항일독립운동사 마저 김일성일가의 날조된 우상적 신화로 변장시켰다.

그리고 근대적 민족국가가 지향하는 평화사회, 복지사회, 자유사회와도 거리가 멀다.

남조선해방을 성취하겠다는 혁명적 목표를 설정하고 파쇼국가적 체제하에 병영사회를 건설하고 주민을 열광적으로 몰고가는 비이성적 사회이다.

또한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사람이 모든것의 主人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상식적인 내용을 主唱하면서도 모든것을 金日成에 귀결시키고 마는 심각한 言語歪曲속에 있다 하겠다.

그리하여 人間속에 잠재한 천부의 재능들을 다양하게 꽃피우고, 고귀한 인격을 계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개성적인 느낌과 생각과 믿음을 빼앗고 오직 金日成 1인만의 느낌과 생각과 믿음에 흡수되어야 한다.

한편 北韓은 사유재산소유를 불허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로서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령 발표와 동시에 지주로부터 토지를 몰수하여 소작농이나 빈농에 무상분배하였고, 동년 6월에는 산업국유화 법령을 발표하여 모든 생산수단을 국유화 하였다.

그러나 농민에게 분배된 토지는 1954년 협동농장을 조직하면서 다시 몰수하기 시작하여 1958년까지 모든 농민이 협동농장에 강제 가입됨으로써 토지 소유권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개인 상공업도 이 시기에 완전히 몰수되어 북한주민은 한낱 노동력을 제공하는 생산 도구로 변질되고 말았다.

다. 統制的 組織社會

(1) 사회통제 구조

北韓에서의 社會統制는 체제와 權力유지를 위한 사상적 통제, 黨的統制를 강화하며 사회주의적 규범에 따르도록 강요한다.

이러한 통제는 전사회를 조직화 하기 위한 정책노선이 뒷받침하고 있다.

즉 1946년의 토지개혁을 비롯하여, 노동법령(1946), 국유화법령(1946), 농업집단화(1953~1958), 개인상공업말살(1957~1958), 중앙당 집중지도사업(1958~1960), 주민등록사업(1956~1960), 주민재등록사업(1966~1967), 51계층분류(1967~1970), 당중재교부(1973), 주민요해사업(1972~1974), 공민증대조사업(1980~), 월북자 및 외국귀환자 계층분류사업(1980~)과 천리마운동(1958~),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1975~), 3대혁명소조운동(1973~), 자연개조운동(1976~)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 통제방법에 있어서도 黨의명령, 지시, 상호감시 및 조직 등에 의한 강제적이며, 직접적인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人間關係의 硬直을 초래함은 물론 집단적 통제방법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과 공포적인 상황에서 不安한 생활을 하게 된다.

또한 權力과 체제의 존속을 절대시하는 가운데 사회주의 규범의 준수를 요구하기 때문에 특정의 행동이나 동기와 상황에 관계없이 그들이 규정하는 규범에 맹종하도록 강제적 방법이 사용된다.

北韓에서는 당의 감시, 감독 및 사상적 통제를 위한 정치적 통제방법과 함께 경제적 통제방법을 사용한다.

개인의 생산과 소유를 금지시키고 당에서 일상생활의 모든생계수단을 직접 장악 함으로써 黨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당장 생계위협에 직면하게 되어 있다. 때문에 개인의 주체적 판단은 필요가 없고 당의 명령에 절대 무조건적인 복종만이 요구될 뿐이다.

(2) 조직 통제 구조

북한의 모든 조직은 당을 정점으로 정치적 목적달성의 수단으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참여자체가 강제적일뿐 아니라 맹종이 강요될 뿐이다.

북한은 자생적 조직의 생성을 개인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 문벌주의, 종파주의로 규정하여 배척할 뿐 아니라 이를 혁명적 투쟁의 타도 대상으로 한다.

그대신 당조직을 最頂点으로 하며 당의 후비대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외곽조직을 육성하고 이의 활동을 권장한다.

또한 이와같은 조직은 일정 연령에 도달되면 그가 어느계층의 구성원 이든 한가지의 조직에는 꼭 속해지도록 짜여지므로 조직의 가입은 일종의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직생활은 철저하게 짜여진 계획에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바 14세이상의 비당원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社勞靑”의 제일 말단조직인 里사로청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회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里 社勞靑會議 實態〉

구 분	내 용
강 연 회	○ 月1회(1~2時間), 里 선전실에서 실시 ○ 주요내용 : 黨政策貫徹, 김일성교시, 김정일말씀학습 등
생 활 총 화	○ 10日총화, 月총화, 分期총화 ○ 期間中 生活決算 등 자아 및 상호비판, 정치사상학습, 작업 달성 독려, 業務할당 등
궐 기 모 임	○ 수시 실시(모내기, 김매기, 秋收期, 新政策하달시) ○ 里 전체 사로청원 및 3大革命 小組員이 참가하여 靑年突擊隊組織 및 목표 조기 달성 결의다짐
학 습 회	○ 週5회(1時間) ○ 작업반 및 학교단위에서 初級團體 社勞靑員 대상으로 金日成 敎示, 金正日말씀 학습 金日成父子 德性실기 학습, 사로정조직생활 및 활동방향 학습
회 상 기 발표 모 임	○ 농번기 기간중 실시 ○ 작업장 및 학교별로 빨치산의 逆境 回想 등을 통하여 思想性과 노력동원 極大化

북한에서의 모든조직은 노동당을 정점으로한 수직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사회계층의 구조 역시 그렇다. 이는 집단주의로 인한 개인 또는 개성이 무시되는 획일적인 체제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북한의 조직 및 통제는 타공산국가와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정치성과 사상성을 기초로 계층과 조직을 구분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上向意志는 선택의 여지가 없도록 구성 되었으며,

둘째, 개인 또는 개성은 集團의 일부분이 되도록 구성됨으로써 독자성, 유연성 보다는 귀속성, 의타성이 많은 경향을 띌 수 밖에 없고,

셋째, 개인의 경쟁 보다는 단체 또는 집단간의 경쟁운동으로 투쟁적이고, 好戰的인 사회적 성격이 형성되도록 조직되었으며,

넷째, 유아기부터의 집단생활과 빈번한 계층 재분류사업 등으로 항상 집단주의에서의 이탈을 두려워하는 불안의식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비행, 약점등을 폭로, 비판하도록 조직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3) 사회의 계층구조

북한이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착취계급을 청산하고 그 반항을 진압하며 온갖 계급적 차이를 없애고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²⁾

그러나 북한정권은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정치적이며, 사회적 기능에 준하여 특권계급의 형성을 불가피하게 하였다.

이와같은 성분분류는 중앙당집중지도사업(1958~1960), 주민등록사업(1964~1967)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였다.

성분은 크게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으로 구분된다.

출신성분은 부모의 직업과 재산관계 등을 말하며 사회성분이란 성장과정과 경력을 뜻한다.

북한사회에서는 성분분류가 당성이나 출신성분을 중심으로 좋은집안과 나쁜집안을 확연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차별정책은 政權과 함께 자자손손 계승하도록 되어 있다.

북한이 이와같이 성분을 철저히 분류하여 계급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金日成과 노동당을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격리시키려는데 있을 뿐만아니라 반당, 반혁명적 세력의 색출과 사상성을 점검하여 주민들에 대한 정치 사회적 통제를 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북한은 전주민을 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으로 3대분하고, 그것을 다시 51계층으로 분류해 각계층에 상응하는 특혜조치와 제재조치를 제도화 하였다.

2) 정치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175

<북한 주민의 성분분류>

(80년대 중반)

구 분	대 상	비 율	대 우
핵심 계층	○혁명전사 유가족 ○피살·전사자 가족 ○당·행정간부 가족 ○군간부 가족 ※ 공산체제 통치계층	27%	○당, 정권, 군간부 등 용 ○타 계층과 분리 특혜 조치(진학, 승진, 배급, 거주, 의료)
기본 계층	○일반노동자·농민가족 ○일반사무원 가족 ※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군중	45%	○각종 하급간부 등 기술자 진출 ○극소수 핵심층으로 승진
복잡 계층	○지주·자본가 가족 ○日帝공직자·종교인 가족 ○월남·부역자, 포로 가족 ○숙청·범죄자 가족	28%	○유해, 중노동에 종사 ○진학, 입학, 입당 봉쇄 탄압 ○제재, 감시, 포섭대상으로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제 : 강제이주, 격리, 수용 • 감시 : 지명하여 항시 동태 감시 • 포섭 : 집중적 교양, 세뇌 ○극소수 기본층으로 재분류(자녀)

3. 住民生活

가. 衣·食·住 生活

(1) 의생활

북한의 의류공급은 신분에 따라 차등 공급제가 실시되고 있다.

즉 계층에 따라 중앙공급대상과 일반공급대상으로 구분, 공급량과 품종을 달리한다.

중앙공급대상은 급수에 따라 2~4년에 1벌씩, 양복 또는 복지를 염가로 공급하고 있으며, 일반 공급대상자에 대해서는 1년에 1벌정도 노동용물자라는 명목으로 광복, 포프린, 스포츠복 등이 배급된다. 그러나 예술가, 당·정간부, 기자, 교원들에게는 의류를 특배하고 있다.

일반 주민들은 1950년대 말까지는 소위 千里馬時代의 생활양식 준수를 강조함으로써 男子는 인민복에 레닌모(帽), 女子는 흰저고리에 검정치마의 한복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부터 본격화된 재일 조총련 계교포의 복숭사업과 관련, 입북자들의 옷차림과 1970년대 초부터 남북 회담이 실현되면서 韓國人의 옷차림에 영향을 받아 김정일의 지시(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와 생활미감에 적응하라)에 따라 나름대로 단조로운 의복 패턴으로부터 탈피하여 색상과 무늬가 다양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다양화 추세는 일상복보다 외출복에서 나타났는데 1970년대 후반기 이후부터 각종 옷전시회(춘추의류전시회, 기성복전시회 등), 옷 품평회등을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장을 신체조건과 조화되도록 노력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도시 여성들에게 출퇴근등 외출시에는 필히 화장을하고 양장 또는 색깔있는 화려한 옷을 입도록 할 뿐 아니라, 일부 신체 노출이 있는 의상도 더러 나타나고 있으며, 구두도 하이힐을 신도록 적

극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여학생의 교복도 점차 양장으로 교체하였다.

男子들에게는 신사복과 와이셔츠, 넥타이를 장려하고, 짝짝이색 의복(콤비), 잠바 등을 착용토록 권장하고 있어 다양화, 세련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일반주민들은 신사복은 구입하기가 어렵고 착용시에도 세탁등이 불편하여 인민복을 계속 입는 실정이다.

평양을 비롯한 도시에서는 외출시 복장이 불량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라는 金正日의 지시에 따라 벌금을 물린다 하니 이는 北韓사회의 허상과 실상의 괴리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근래에 와서는 평양과 각 직할시 및 도등에 피복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연구소에서 만들어낸 옷으로 전국적인 의복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이 연구소의 사업으로는 형태, 설계, 가공 공업화계획 등의 연구를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는 김정일이 주장하는 「人民生活向上運動」의 일환으로 발간되는 「사회주의 생활문화」라는 패션잡지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다.³⁾

그리고 金正日은 1988년 2월 29일 소위 “시대적 미감에 맞게” 창안제 작된 의류도안, 신발도안 등 각종 생활용품 도안과 제품등이 전시된 경공업 전시관을 시찰하면서 “주민들의 물질적 문화적 욕구를 원만히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원자재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경공업혁명을 계속벌여 나감으로써 질 좋은 여러가지 경공업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할 것”을 지시하는 등 경공업제품의 질적 개선과 量産을 촉구한바 있다.

특히 이 전시회의 의류부문에서는 7백80여점의 도안을 비롯해 남성용 양복, 잠바, 셔츠, 바지 등과 여성용한복, 외통옷(원피스), 동강이웃(투피스), 뜨개옷, 아동용의류 등이 많이 출품되었으며, 또한 신발류에서는

3) 岡田聰, 「平壤の 人民生活(上)」(現代 コリア 1988.5) pp.41-42

구두, 운동화, 샌들, 장화, 그리고 모자종류에서는 종이모자, 초물모자(밀집모자)등이 주종을 이뤘다고 한다.⁴⁾

한편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불려 일으키겠다”는 북한방송 논조로 보아 입는 문제를 비롯하여 주민들의 물질 문화적 욕구는 점점 높은 수준에서 제기 되고 있는데 경공업분야에서 많은 취약점을 안고 있는 북한이 주민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줄 지는 미지수이다.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1989. 7) 준비와 관련 평양주민들에게 전시효과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배급해 준바 있으며, 앞으로 주민복장의 변화는 金正日후계체제의 구축과 서방세계로부터의 자본기술 도입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2) 식생활

북한은 사회주의 정권수립이후 지금까지 농업생산체제의 사회주의화를 통해 “농촌경제의 수리화, 전기화, 종합적 기계화 및 화학화”등 농업근대화를 추진하여 어느정도의 성과를 거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식생활에 있어서는 식품가공 및 처리기술, 저장수단이 전반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데다 중앙당국의 생산과 공급에 대한 철저한 통제로 각종식품의 적시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식생활의 향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식량에 있어서도 북한은 1957년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로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제로 할데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식량의 자유판매제를 폐지하고 노동자 사무원에 대해 식량을 완전 배급제로 전환하였다(단 협동농장원은 연말결산 분배).

그리하여 개인의 식성과 기호에 의한 식생활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요구하는 개인소비의 절대량마저 충족되지 못하여 최소한의 연

4) 内外通信(자료판 제614호) 1988.11.11

명에 그치는 실정이다.

쌀생산량의 부족은 심각한 실태로서 金日成은 1982년 시정연설에서 “쌀은 공산주의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농업부문의 개발을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는가 하면 종래의 의·식·주라는 語順을 식·의·주로 변경 사용하고 있다.⁵⁾

金日成은 “옷이나 집같은 것은 없어도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⁶⁾라고 강조함으로써 식생활문제를 최우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1,500만톤 알곡고지 점령”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30萬정보 간석지조성, 20萬정보 새땅찾기와 다수확郡 칭호쟁취운동 등의 각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식량배급은 통상 15일마다 실시되는데 각 직장에서 발급하는 배급 카드로 里, 洞배급소에서 유상으로 배급 받으며, 대상자의 신분과 직위, 지역, 시기 등에 따라 배급량, 쌀과 잡곡의 비율등에서 차등배급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출장 또는 여행시에는 미리 발부받은 糧券과 식대를 함께 지불해야 한다.

방문의 경우에 통상 도시에서 농촌으로 갈때는 양권을 지참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참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배급시 백미와 잡곡의 비율은 평양이나 직할시는 6(쌀) : 4(잡곡)이고, 지방은 작황에 따라 다르고 산간오지에서는 2(쌀) : 8(잡곡)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70년 11월 노동당 제 5차 대회에서 부녀자들의 노력동원 극대화를 위해서 강조된바 있는 밥공장의 대폭확대결정에 따라 평양등 도시지역

5) 노동당 제 6기 12차 전원회의 1986.12.27

6) “인민생활을 더욱 높일데 대하여” 김정일, (노동당출판사 1984) p.7

에서는 주식을 가공하는 밥공장과 반제품으로된 부식물 및 국거리를 배급하는 봉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다.⁷⁾

그로 인하여 북한주민 중 가족이 적은 가정은 15일간 먹을 식량을 배급받을때 양곡이 아닌 양권으로 받는다고 한다.

이는 가정에서 취사하여 식사하는 것보다 밥공장의 아침저녁 매대에서 양권으로 먹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⁸⁾

부식은 간장, 된장, 고추장, 식용유 등을 공급카드에 의해 구입하고, 기타 부식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김치, 콩나물, 두부, 야채 등은 식료품상점에서 임의 구입이 가능하다.

고기류는 명절 특배를 통하여 할당되고, 김일성 부자 생일, 당창건일 등에 세대당 돼지고기 1-2kg, 생선류 2-3kg을 배급 받는데 배급받는 대상과 시기, 수급사정에 따라 공급품목과 수량은 다소 달라진다.

만약에 배급 이외의 주부식을 구입하려 할때는 비싼값으로(배급쌀 1kg : 8전, 암거래 : 10원)구입할 수 있다.

지상천국임을 자랑하는 북한은 밀려오는 개방의 물결에 대비하여 우선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 즉 주요도시의 정비와 건축물, 주민의 의복 등에는 상당한 變化를 보이고 있으나 먹는 문제는 일반주민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식량부족 현상은 절대량의 부족에도 문제가 있으나 金日成의 교묘한 統治術의 일환으로도 평가되고 있다.

金日成이 음식이라는 人間의 제일차적인 욕구를 統治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군사비 부담, 전시적 상징물의 축조(주체사상탑, 개선문, 류경호텔, 5·1경기장, 광복거리 등)에 투입하는 재원을 먹는문제 해결에 투입한다면 북한주민들의 식생활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도 있을

7) 노동신문. 1984. 4. 2

8) 북한실상(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p.100

것이다.

〈북한의 식량 배급기준〉

(지역에 따라 약간 다름)

구 분	배급량(g), 1인 1일기준	백미 : 잡곡 혼합비율
당 및 정권기관간부	700g	10 : 0
특수군인(경보병)	800g	7 : 3
군인	700g	3 : 7
重노동자	800g	3 : 7
일반노동자, 사무원	600g	3 : 7
대학생	600g	3 : 7
고등중학생	500g	3 : 7
인민학생	400g	3 : 7
유치원이하 아동	300-100g	3 : 7
부양가족등 무직자	300g	3 : 7

출처 : 북한개요 1986

(3) 주생활

북한에서는 個人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며, 성분과 직위에 따라 등급별로 규격화된 독립가옥 또는 연립주택, 아파트를 할당 받는다.

주택 형태는 주로 아파트와 2-3세대용 연립식 주택이며, 조립식 공법으로 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규격화된 아파트와 연립식 주택 형태는 시공의 경제성과 편의성 이외에 집단주의적 주거양식에 의거한 획일화 추구에 따른 것으로서 이른바 민족적 양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으라는 당시책의 결과로서 이는 노동력의 집단적 수용과 주민상호간의 감시, 통제 및 주민동원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데서 기인한다.

주택의 규모 및 시설은 주택의 규격화 집단화 시책으로 말미암아 주거

〈住宅事情(平壤)〉

區分	住宅型	家屋構造	入 住 者
特號	獨立 高級住宅	○獨立式 단층 또는 2층 住宅 ○庭園 ○수세식 변소 ○冷溫房 장치	○중앙당 부부장급 이상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인민군 소장급 이상
4號	新型고층아파트(세대당 20-30평)	○방2개 이상 ○목욕탕 및 수세식 변소 ○베란다, 冷溫水施設	○중앙당 과장급 이상 ○정무원 국장급 이상 ○대학교수 ○인민군 대좌 ○인민배우, 공훈예술인 ○기업소 책임자
3號	中級 單獨住宅 및 신형아파트(세대당 15-20평)	○방2 ○부엌, 倉庫	○중앙기관 지도원 ○도단위 부부장급 이상 ○기업소 부장 ○학교 교장
2號	일반아파트(세대당 7-10평)	○방1~2, 마루방 1, 부엌	○인민학교, 고등중학교원 ○도급기관지도원 ○일반노동자 ○시도과장급 ○사무원 ○도급기관지도원
1號	集團公營住宅	○방1~2, 부엌	○일반근로자 및 말단 사무원
	農村文化住宅	○單層 聯立住宅 ○방2, 부엌, 창고1	○협동농장원
	舊屋	○방2~3개의 農村 既存舊屋	○변두리 농민

생활 공간이 전적으로 협소하고 내외장도 거의 획일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택마다 독립적 부대시설도 제한되어 있다.

1980년대 초부터 평양시내 주택의 고층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0-40층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한 이래 남포, 원산을 비롯한 주요도시에서도 고층아파트(10-30층)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⁹⁾

그러나 연간 주택건설 목표달성의 부진과 공급대상 인구의 증가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70%선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부족한 주택사정 때문에 결혼하여도 쉽게 방을 할당 받을 수가 없어 상당기간 신혼부부가 별거하고 경우도 있고, 1세대용아파트 또는 주택에 2-3세대가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한 농촌의 경우 재래식 초가집을 지붕만 개량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평양에서는 1986년까지의 천리마거리 제 2기 주택건설, 그리고 1988년까지로 계획된 광복거리의 재개발에 따른 주택 건설 등이 이뤄졌으며, 1991년 완공을 목표로 낙랑거리, 하당거리 등을 새로 건설하고 이곳에 5만세대의 주택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주택형은 크게보아 당·정 부부장급이상이 거주하는 특호로부터 말단 근로자와 집단 농장원에게 할당되는 1호 주택에 이르기까지 5단계로 구분되는데 이는 주택 배정을 계급과 성분에 따라 차등화 하는 것을 제도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家庭生活

가정이란 사회구성의 기본단위로서 人間的 삶의 공간이며, 모든 사람들의 최종적 안식처가 된다.

9) 노동신문, 1984. 4. 2

가정생활은 그 사회의 체계적 특성에 따라 좌우 되기도 하지만 가정생활의 유형이 사회구조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한 국가의 국민성 형성의 기초가 된다.

북한은 헌법 제63조에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가족에 대한 개념은 마르크스, 엥겔스의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役割에 중점을 두어 왔다.

즉 “생산의 성장, 사회의 진보에 따라 소가족형태가 생성 변화해왔으며…… 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발생한 사유재산과 계급, 그리고 국가의 소멸과 함께 가족도 소멸해야 한다.”¹⁰⁾라는데 기반을 뒀으로써 가족의 개념과 형태를 集團主義體制에 알맞는 형태로 변형시키려는 작업을 지속하여 왔다.

그리하여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서열구조와 同族集團의 조상숭배 개념은 배제되고 소위 사회주의적 가족의 개념으로 대체시킨 것이다.

가족구성의 변형은 호적제도를 말살하는 것으로부터 진행된다.

호적제도와 친족개념을 봉건사회의 잔재라 하여 이를 폐지하고 그대신 1946년 9월 1일부터 공민증제도를 실시하였다.

이로써 친족범위가 직, 방계혈족으로 제한 되었음은 물론 주민들의 동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주민행정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였다.

또한 가족중심의 경제적기반이 무너지고 家父長的 위계질서의 파괴, 그리고 대가족제도의 붕괴를 초래케 하였다.

北韓은 가정이 人間적인 삶의 터전이기에 앞서 黨의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黨의 課業을 촉진하는 媒介集團으로서의 도구적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가정의 혁명화를 표방, 전래의 전통적 가정을 낡은

10) 가족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마르크스, 엥겔스 1984)

생활양식의 온상으로 규정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낡은 사상습관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때문에 北韓의 가정은 최저생산 단위인 동시에 社會主義革命 이론의 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나아가 가정의 정치화가 더욱 촉진되어 가고 있다.

北韓에서는 가정생활까지 黨的, 政治的 介入이 이루어 짐으로써, 혁명수행 단위로서의 家長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가족성원들은 부부 형제이기에 앞서 사상적 동지가 되어야 한다.¹¹⁾

즉 가정은 혁명의 세포 단위가 되며 전통적 친족 범위는 직·방계혈족으로만 국한하고, 가정의 형태가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었다.

다. 職場生活

북한에서는 개인이 직업과 직장을 선택하는 권리와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고 있어 취업희망자의 의사보다는 당과 정권기관의 조정, 통제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

즉 북한 주민의 직장 배치는 중앙집권적 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할당 배치되고 있다.

그것은 北韓의 모든 직장이 社會主義經濟體制하에서 노동당의 획일적 지도, 감독을 받으며, 관리되고 모든 농장, 공장, 기업소가 국유화 집단화되었기 때문이다.

직장 배치에 있어 가장 核心的인 판단기준은 性分(출신성분, 사회성분)과 黨性이라는 이른바 정치적 표징에 의해 이루어진다.

核心계층은 당·정·군간부로 등용될 수 있고 승진이 보장된다.

11) 조선중앙연감(1984. p.302)

기본계층은 각종 하급간부나 기술자로 진출하고 극소수만이 당·정기관에 상향 이동되나 책임적 지위(위원장, 단위기관책임자)에 까지 승진되기는 어렵다.

복잡계층은 有害 중노동직종에 배치된다.

직장 배치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또하나의 부차적 기준은 실무적 표징인 직무수행능력으로써 여기에는 학력, 자격, 전개력, 실무능력, 활동력, 근무년수, 근무평정 등이 고려된다.

특히 이 가운데서 學力이 사회적 상승이동의 유용한 수단이 되는데 기본계층과 복잡계층의 자녀들은 진학에 있어 엄격한 심사와 규제를 받고 있어 이들이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나은 직종 및 직장에 진출할 기회는 어렵게 되어있다.

직장 배치과정을 보면 모든 취업은 전적으로 당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고 대상자는 시도행정위원회의 노동부(노동자의 경우), 간부부(사무원 및 간부직원의 경우)를 통하여 배치장, 혹은 소개장을 발부받아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북한의 인사행정의 기본원칙은 정치적 신임도를 기준으로 직장을 알선하며, 이 경우에도 오직 중앙의 수급계획에 의한 직장배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그 다음으로 참작되고 직장의 자의적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된다.

이같이 북한에서는 노동의 權利, 즉 취업의 기회는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

즉 정권기관의 노동력은 흡수계획에 따라 모든 노동능력자를 일정한 직업에 배정하기 때문에 완전 취업이 보장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직업 직장의 선택시 개인의 능력, 성향, 의사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실업률이 그만큼 높은 편이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것이다.

일반적으로 당간부의 자녀는 중앙당과 정무원 등 중앙기관에 배치되

고 평당원의 자녀는 학업성적이 우수해도 대개 지방의 기관 및 기업소에 배치된다.

이와같은 획일적, 차별적 인력배치에 따른 주민들의 불평, 불만과 태업적인 근무자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정치사상교양이 요구되는 것이며, 소위 사회주의 경쟁이라는 명목하에 집단적 감시에 의한 노력의 집단화와 노력동원의 극대화를 강요하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경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계획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個人, 作業分組, 作業班, 직장, 공장, 기업소 또는 協同農場을 단위로하여 대중적 노력경쟁 운동을 계속적으로 強化시켜 왔다.

1957년부터 始作된 천리마운동을 비롯하여 6개고지점령운동, 10대과업완수운동, 속도전,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그리고 1970년대 후반부터는 공장기업소와 협동농장, 건설대 등에 각양각색의 돌격대(속도전돌격대, 붉은청년돌격대, 2·17과학자돌격대 등)를 조직하여 노력동원을 극대화 시키고 있다.

또 100일전투, 200일전투등 시한적 노력독려, 숨은영웅 따라배우기 운동, 침식을 직장으로 옮기기 운동까지 강요하면서 “수령과 당이 준 과업을 완수하지 못하고는 설 권리도 죽을 권리도 없다”¹²⁾ 라는 구호아래 주민들의 노력을 가혹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도부터는 第3次7個年計劃(1987-1993)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한다는 구실하에 “90년대 속도창조운동”을 벌이고 있다.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보면 성별, 연령별에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보수를 받으며, 분배에 있어서는 노동자, 농장원, 사무원 구분없이 도급지불제와 정액지불제의 두가지 형태가 있다.

임금은 직종 및 기술급수에 따라 격차가 있는데 근로자의 경우를 보면

12) 조선중앙방송(1984. 8. 15)

〈北韓의 階層別 임금(月給)〉

	區 分	賃 金(원)	備 考
事 務 員	部 長 級	300~350	黨政治委員, 政務院 및 黨 部長, 特級 企業所支配人, 科學院院士等
	地 方 單 位	100~150	道幹部 및 郡單位 責任者
	一 般 事 務 員	70	
技 術 者	責 任 者 級	150~200	1~2級 企業所·工場 등 支配人 및 技 師長
	5 等 級 技 術 者	75~80	
勞 動 者	重 勞 動 者	130	鑛夫, 製鐵, 製鍊工
	輕 勞 動 者	90	一般機械운전사
	其 他	60~80	一般 輕勞動者
教 員	大 學	200~250	
	一 般	80	
軍 人 將 校	將 星 級	250~490	
	領 官 級	120~215	
	尉 官 級	84~110	
其 他	醫 師	120~250	※ 평양산원인 경우
	俳 優	200~300	※ 인민배우, 功勳배우 등

임금기능 등급제를 적용한다.

한편 협동농장원들은 도시의 노동자, 사무원과는 달리 협동농장의 결산분배에 의해 現金과 現物을 분배받는다.

북한은 당의 일방적 직장배치에서 오는 모순을 탈피하는 한 방법으로 1984년 부터는 평양제일고등중학교라는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을 신설한 이래 1985년부터는 동평양과 각 직할시·도에 1개교씩 증설하는 등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시키고 있다.

이와같이 우수한 인력양성에 부심하는 것은 3차 7개년계획기간동안에 과학기술발전에 주력한다는 정책적 고려와 당성과 출신성분위주의 총원 방식에서 오는 경제적, 과학적 낙후성탈피 및 주민불만요인해소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이 그동안 답습해온 사상을 절대시하는 인력활용정책에서 일부나마 자질과 실력을 고려하는 경향이 증대 될것으로 전망된다.¹³⁾

라. 消費生活

북한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상품이 도매소와 소매소를 통해 유통된다.

도매소는 생산업소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소매소에 공급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리·동단위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이나 도시에 있는 백화점과 유사한 종합상점이 소매소에 해당된다.

도매소의 종류는 중앙의 중앙도매소, 각도의 도도매소, 시군의 지구도매소로 구분된다. 이밖에 중요한 상품에 대해서는 직물도매소, 신발도매소, 다과도매소, 육류도매소, 농산물도매소 등이 있으며, 소매소의 종류는 평양의 백화점, 지방도시의 종합상점, 직매점, 각 리·동상점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소매상점들은 상품에 따라 이동판매, 배달판매, 야간판매, 주문판매 방법등을 사용하여 생활필수품을 일반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북한의 공급체계는 기본적으로 주문제방식에 입각해 각 타부단위에서 주민들의 수요에 맞도록 상품주문서를 작성, 상급단위로 올리면 그 양만큼 생산하여 소매상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그러나 1984년이후의 경공업 중시정책에 따라 이 주문생산제방식에 예

13) 피요ソヤン 見たまま (現代코리아) 1985. 8-9월호 pp.28-29

외가 생겼다. 즉 사전주문없이 공장에서부터 그때 그때 직접 조달해 판매하는 대도시의 직매점이 늘어나고 있고, 농민각자가 자신의 터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파는 농민시장도 활발해지고 있다.

즉, 부분적으로나마 시장경제요소가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상품의 가격은 정무원 가격제정위원회가 주관하고 있으며, 동위원회는 제품의 평균원가에다 기업소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정금액을 이윤으로 추가하여 상품별, 등급별, 품위별로 가격에 차이를 둔다.

이렇게 국정가격이 결정되어 각지역 리·동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소매점으로 하달되면 소매상점은 일반주민들의 구매카드에 기록되어 있는 수량을 확인하고 판매한다.

그러나 TV, 냉장고, 시계 등 사치상품은 구매카드에 따라 상점에서 판매하지 않고 직장에서 할당해주는 자에 한해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구매카드없이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은 휴지, 옷핀, 손톱깎기 등 극히 값이 싸고 소형인 제품에 한정된다.

한편 적당한곳에 농민시장(장마당)을 개설하여 협동농장의 초과생산물, 터밭에서 생산된 각종채소, 가내부업으로 키운 축산물, 잡곡류 등에 한해 자유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당초의 농민시장개설목적은 협동농장원들의 생활향상도모와 노동의 육고취, 국영상점이 제때에 공급하지 못하는 생활필수품의 과도적 변동, 현물교환 등이었으나 최근에는 식량, 식료품, 중고가구, 외제옷감, 귀중품, 축산물, 중국거주한인이 방북시 가지고온 옷감과 피복류, 시베리아 파견 벌목노동자들이 귀국할 때 가지고온 공업생산품, 북송교포 및 일본내에 거주하는 북송교포의 친척 방북시 가지고 온 물건 등이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어 자본주의 사회의 시골장터를 연상케 하고 있다.

1984년부터 농민시장은 확대되기 시작하여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평양 등 도시지역에서도 구역별로 농민시장(장마당)이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에서도 식량, 술, 담배 등 몇몇 품목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사고 팔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민시장은 최근에는 상설시장화되어 시장내에 관리소를 두고 시장사 용료를 징수하며 식당과 청량음료코너가 마련되는 등 편의시설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런데 농민시장에서는 잡곡류, 채소류, 가내수공업제품 등 거래가 허가된 상품들 뿐만 아니라 매매금지품목까지도 눈을 피해 암거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같은 상품들의 시장가격은 국정가격의 10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농·공산물 등 상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고 한다.

마. 餘暇生活

北韓은 주민들에게 여가시간을 가급적 주지않는 것을 政策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그 여가 자체를 국가에서 관리한다. 때문에 개인이 자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생활을 즐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직업선택이 당에 의해 결정되고 모든 일터와 직장이 일원적 국가 관리하에 있기 때문에 이에 종사하는 사무원, 노동자들은 계획된 일과표에 의해 생활하게 된다.

이 일과표에 의한 생활은 직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일과는 공통성을 띠게 된다.

특히 생산분야 노동자의 경우 매일 완수해야 할 책임량이 책정되어 있고, 휴일에는 각종회의, 학습, 근로봉사, 군사훈련, 사회, 정치행사 등에 동원되는 예가 많으므로 제대로 쉴 시간을 갖지 못한다. 이것은 개인적 시간은 잡념을 갖게하는 원인이 된다는 공산주의식 사고방식의 산물이기도 한것이다.

그리하여 시간의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뜻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음악, 연극, 무용 등 공연관람도 개인이 원하는 시간과 보고싶은 프로그램을 보기 보다는 직장과 인민반 조직을 통한 집단관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정된 프로그램만을 보게 되는것이 보편적이다. 더욱이 北韓의 영화, 연극은 공산주의 사상교양의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보고 즐기는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학습의 연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北韓住民들이 共產主義思想교양을 위해 많이 동원되는 작품은 꽃파는 처녀, 피바다 등의 가극과 영화 조선의별, 그리고 딸에게서 온 편지, 성황당, 도라지 꽃 등이다.

이러한 가극, 영화, 연극 등은 평양과 지방의 각 공연시설, 즉 동평양대극장, 개선영화관, 낙원영화관, 함흥대극장 등에서 여가 생활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동원된 가운데 주기적으로 공연 또는 상영되고 있다.

특히 피바다의 경우는 지난 1971년 初演된 이래 北韓 각 지역을 돌며 1,100회 이상이나 공연되었으며, 여기에 동원된 주민수는 200만명이나 되었다 한다. 꽃파는 처녀도 거의 비슷한 공연기록과 관객동원수자를 기록했으며, 영화는 평양과 지방에서 거의 동시에 개봉된다.

이와같이 北韓은 주민들의 사상교양을 목적으로 연간 평균 25편 정도의 극영화 등을 보게 하고 있다.

평양의 경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일부 주민들이 지하철을 타고 대성산에 있는 유희장(유원지)에 나들이를 하는데 날씨가 좋은날은 약5만의 인파가 모여, 그곳에서 전동열차를 타기도하고 곡예공연, 영화, 연극 등을 보기도 하는데 대개의 경우 아주 조용하게 관람하고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감각한 표정들이다.

북한에서도 등산, 낚시, 사냥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미나 오락은 대중화되어 있지 못하고 특정계층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등산은 학교, 공장, 직장 등에서 당의 승인을 받아 단체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개인이 단순한 취미를 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체육을 통한 여가선용이란 개인적 취미활동보다는 정치성, 혁명성과 결부시켜 국가목적 추구의 수단화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스포츠활동은 국가적 관리와 통제하에 계획·운영되며, 모든 스포츠활동이 국방력과 노동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직장이나 문화회관 등에는 탁구대, 장기관을 많이 마련해놓고 있으며, 율놀이 등은 명절에 일부 찾아볼 수 있고 화투대신 주패놀이(서양식 카드놀이)가 성행하고 있다. 결국 北韓주민들의 여가활동은 여가라는 의미가 不道德으로 생각케하는 사회 분위기속에서 심적인 압박감이 우선되는 가운데 대개가 정치, 사상적 신임을 얻기위한 처세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하겠다.

바. 冠婚喪祭

北韓은 관·혼·상·제를 포함한 모든 민속과 생활관습에 대하여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적 성격의 社會主義的 내용과 민족적형식이란 구실아래 전통적인 관·혼·상·제의식을 크게 변질시켰다. 그리하여 1955~1960년 사이에 소위 관·혼·상·제 간소화운동이라는 명분이라 이를 단순한 사회적 요구화하는 한편, 통치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1) 혼례

北韓에서는 婚禮에 있어 男女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양가의 합의도 중요하나 각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黨 및 사회단체의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北韓

이 결혼을 男女間의 애정보다는 혁명전사의 결합으로 “가정혁명화”¹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혼 적령기에 도달한 남녀가 교제를 하는 것은 조직생활의 기강을 흐트리지 않고 생산목표 초과달성에 저해적요소가 되지 않는 선에서 묵인해 주고 있다.

그러나 결혼 적령기에 도달하지 않은 이성간의 교제는 엄격히 통제된다. 그리하여 젊은이들의 연애풀속은 급속히 증가되는 경향이며, 평양의 경우 대동강, 보통강변에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혼인의 성립도 부모가 결정하는 중매결혼 형식에서 당사자간의 선택이 중심이 되는 경향으로 변천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막상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는 당성, 출신성분, 직업 등과 관련하여 제한조건이 많이 작용한다.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시하는 것은 결혼상대의 출신성분과 직업이다.

당 고위층간부가 아닌 일반계층에서는 당원, 비당원 여부가 크게 문제시 되지는 않으나 6·25당시 치안대원, 종교인, 지주, 월남자 가족 집안 등은 기피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식·주 생활이 보다 편한 도시의 남자에게 시집가려는 경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결혼연령은 1946년에 나온 남녀평등법에 보면 남자 18세, 여자 17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병역과 노동력 확보등을 위해 당이 임의로 통제하고 있다.

남자의 경우 군복무연한이 통상 8~10년으로 군복무중에는 결혼이 불허되며 女子의 경우 여성들에 대한 노동계급화, 혁명화와 함께 여성노동력확보등 때문에 현재 결혼 연령은 남자 30세, 여자 28세 이상이 되어야 결혼이 가능하다.

그리고 결혼 택일에는 종래의 길흉을 가리는 풍습이 없어지고 생산에

14) 가정의 혁명화(평양 현대조선말사전 1981) p.35

지장이 없는 공휴일이나 일요일을 택하고 있으며, 결혼예식은 회의실 아니면 신부집에서 하며 주례는 집안의 연장자나 직장 간부가 서게되는데 김일성초상화 앞에서 주례가 혁명가정의 탄생과 김일성과 당에 대한 충성을 맹세케하는 절차를 치르고 있다.

예복은 대부분 평상복차림에 가슴에 붉은 造花를 단다.

최근에는 평양 등 도시에서는 신랑은 신사복에 넥타이를 착용하며, 신부는 모두 한복을 착용한다.

그리고 식이 끝난후에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집에서 간단한 피로연을 가진다.

(2) 장례

북한의 장례절차는 극히 간소화되었고 3일장을 치르고있으나 1~2일장의 경우도 많다.

장례식과 매장은 도시의 경우는 녹화사업소, 편의협동조합 등이 맡아서 처리한다. 상복은 따로 만들어 입는 일이 없고 팔에 검은천을 두르는 경우가 있으며, 농촌이외의 도시의 경우 상여는 없어지고 트럭이나 달구지를 이용하여 공동묘지에 매장한다.

직계존속의 사망시 상주에게는 3일간의 공식휴가를 주며 장례보조금(10원정도)과 쌀(1말)이 배급된다.

(3) 제사

전통적인 제례는 미신으로 간주할뿐만 아니라 조상숭배를 복고주의적 병폐와 봉건적 잔재라고 비판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祭禮는 없어졌다.

그러나 집안에 노인이 있거나 탈상때까지는 매년 고인 사망일에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상은 평시 산사람이 먹는 음식이면 아무것이나 사용하고 전통제례에 따라 음식을 선별하지 않으며 대개 밥, 떡, 지짐이, 생선, 과일, 나물 등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차린다.

김일성은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낮은 생활습성의 하나이다. 죽은사람의 무덤이나 사진앞에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사람을 잊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날에 무덤에다 꽃을 갖다 놓는다든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회상하면서 그가 다하지 못한 혁명과 건설을 살아 있는 사람들이 마저 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자는 결의를 가지는 것이 좋을것이다”¹⁵⁾라고 하였다.

사. 歲時風習

北韓은 우리전래의 歲時風習자체를 사회주의 생활양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배격하였다.

예컨대 중추절의 경우 봉건잔재유물, 복고주의 부활, 긴장의식해이, 노동력감소를 이유로 부정적태도 였다.

그런데 1972년부터는 추석부터 容認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북한의 명절 및 공휴일〉

구	분	월	일	구	분	월	일
신	정	1.	1	국제노동절		5.	1
구	정	음력 1.	1(89부활)	정권창건일		9.	9
한	식	4.	6(〃)	당 창 건 일		10.	10
단	오	음력 5.	5(〃)	해방기념일		8.	15
추	석	음력 8.	15(88부활)	헌 법 절		12.	27
김정일	생일	2.	16				
김일성	생일	4.	15				

15) 김일성 저작선집(1권) 1967 p.173

그리하여 추석날 인근 조상묘소의 성묘를 묵인하였으며, 증명서없이 他郡 2일간 여행을 허용하더니 1988년 추석부터는 추석을 휴무일로 하였으며, 1989년부터는 구정과 단오절까지 휴무일로 하여 민족고유명절을 부활하였다.

이와같은 조치는 남북대화, 그리고 우리의 해외동포 추석성묘사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또 최근 해외 동포들의 북한 방문이 점증하는 추세에 부응하여 취해진 일련의 조치로 평가된다.

북한의 명절은 무엇보다도 공산주의사상 고취와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소위 사회주의 명절이라는 김일성 생일을 민족최대의 명절이라고 하여 충성의 선물전달, 예술공연, 각종 체육행사, 그리고 토론회 및 전시회 등 각종 축하행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격년으로 김정일 생일부터 김일성 생일까지 “충성의 축전”기간으로 설정 각종 우상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아. 宗教生活

(1) 북한정권의 종교를 보는 시각

北韓에 宗教의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北韓의 社會主義憲法 第54條에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反宗教宣傳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反宗教선전의 자유를 명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北韓에서 적극적으로 반종교정책을 전개한다는 정책적의지와 함께 아울러 북한주민의 공개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北韓政權의 宗教에 대한 견해는 종교는 계급사회에서 계급적인 억압과 착취를 합리화하는 精神의 수단으로 발전된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

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됨으로써, 인민을 기만하고 착취 억압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된다. 착취계급은 계급적 및 민족적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인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자 무력을 이용하여 인민들을 진압함과 동시에 불교, 기독교, 회교 등과 같은 宗教들을 사상적 도구로하여 인민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대중의 착취와 억압을 합리화하고 사람을 노예화 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제국주의자들은 종교를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하였으며, 선교사들을 통해 정탐, 파괴행위를 감행하였다고 규정한다.

또한 金日成은 모든 宗教를 미신으로 보고있다. 그는 宗教는 일종의 미신이다. 예수를 믿든지, 佛敎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상 미신을 믿는 것이다.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여 착취, 억압의 도구로 이용되었으며, 또 근래에 와서는 제국주의자들이 후진국가 인민들을 침략하는 사상적 도구로 이용 되었다.¹⁶⁾라고 하였다.

(2) 宗敎탄압

北韓은 政權樹立 초기부터 주민들의 신앙심을 말살하기 위하여 종교 말살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8·15해방전까지 북한지역에서 종교의 영향은 매우 컸다.

해방후 소련의 지원으로 金日成政權을 수립하려는 움직임에 이를 반대한 민주민족진영의 대다수는 바로 宗教人이었다.

농촌에서의 유교나 천도교, 불교, 도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초기에는 종교인구층을 흡수하고자 조선민주당이나 천도교청우당을 만들어 소위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의 산하 단체로 묶어두는 懷柔의 방법부터 시작하였다.

16) 김일성 저작선집(1권)pp.205-206

이러한 환경속에서 북한은 초기 회유책에 이어 제한정책, 탄압정책, 말살정책등 3단계 종교정책을 통하여 모든 종교단체와 종교의식을 말살하였고, 종교인들을 반동분자로 몰아 살해하거나 적대계층으로 분류하여 사회진출을 봉쇄하고 요 감시 대상으로 박해 하였다. 이 때의 피해 상황을 보면 불교의 경우 400여개의 사찰가운데 일부(40여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라졌으며, 기독교의 경우 1,300여개의 교회가 하나도 안남게 되었고, 30여만명의 신도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그리고 천주교신도 5만명, 천도교신도 12만명도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이와함께 종교단체의 재산을 몰수하였으며, 사찰은 일부 문화재로 지정되었으나 대부분 정·휴양소로 전용되었다.

(3) 종교별 현황

政權樹立이후 줄곧 反宗教政策을 펴왔던 北韓은 최근에는 대남전략과 개방화추세에 따른 국제적 연대성 강화의 일환으로 종교말살정책을 다소수정하여 宗教를 선전상 역 이용하는 方向으로 위장된 종교활동을 펴고 있는데 특히 1980년대 초반부터 교회를 짓고, 성경·찬송가책을 발행하는 등 종교에 대한 유화정책을 적극화 하고 있다. 북한이 방북외국인 및 해외동포들에게 선전하고 있는 宗教實態는 다음과 같다.

○改新教

현재 개신교신자는 1만여명이며, 1983년에 신약성서와 찬송가를 발간하였고, 1984년에는 구약성서를 발간하였다.

교회는 1988년 10월에 건립된 봉수교회(평양)와 1989년에 건립된 칠골교회(평양)가 있다. 교직자는 150여명 정도이고, 나머지 신자들은 300여개가 넘는 가정교회에서 예배를 본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20명의 목사가 목회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들은 거의 다 해방전에 안수를 받은 원로목사들이라고 한다.

○天主教

현재 북한에는 약 800여명의 천주교신자가 있으며 1988년 10월에는 장충성당을 건립하였고, 이들 가운데 300명만 1989년 6월에 결성된 조선천주교인 협회에 등록되어 있다.

1989년 11월에는 바티칸에서 파견한 2명의 신부와 100여명의 신자가 주일에 예배를 보며 신자의 대부분은 40~50대이며 남녀의 비율은 반반이라 한다.

○佛敎

북한에는 현재 1만여명의 불교신자와 60여개의 사찰에 300여명의 스님이 있다고 한다.

1988년에는 북한정권수립이후 처음으로 석탄절 기념예불(음4월 8일)을 묘향산 보현사에서 가진 바 있고, 1988년 7월에는 팔만대장경을 우리말로 해석한 해제본을 출판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이후 성도절(평양 용화사), 열반절(개성 관음사)행사까지 하고있다 한다.

조선불교도연맹은 1986년에 세계불교도연맹(WFB)에 가입했다고 한다.

또한 천도교신자는 15,000여명이며, 창도기념일, 천일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한다.

○宗敎 團體

北韓에는 현재 조선기독교도연맹(1946. 11. 28창설), 조선불교도연맹(1945. 12. 25창설), 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1946. 2. 1창설), 조선천주교인협회(1988. 6. 30창설) 등 4개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1989년에는 조선종교인 협회를 결성하여 대외에 宗敎의 自由가 보장되고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각종 종교단체는 상층부의 중앙위원회라는 기구만 존재할 뿐 하부조직은 없으며, 그 활동도 종교행사보다는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대외적으로 국제적 연대성 강화 및 정권옹호의 정치활동과 한국의 청년

학생 및 종교인을 대상으로 반정부투쟁 호소, 이들과의 연대성을 강조하는 성명서 발표가 고작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北韓의 宗教행사와 사찰복원, 성당, 교회건립 등은 아직까지는 宗教人들에게 불모의 北韓사회에 바늘구멍같은 틈새가 보이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北韓의 기본적인 종교관은 변함이 없이 다만 대남전략의 일환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北韓은 해외동포나 한국의 일부 기독교인들을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보는 이른바 혁명의 보조역량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北韓은 反宗教政策을 꾸준히 수행해 왔으면서도 “단결할 수 있는 모든 宗教 신도들을 조국통일과 반파쇼민주화의 기치아래 묶어세운다”는 방침을 추구할 뿐이다.

그러나 중·소를 비롯한 東歐의 先進社會主義국가에서는 이미 종교가 소생하였고, 실제로 宗教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활동도 인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北韓에서 종교소생의 가능성을 기대해 보게 한다.

자. 保健醫療

北韓은 모든 보건의료시설이 소위 국가 소유로 국가가 관리운영하며,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의료체제를 갖추고 있다.

北韓憲法 第48條를 보면 무상치료제의 공고한 발전, 예방의학적 방침 관철, 의사담당구역제 실시 등을 명문화 하고 있다.

즉 北韓에서 보건의료제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무상치료제와 예방의학에 중점을 둔 의사 담당 구역제인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무상 치료제

북한은 1952년 1월 20일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를 잘할데 대하여”라는 김일성의 「노작발표」 이후 1960년 2월 최고인민회의 제 2기 제 7 차 회의에서 보건사업강화에 관한 결정을 채택하고 무의촌의 근절과 무상치료제 실시를 계획 한 바 있다.

그리고 현행헌법(제48조)과 인민보건법에서도 “예방 의학 방침을 위주로한 전반적 무상 치료제 실시”를 明文化하여 정책 기조로 하고 있고, 선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선전과는 달리 매달 월급에서 미리 사회보장비라는 명목으로 1%씩 공제하고 있고, 또한 노동자·사무원의 부양가족으로서 직장에 다니지 않는 노약자도 약값 명목으로 치료비를 내야 하고, 농민들이 도시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을 경우도 치료비를 내는 등 여러 구실로 기본 임금의 10% 이상이 공제되는데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엄격한 무상 치료제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월남자 가족등 적대계층은 아무리 중병에 걸려도 고가의 약품을 쓸 수 없으며, 市·區域·郡 病院 이상의 보다 고급병원에는 입원할 수도 없다.¹⁷⁾

(2) 예방 의학적 방침

예방의학이란 질병의 치료보다는 예방을 위주로 하자는 것으로서 北韓이 여기에 주력한것은 1956년경 부터이다.

이러한 방침을 추진하게된 배경은 당당시 열악한 사회보건환경에서 연유되었다.

휴전후 3년간이나 계속된 흉작으로 주민들은 영양실조가 되어 각종 질병이 만연 되었다.

그러나 빈약한 의료시설을 가지고서는 병에 걸려도 치료를 받지 못하

17) 김만철증언, (1987. 1. 15 월남귀순자)

는 형편이었으며, 많은 사람이 치료도 못받고 죽어 가는 실정에 놓여 있었다.

그리하여 北韓 당국은 보건문제에 관한 일련의 대책을 취하였는 바 보건위생의 기본 방침이 예방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아울러 위생검열을 철저히 하는데 치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보건관리는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유실을 미연에 예방하려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었으며, 당시만 해도 의사와 간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여건에서 어쩔 수 없이 취해진 것이었다.

현재 北韓에서는 질병예방사업이 보건의료기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기본 내용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¹⁸⁾

- 위생 선전 계몽 교양사업
- 위생 일꾼의 체계적 양성사업
- 생활 및 노동환경조건 개선사업
- 위생법규의 제정 및 위생검열지도
- 전염병 예방 및 방역대책의 수립
- 담당구역제 원칙의 실현과 치료예방 원칙의 확대
- 예방의학적 방침에 따른 의학교육등

(3) 의사 담당 구역제

이 제도는 1964년부터 우선 평양을 비롯한 도 소재지 등의 몇개 구역 병원과 일부 큰 규모의 산업병원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탄광, 광산에서는 직장의 의사 담당 구역제가 실시되었는데 이 제도는 예방 의학적 방침과 관련된 것으로 각 의사가 자기가 맡은 책임 구역에 나가서 위생, 보건, 접종, 건강진단등을 계속적으로 하는것을 말

18) 북한총람(북한연구소편 1983) pp.1000-1004

한다.

본래 이 담당구역제도는 노동당 제 4 차대회(1961년)이후 실시하여왔는 바, 대개 1명의 의사가 4~5개 작업반규모(200~300명)로 구역을 맡아 진료하도록 되어있는 일종의 순회진료제도이다.

북한은 이 의사담당구역제 실시로 전체주민이 일생동안 담당구역의 사들로부터 체계적이며, 전면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시·군·구역 병원, 공장 병원, 리인민병원, 종합진료소와 진료소등이 이 사업을 직접 맡아 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의사담당구역 사업을 맡고있는 시·군·구역 병원과 공장병원의 외래 임상과의 전체의사들, 그리고 리인민병원및 진료소의사들은 주간 근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담당지역에 나가 위생선전, 위생지도, 소독, 예방접종등 위생 방역 사업을 조직, 집행하는데 바치며, 검진, 상담등을 계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1명의 의사가 200~300명의 주민을 한나절에 진료해야 되니 정상적인 진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민 4,00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의사담당 구역제에 충실 할 수 없는 실정이다.¹⁹⁾

이 제도는 질병의 예방적인 면에서는 그 나름대로 이점이 있으나 의사들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어 질병 발생이 은폐되는 경우도 나타나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돌아 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4) 동의학

북한의 치료 예방사업의 특징은 양의학과 동의학을 병행 발전시킨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동의학을 과학화하여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19) 김만철 증언 (1987.1.15 월남귀순자)

北韓이 동의학에 큰비중을 두고 있는것은 현대의약품의 절대부족과 의학수준의 낙후성을 보완하려는 데 있다.

즉 北韓은 그들의 기술수준으로는 현대의학 개발이나 발전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 현대의학과 동의학을 병행 발전 시킨다는 보건정책하에 한방을 토대로한 동의학 연구와 제약공업에 역점을 두어 왔다.

1958년 6월부터 의과학원 산하에 동의학연구소를 설치하고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각 도·시·군 단위까지 동의학 관리국을 설치했으며, 이어 1974년 3월에는 동의학 약초시험장을 설치하는 등 동의학 개발에 주력하였다.

그리고 1978년 부터는 각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등에 일정량의 약초 의무생산량을 부과하고 있으며, 각급병원마다 대단위 약초밭 조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모든 농촌 가정에서는 사유경작지로 허용된 20-30평 규모의 텃밭중 2-5평 이상씩 약초재배를 강요하는 등 약초생산을 전군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 외에 민간요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1964년 11월 의과학원산하 동의학연구소의 민간요법연구실 연구팀을 중심으로 민간요법을 널리 수집하고, 정리하는 사업을 전개하여 질병의 종류별로 연구, 임상검토하였다.

북한의 의과학원 산하 동의학연구소에서는 45,000여건의 민간요법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민간요법>, <동의학의 민간요법연구자료>등의 서적을 발간한 바 있다.

(5) 의료기관

의료기관으로는 中央에 종합병원으로 중앙병원, 직할시와 도단위 인민위원회 소재지에는 대학병원, 중앙병원 1개, 그리고 결핵병원등 전문병원이 있다.

시·군단위는 1-2개의 인민병원이 있는데 산업지역의 3급 공장 기업소 이상에는 산업병원(4급이하에는 산업진료소)1개씩 일반 시·도(도·시의 구역) 군단위에는 시립병원(도·시의 구역병원), 군인민병원등이 1개씩 설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는 2-3개 동마다 종합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1974년 부터는 里단위 진료소를 里人民病院으로 개편 하였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1-2個里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그 규모 면에서도 준의사 1-2명이 배치되어 외상치료등 초보적인 치료와 투약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기관들이 각급단위의 위생방역소와 협동하여 공중 위생지도 및 위생방역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평양에는 조선적십자 종합병원, 평양의과대학병원, 김만유병원, 평양산원, 평양제 1 병원 및 제 2 병원, 구강병 예방원 등이 있는데, 이들은 근대적 설비와 종합적 의료시설을 구비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²⁰⁾

(6) 질병

일반적으로 위장계통의 질병이 가장 많고²¹⁾ 신경관절 계통의 환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위장병의 경우 노동시간 과다 및 정치사상 학습등으로 인한 불규칙적인 식사, 옥수수등 잡곡위주의 식생활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관절염은 목표량 달성을 위한 강도 높은 노력동원, 노동보호물자부족 및 직업환경의 불비등에서 기인되고 있으며, 정신병은 잘못먹고, 과로에 지친데다가 정치사상 교육등의 통제에 의한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것으로 보고 있다.

20) 조선개관(평양. 외국문출판사 1987) 국토통일원 번역자료 1988. p.187

21) 정병모증언(월남귀순자)1983

또한 北韓의 의학자료에 의하면 심장계통의 질병과 암성질병등의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질병들을 미리 막고 제때에 진단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연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²²⁾

특히 뼈라그라병 환자가 많은데 이병은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병으로서 영양실조로 손발이 까맣게 되고 살갓이 벗겨지는 특수 질병인데 1개 인민반(20세대)에 3-4명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차. 言論實態

北韓의 언론은 언론의 일반적 기능인 보도기능, 교육기능, 오락기능, 광고기능 가운데 오락기능이나 광고기능이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金日成 1人 獨裁體制強化와 金正日 세습체제를 공고히 하는 메커니즘으로 되고 있음이 특징이다.

이는 레닌이 자본주의 사회의 신문을 “부유계층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 그들을 위한 정보, 오락도구로 노동대중을 기만하고 농락하는 도구”라고 규정한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레닌은 혁명수행의 중요한 수단으로서만 신문을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문을 집단적 선전자, 집단적 선동자, 집단적 조직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론에 따르면 공산주의 언론의 기능이 대중선동, 대중조직, 대중비판 및 폭로등의 4가지로 요약되는데, 이는 언론이 혁명수행을 위한 강력한 무기이며, 당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원되어야할 政治的 수단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22) 「주체의학」(평양, 의과학출판사 1988) 3월호

北韓 언론도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1985년 중앙방송 창설 40주년 기념대회 연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방송의 내용에서는 수령과 당의 위대성, 당과 인민의 不敗의 統一團結, 충실성 선전등 사회 정치교양 선전에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北韓 언론의 이러한 성격은 뉴스에 대한 개념에서도 나타난다.

즉 北韓에서의 뉴스의 대부분은 독자에게 흥미를 주는 것엔 관심이 없이 당이나 정부에서 주고자 하는 내용만을 보도 전달한다.

이것은 뉴스보도가 선전, 선동목적에 기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레닌의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

金日成이 “신문, 잡지, 서적같은 출판물이야 말로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제시하는 혁명과업실천을 위해 노동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선전, 선동의 도구라고 강조했듯이 표현의 자유란 당의 지도이념과 이의 도구를 위한 政權”의 지시 범위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되고 있다.

북한헌법 제53조는 공민은 언론, 출판, 결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백히 표현의 자유가 있는것 처럼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기본권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역행되지 않을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黨이나 政府管理의 언론, 출판제도하에서 個人의 이익이나 주장은 이기주의, 종파주의로서 배척된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여 계급노선과 균중노선을 관철한다 라고 헌법(제10조)에 명시한 것도 사실상 개인적 기본권에 대한 법적 제한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北韓 言論은 그들 주장대로 당의 선전, 선동을 위한 도구인만큼 모든 신문, 방송을 비롯하여 정무원의 언론 관계부서도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지시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현재 北韓에는 조선기자동맹과 정무원 직속의 조선중앙방송위원회,

출판총국 등이 있는데, 조선중앙방송위원회는 중앙방송, 평양방송등 北韓의 방송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계획, 집행, 총괄하는 부서로서 표면상으로는 정무원 직속이나 내용상으로는 노동당 선전선동부와 연락부에 의해 움직여 진다.

이 위원회의 임무는 크게 나누어 방송내용 자체를 지도, 조절하는 것은 黨體系에 의거하고, 방송국의 시설과 기재의 관리 사무운영은 정무원에서 관장하는 2元組織으로 되어있다.

또한 정무원 산하의 출판총국은 모든 출판물을 검열통제하는 기관으로서 검열1부(전단, 광고물, 번역물), 검열2부(정치), 검열3부(문예), 검열4부(경제, 사회, 교육), 검열5부(과학, 기술)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다.

北韓의 신문, 방송은 사실과 진실을 보도하지 않을뿐 아니라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주요 情報源은 다이얼이 고정된 라디오나, 마을과 직장에 설치된 유선방송인 확성기이며, 설사 정보를 들었다해도 전파될 수가 없도록 철저한 감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北韓의 신문은 노동신문(당기관지)을 비롯하여 민주조선(정무원기관지), 평양신문, 노동청년(사로청 기관지), 인민군신문등의 주요 중앙지와 각 도단위 신문을 합하여 30여종이 발행되고 있다.

편집상의 특징은 당의 강력한 보도통제와 사전검열, 그리고 속보성, 독자의 참여가 거의 전무하고, 사회면과 광고란이 없는것을 들수 있으며, 구독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다.

北韓의 라디오 放送은 대내용인 중앙방송과는 별도로 대외 및 對南心理戰用으로 평양방송이 운영되고 있고, 대남위장방송으로 “구국의 소리 방송”이 있는데 이 방송은 해주에서 송출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의 반체제 반정부 투쟁을 선동 고무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한편 TV방송국은 1969년에 조선중앙 TV방송국을 개설 정규방송을 시작했으며, 1971년 개성 TV방송국을 개설하여 대남선전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만수대 방송도 있다.

칼라 TV는 1974년부터 방영되었으나 현재 15만대 밖에 보급되지 않아 대중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 社會的 逸脫

北韓에서는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도덕의 가변성과 계급성을 주장하고 있다.

도덕은 사회, 경제적 관계를 반영하는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서 사회발전에 따라 역사적으로 變化하며, 계급사회에서는 반드시 계급적 성격을 띠기 마련이다.²³⁾

이러한 관점으로부터 출발해서 1958년말 사회주의 제도가 확립된 것과 때를 같이 해서 共產主義的 도덕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다.

그후 金日成 1人體制가 더욱 強化되고 社會主義 건설이 본격화 됨에 따라 공산주의적 도덕에서 요구하는 내용도 이에 맞추어 달라해왔다.

오늘날 北韓의 공산주의적 도덕에서 중요시 되고 있는 것은 個人의 利益보다 集團의 利益을 더 중요시 여기는 집단주의정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공산주의적 人間性과 文化性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주의적 요구와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사회적 부조리 행위들이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부조리 행위가 경찰 경우에는 범행 행위자가 속해있는 노동당의 조직 및 사회단체 등에서 비판 또는 책벌 형식으로 처리되고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는 법적 제재를 받기 마련이다.

각종 부조리 또는 범죄행위는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이유는 사

23) 「근로자」 1962.11(하) p.30

회체제의 경직성, 생활 필수품의 절대적 부족 현상 때문이다.

뇌물을 상부에 바쳐야 신분상의 특전을 얻는다든가 또는 품귀물품을 구할수 있는 등의 사회적 비리가 계속 만연되고 있다.

그런데 보도기관에 대한 노동당의 철두철미한 통제로 말미암아 그러한 사실이 공표되지 않을 뿐이다.

〈북한의 각종 犯罪類型〉

종류	구분	내 용	비 고
정 치 범		反黨·反革命 행위, 金日成 권위훼손, 탈출범, 思想不純	金日成權威 毀損: 金日成 투쟁사 비판, 김일성에 관한 각종 출판물및 초상화 파손 및 敎示 非방등
경 제 범		公共財産의 횡령, 양곡거래 및 횡령, 品貴物品의 부정유출, 物品購入時 價格 造作, 정량미달 出庫, 감량판매, 부정계량기 사용등	대다수가 경제부문에 종사하는 행정기관이나 협동단체 幹部에 한함
人 身 侵 害 犯		폭력, 殺人, 강간, 간통등	강간, 간통은 노동당원 및 協同農場 간부에 의한 경우가 많음.
기 타		강패, 소매치기, 강도, 절도, 사기, 협잡, 방화등	農民들의 절도형태: 벼가마 숨기기, 숙주머니 만들어 강냉이 알 따내기, 고구마 덜 캐기, 달걀 훔치기, 강냉이 따고 흔적 없애기 등

4. 結 言

자유민주주의를 이념으로 하는 우리 사회체제는 자율성, 다원성, 개방성을 존중하는 질서로 형성되고 있는데 비해, 金日成 主體思想을 지도 이념으로 한다는 北韓 사회는 김일성의 1인지배체제 확립과 그의 권력세습에 부합하도록 의도적으로 조작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들의 개방사회와는 크게 다른 체제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어느 공산 사회의 경우보다 전체주의적 요소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집단주의 원칙에 입각한 조직적 통제 사회이다.

북한헌법 제49조는 국민의 權利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체를 떠난 個人의 존재는 인정할 수 없으며 個人은 항상 전체의 한세포로서 움직여야 하고 개체의 권익은 언제나 전체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個人이 모여 집단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北韓에서는 그와 반대로 전체 또는 집단의 구성 요소중의 일부로 개인을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헌법 제68조는 “.....국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하여 이른바 사회주의적 윤리관에 입각한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집단주의 정신의 최고 표현은 혁명의 수령 金日成에 대한 충성심에 있다고 교양하고 있다.

즉 북한주민 개개인인 김일성을 정점으로 하는 공산주의 집단 전체를 위해 조직을 통해서 헌신·복무해야 하며, 그렇게 하면 그전체는 개개인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주의 원칙에 따라 북한 노동당은 주민들에 대한 조직적 통

제와 개인생활에 대한 절대적 간섭을 강행하고 있다.

물론 자유사회에서도 조직 또는 집단 생활이 있을수 있으나, 그러나 생활의 시간과 조건이 상대적, 선택적이라는 점에서 북한 사회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둘째, 유일사상체계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思想的 劃一社會가 형성되어 왔다.

北韓에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도록 요구하여 왔으며, 金正日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온사회를 일색화 하기 위하여 모든 인민들은 몸바쳐 투쟁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여 왔다.

따라서 北韓에서는 어떠한 다른 사상이나 신앙이 있을 수 없고, 김일성의 사상만을 배워야 하고 그것이 모든 생활 영역을 지배하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요구하는 바가 “전당과 전인민의 의지”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일성의 교시는 절대성과 무조건성이 부여되며, 信條化되도록 강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이나 정책에 우선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군사 등 모든 활동과 생활의 영역에서 절대적인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다.

셋째, 출신성분과 당성에 따라 철저히 차별하는 새로운 계급사회가 형성되었다.

8.15해방 이후부터 주민들의 성분조사를 반복하여 출신성분과 당성에 따라 기본적으로 핵심계층, 기본계층, 복잡계층 등 3대계층으로 분류하여 차별대우와 통제를 하여 왔으며, 근래에는 사람들의 사회적 계층과 경력에 따라 사회성분을 심사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노동당원 특히 黨, 政權機關, 軍, 사회단체등의 간부들이 특권 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가족들을 포함하여 핵심계층으로 분류되고, 이들은 신분상으로나 대우면에서 일반주민들과 엄격히 구별되고 있다.

본래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무계급 사회를 표방하고 기존의 구조를 계급적 대립이라는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이상, 특히 남북한 사회를 비

교하는 경우 사회계층과 계급의 문제는 핵심적인 문제영역이다.

그런데 북한사회가 추구한다는 평등이데올로기와 가장 상반되는 현실적 모순을 바로 계층화 현상과 그 경직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北韓憲法 제 6 조에 “북한에서는 계급적 대립과 인간에 의한 인간의 온갖 착취와 악법이 영원히 없어졌다”고 규정하고 있어 마치 北韓社會에서는 계급차별이 없고, 계층간의 대립도 없는 이상사회인 “인민의 낙원”이 성취된것 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북한사회에 비록 지주나 자본가 계층이 없다고 할지라도 성분분류에 따른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관계를 규제하여온 새로운 계층 서열의 구조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넷째, 北韓은 人間의 思想, 意識을 黨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폐쇄사회이다.

北韓政權은 權力의 세습화를 강행하면서 주민에게 “인민의 낙원”이라는 虛像을 만들기 위해서는 철저한 정보관리와 폐쇄정책으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기만하지 않을수 없다.

北韓의 일반주민들은 대외적 정보로부터 철저하게 차단 당하고 있다.

외국의 방송, 신문들을 접할 수 없음은 물론 외국인과도 안내인을 제외하고서는 접하기 어렵다.

北韓 全地域의 일반인 들에게 유선방송 그리고 라디오의 다이알 고정 이 실증하는 것처럼 노동당의 통제와 조정을 통해 의도적으로 주어진 정보 이외에는 다른 정보는 얻을 수가 없다.

이것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의 거주 이전과 여행및 통행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평양·휴전선 지역·군수공업지대등은 특수 여행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결국 이러한 폐쇄정책은 남북한 사회의 상호개방과 교류를 거부하게 되고, 민족의 이질화를 심화시킬뿐 아니라 남북한 상호간의 오해와 불신으로 대립을 조장하며 민족화합의 길을 가로 막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北韓에도 중.소 및 동구의 영향이 비록 제한적이거나 마스며들고 있으며, 또한 일본 등 서방국가들의 사조가 유입되면서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1989년 7월에 있었던 ‘평양축전’과 관련, 청소년들의 획일적인 사고에 變化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본질적인 變化가 없는 한 그들의 목표달성을 위한 전술적 보완조치로서의 작은 변화가 일어나거나, 선전을 목적으로 한 외형적 변화가 나타났다고 해서 이것을 체제·수정의 변화로 오인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IV. 教育·文化篇

北韓의 教育·文化

金 淳 培 (統一研修院 教授)

1. 序 論	171
2. 北韓의 教育	172
가. 教育理念과 目標	172
나. 教育政策과 制度	176
다. 教育內容과 方法	195
3. 北韓의 文化	205
가. 文化構造와 政策	205
나. 文化生活	209
4. 結 論	223

1. 序 論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人間을 자연의 상태에서 理想의 상태로 끌어 올리어, 個人과 국가사회의 발전·번영을 기하는 데에 있다. 교육의 질은 그 國家, 民族, 社會의 文化水準에 좌우된다. 동시에 民族共同體의 전통 문화는 교육에 의해 계승 발전된다. 따라서 教育과 文化는 밀접한 연관 관계를 갖고 상호작용한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공산정권을 수립하면서 教育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교육과 사상학습을 통해 韓民族의 傳統文化를 단절하고 共產主義 文化를 이식하였다. 그들은 교육과 문화를 공산혁명의 수단으로,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도구로 간주하여 그의 社會 政治的 性格을 강화시켜 왔다.

북한에서는 교육과 문화정책의 방향을 한편으로는 金日成과 그의 가계를 우상화하는데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민주주의 理念과 大韓民國 體制를 배격·청산하는데 두어, 民族의 異質化를 더욱 확대 심화시켜 왔다. 북한교육과 문화의 정치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동질성은 훼손되어, 북한주민의 민족관은 물론 가치관, 의식구조,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현저히 달라져 있다.

북한에서 실시하는 일련의 정치교화교육과 그들이 지향하는 이데올로기 문화 혹은 우상문화에 대한 이해는 우리 民族의 平和統一을 열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북한의 교육이념과 목표, 교육정책과 제도, 교육내용과 방법, 문화구조와 정책, 문화생활을 차례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北韓의 教育

가. 教育理念과 目標

(1) 教育 이념

공산주의에서는 教育을 개인의 잠재력 개발이나 창의력과 개성을 발전시키기 보다는 오직 黨의 지시와 명령에 복종하는 공산주의 人間型을 주조해내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은 教育을 계급투쟁의 수단으로, 教育者들을 직업혁명가나 정치선전선동원으로, 學校를 공산주의 이론을 전파하는 선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이러한 공산주의자들의 일반적인 教育관을 그대로 수용하여 教育을 「사상, 문화 교양의 무기」로, 敎員을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 혁명가」로, 教育기관을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기본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¹⁾ 북한은 다른 공산국가보다 더욱 강력히 「革命」수행을 내세우며 教育을 통한 思想革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金日成은 “사상혁명을 수행하는 무기로서의 教育기관의 날을 버려야 한다.”면서 教育을 통한 사상혁명을 촉구하였다.²⁾ 북한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3大革命(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한다면서 공산주의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는 물질적 요새와 사상적 요새인 2개의 요새를 점령하여야 하는데 이중에서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思想革命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는 이유는 이를 인간개조 사업으로 인식하며,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에 이를 때까지의 「계급투쟁의 기

1) 「사회주의 教育에 관한 테제」, 北韓概要, 國統院 1983, p.398

2) 「사회주의 教育학에 대하여」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3)p.314

본 형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한 사상혁명이란 바로 「혁명적 열의와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政治事業」으로 간주하는 데에서 북한교육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에 의하여 「共産主義的」으로 개조되지 않는 個人은 존재해서는 안되는 사회의 건설을 뜻하며, 思想革命의 이름 밑에 계급투쟁과 숙청을 부단히 반복하여야 한다는 永久革命의 논리로 귀결된다. 북한은 아직도 스탈린의 「사회주의가 진전할수록 계급투쟁은 더욱 첨예화 된다」는 주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북한에서는 金日成의 자의적인 공산주의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신봉하고 있다. 교육에서도 막연하게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구호를 원칙으로 내세우며, 폐쇄적이며 배타적 人間의 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주체사상」이란 「金日成 1인 주체」를 말한다는 사실이 교육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구현한다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을 金日成에게 무조건 맹종·충성하며 목숨을 바쳐 그를 옹호, 보위하는 정신을 함양하도록 만든다. 「주체사상」에 충실한 교육은 결과적으로 주체적인 인간이 아닌 오히려 비주체적인 인간의 양성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볼때 「주체사상」을 앞세운 교육이나 사상혁명은 북한 주민들을 愚民化하고 사회를 과거로 되돌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2) 교육목표

공산주의를 표방했던 국가의 교육 목표는 그 나라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초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세계혁명을 수행할 人材를 양성하는 데에 두어 왔다. 북한의 교육목표도 타 공산국가와 다를 바가 없으나, 그 나름대로의 특징은 부자세습체제를 구축, 강화하고 대남공산혁명을 수행하는데 충실한 인재의 양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다.

북한에서는 이상적인 인간형으로, 모두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적인 인간상으로 金日成과 金正日 父子만을 내세운다. 북한이 발간한 교과서에는 金日成의 말을 무조건 따르고 그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곧 「공산주의적 새인간」(공산주의혁명인재)의 전형으로 묘사하고 있다. 나아가 「김일성수령」이 「남조선 해방」의 명령만 내리면 언제라도 몸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는 것이 배움의 목적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공식적으로 표방하는 教育의 目標은 전주민을 ① 革命化 ② 勞動階級化 ③ 共產主義化하여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육성한다는 것이다.³⁾ 북한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된 「공산주의적 새인간」이란 용어를 쓰기 시작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사회전반에 걸쳐 이를 최고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39조에는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로 하여금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운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 “후대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공산주의화 하여 김일성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혁명 투사를 양성하는 과학적 원리와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조선로동당 출판사, 1973)에서는 「공산주의적 새인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공산주의는 놀고 먹는 사회가 아니므로 노동을 사랑하며 즐기며 이에 자각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 ② 개인주의, 낡은 사상, 자본주의사상을 철저히 뿌리 뽑고 金日成 유일사상으로 무장된 사람.
- ③ 자기 개인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오직 사회전체를 위해서만 일하는

3)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北韓概要, 국토통일원 1983, p.399

사람.

④ 공산주의의 승리를 확신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혁명적 낙관주의를 갖는 사람.

위와 같은 조건을 갖춘 「공산주의적 새인간」이란 바로 人間의 本性인 최소한의 개인 욕구마저 억제된, 다시 말하면 개인의 모든 것이 희생되고 본성이 말살된 상태에 도달한 인간이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은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전체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金日成의 명령과 지시라면 목숨을 내놓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인간, 「미제로 부터 남조선 해방」을 위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인간이어야 한다. 이러한 품성을 가진 인간이 바로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찬양되고 있다.

이상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에서 양성하고자 하는 「공산주의적 새인간」이란 이른바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자세습체제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전국적 범위」에서 共産化革命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人間을 말한다.

북한의 교육목표 가운데 우리가 가장 관심을 돌려야 할 사항은 바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어느 경우든 교육과 「南朝鮮 革命」을 결부시키고 있는 점이다. 金日成은 「학생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참된 후비대로 교양하자」라는 연설(1968년 3월 14일)을 통해 教育學의 존재 이유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전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것인만큼 교육학은 그에 복종하여야 한다.”라는 교육목표를 제시하였다.

「전조선에서의 공산주의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 「북반부」의 사회주의 혁명기지를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기지 건설」은 자기 희생을 무릅쓰고 노동에 헌신하는 인간을 통해서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소요되는 技術 人材의 확보가 북한교육의 당면목표가 되고 있다. 이로써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위한 「물질적 요새」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教育 目標을 한마디로 집약한다면 金日成·金正日과 黨에 충실한 혁명의 후계자 양성과 사회주의 건설에 소요되는 인간의 육성으로 볼 수 있다.

나. 教育政策과 制度

(1) 教育정책의 變遷과정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8·15 해방 직후, 북한에 공산정권을 수립하면서 모든 분야에서 소련식을 모방했듯이 교육에서도 「소비에트 교육학」을 직도입하여 적용하였다. 그러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 「소비에트 교육학」에 대한 반발과 함께 복고적인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教育理念으로 되돌아가기도 하였다.⁴⁾

1970년 勞動黨 제 5 차 대회를 전후하여 「마르크스 레닌主義」의 구현이란 정책 목표를 넘어서서 북한 나름의 「사회주의 교육학」을 정립하여 더욱 교조적인 教育觀을 확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1977년에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제정,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북한의 教育정책은 政治的 理念과 그 필요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북한교육의 변화 또는 발전과정의 특징을 시기별로 분류해 보면 다섯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 공산주의 사상 도입기 ② 공산주의 확립기 ③ 혁명전통 교양기 ④ 유일사상 확립기 ⑤ 세습기반 구축기로 나눌 수 있다. 시기별로 정책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기로 한다.

○ 제 1 기 : 共產主義思想 導入期(1945~1952)

金日成은 모든 法體系와 制度를 소련의 공산주의 방식을 모방하여 북한에 공산정권을 수립하였다. 교육에서도 그이념과 행정체계, 내용과 방법을 스탈린식의 「소비에트」 教育을 그대로 도입하였다. 교육 내용도

4) 任鍾琳, 「北韓의 教育·文化」 民主統一論, 統一研修院, 1989, p.156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소련共産黨史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교재도 소련에서 사용하는 교과서를 그대로 번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북한에서 공산주의적 사상과 제도는 일반 주민에게는 물론, 지식계층에게 까지 전혀 생소하고 어려운 것이었다.

그럼에도 북한공산주의자들은 학교교육과 成人教育을 통하여 공산주의 이론의 기초 지식을 널리 보급시키는 한편, 일제 식민통치 교육에서 탈피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설정하고 문맹퇴치에 치중하였다. 이러한 문맹퇴치, 식민교육의 청산, 공산주의 이론의 보급은 1946년 2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제정한 20개 정강 속에 반영되었으며, 이러한 교육은 「건국사상 총동원운동」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한편, 1950년 이후 6·25 남침기에는 “후대 교육은 가장 고귀한 革命課業의 하나”라는 구호와 함께 남침 수행을 위한 정신무장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 점차 “모든 것은 전쟁승리를 위하여”라는 구호하에 학교교육은 군사훈련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다 1953년 7월, 휴전 후에는 人力動員의 필요상 초등교육과정인 人民學校를 5년에서 4년으로 단축시켰다.

○제 2 기 : 共産主義 確立期(1953~1960)

이 기간의 교육정책은 6·25 남침으로 빚어진 파괴와 폐허 상태를 복구하고 사상적 침체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당연히 교육정책의 초점은 전후 복구를 서두르는데 맞추어졌으며, 다른 한편 金日成 1인독재체제 구축을 위한 사상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계급교양을 위주로 한 정신교육이 확대되었다.

1953년 이후, 북한에서는 “일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일하자”라는 기치 아래 소련식의 교육방법을 답습했다. 그러다 1955년 4월 勞動黨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급투쟁 강화에 대하여」라는 정책구호가 채택되자, 學校教育도 학생들에게 계급투쟁 의식을 고취시키어 경제건설에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1956年 末에는 교육제도의 개편을 단행하여 4年制 초등교육을 의무교

육화하였고, 1958년 11월에는 중학교 3년 과정도 포함시키어 7年制 의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시기에 경제건설에 동원된 노동력의 질을 높이기 위해 통신교육도 확충하였다.

1959년에는 학생들의 사회의무노동제가 채택되어 학생의 연간 의무노동시간은 인민학교 10일, 중학교 2~4주, 기술고등학교 5주, 대학 3개월로 정하여 학생들의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였다.

○제 3 기 : 革命傳統 敎養期(1961~1966)

1960년대에 들어서 북한에서는 천리마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어 이전 시기 못지 않게 각급학교에서 노동교육과 생산기술교육이 강조되었다. 그러면서 새롭게 革命傳統敎養이라는 주입식 사상교육이 학교교육의 중심과제로 되었다.

1961년 개최된 勞動黨 제 4 차 대회는 각급학교에 다음의 7가지 기본 원칙을 시달하여 敎育의 목표와 내용에 반영토록 하였다.

- ① 敎育의 목표는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다방면으로 발전된 새로운 형의 인간으로 육성하는데 있다.
- ② 이론과 실천의 결부, 敎育과 생산의 결합을 강화한다.
- ③ 기술敎育을 일층 강화한다.
- ④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한다.
- ⑤ 문화혁명의 수단으로 성인敎育을 강화한다.
- ⑥ 敎育부문에서도 천리마운동을 강화한다.
- ⑦ 학교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한다.

이어서 金日成은 1962년 5월, 「5·3교시」를 통해 각급학교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당 정책교양과 공산주의 교양을 혁명전통교양과 밀접히 연결」하여 진행하라고 지시하였다.

이 시기에는 「계급교양과 공산주의교양」, 「노동정신교양」 등의 구호와 함께 「전반적 9년제 기술의무敎育제(1966.1.1 공표)」, 「당의 중앙집

권적 「지도강화」와 같은 정책 결정들이 나왔다.

또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이 각기 전개됨에 따라 이에 대한 학습이 실시되었고, 金日成 우상화 교육도 본격화하였다.

○제 4 기 : 唯一思想 確立期(1967~1980)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교육정책은 과학기술과 생산기술의 제고, 사상교육 강화에 그 역점이 두어졌음을 앞에서 지적하였다. 1960년대末부터는 사상교육 분야에서는 黨의 唯一思想이라는 金日成 主體思想이 학습의 중심 내용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 때에 교육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난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로동신문」 1966년 11월 23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상의 문제점이 예시되어 있다.

첫째, 중등학교 수준에 대한 기술교육의 강화로 초·중급의 기술자는 어느정도 확보되었으나 근대산업 운영에 필요한 질 높은 고급 기술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청소년에 대한 기술교육 일변도에서 오는 문화 정서 수준이 너무 낮다.

셋째, 새로운 인간으로서의 정신무장이 필요하다.

1970년대에는 각급학교의 「혁명전통교양」 과목의 학습 방법으로 金日成의 革命戰跡地란 것을 꾸며놓고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이곳을 순례케 하여 金日成에 대한 충성심을 고취시켰다. 이같은 교육은 혁명전적지 답사행군, 명산고적답사, 수학여행, 대열행진 등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 들어서 勞動黨제 5 차대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 방침이 제시되었다.

- ① 학교에서 기술자, 전문가를 대량 양성하는 것이 중심 과업이다.
- ② 학교의 물질적 토대구축, 교원 대열의 정비, 교육 내용과 방법의 개선, 성인교육과 취학전 교육의 강화, 청소년의 혁명화와 노동계급화에 노력한다.

③ 청소년교양에서 부르주아사상과 봉건사상, 자유방임사상을 제거하고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위한 사상혁명이 급선무이다.

이 때에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분야와 같이 교육의 기본원칙과 근본 노선으로 제시된 것이 金日成의 「주체사상」과 黨의 「唯一思想」으로서, 이는 북한이 소련이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인 노선을 견지할 필요에서 나온 것이며, 그 명분은 자주성을 표방한다는 것이었다.

○제 5 기：世襲基盤 構築期(1980~현재)

이 시기엔 「革命的 首領觀」이란 이론을 제시하며 金日成 뿐만 아니라 金正日에 대한 우상화교육을 본격화하면서 후계체제를 구축해 나갔다. 金日成 부자 세습체제를 정당화하는 사상교육의 방편으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기치를 내걸고 인간개조론을 더욱 강조하였다. 「인간개조」라는 용어는 共產主義 教育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어휘로써 북한은 1972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에 이에 관한 조항을 포함시키고 있다.

人間改造論에 관해서는 1977년에 발표한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이미 그 의미와 목적을 여러 측면에서 규정하였다. 이 테제에서는 “...사회주의의 주인인 인민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여야 공산주의 건설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인간개조는 본질에 있어서 사상개조이며, 공산주의 인간을 키우는 데 있어 기본은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인간개조」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과 실천 방법은 1985년에 나온 「인간개조 이론」(조선로동당 40돐 기념, 강운빈 저)이라는 책에서 보다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에는 “인간개조론은 주체혁명이론의 중요부분의 하나이다. 인간개조 문제는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 사회주의·공산주의 건설에 이론, 실천적으로 매우 중대한 의의를 갖는 문제이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의 중요 특징은 저서 자체가 金日成의 교시에 의존하고 있지만

金正日의 지적 사항이라는 전제를 단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권력세습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교육의 이론과 내용에서도 김정일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권력세습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후계 세대들의 머리 속에 심어주기 위한 교육정책 방향은 1985년부터 김정일 우상화 교과목을 각급학교에서 채택하고 「金正日 따라 배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1990年代에 들어서는 “김정일의 현명한 영도로 주체교육의 화원이 개화·만발했으며 대학생들은 해바라기와 같이 오직 김정일을 충직하게 따라야한다”고 촉구하고 있다.⁵⁾

북한교육 이념과 정책은 각 시기별로 당시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다소 변화과정을 거쳐 왔다. 그러나 社會主義的 經濟 建設에 필요한 유용한 노동력의 확보, 즉 기술 인재의 양성이라는 목표는 계속 견지되었다. 그보다 북한의 教育에서 가장 중요시 되고 있는 政治 思想 教育분야에서도 변하지 않는 정책적 고려 요소는 두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그것은 ① 金日成 개인숭배 학습의 심화 ② 對南革命戰士의 양성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2) 教育정책의 특징

일반적으로 教育政策이나 制度는 教育의 이념이나 목표를 실현하는데 알맞게 결정 수립된다. 북한의 教育정책과 제도는 공산주의 教育관에 뿌리를 두고 있어 共產主義 教育에 나타나고 있는 특성을 함께 갖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교조적인 측면도 보이고 있다.

북한은 1976년 4월 취학전 아동교육(탁아소·유치원 교육)을 法으로

5) 「전국 대학생 최우등생 대회」(1990, 1, 12~13)에서 「社勞靑委員長, 최용해 보고」

규정한 「어린이보육교양법」을 제정하고 1977년 9월에는 교육강령이라는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하였다. 이 「테제」는 金日成이 그간 교육문제에 관해 행한 연설, 교시와 명령등을 틀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으로 5개의 章으로 나뉘어 있다.

제 1 장은 「사회주의교육의 원리」, 제 2 장은 「사회주의교육의 내용」, 제 3 장은 「사회주의교육의 방법」, 제 4 장은 「사회주의교육의 교육제도」, 제 5 장은 「교육기관의 임무와 역할, 교육사업에 대한 지도와 방조」인 것이다.

이 「테제」에서 밝힌 교육이념과 목표는 앞에서 지적한대로 모든 주민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여 「共產主義的 새人間」을 양성하는데 두고 있다. 이를 실천에 옮기는데 견지해야 할 원칙, 즉 정책노선으로서 ① 교육에서 당성, 노동계급성의 구현, ② 교육에서 주체의 확립, ③ 교육과 혁명 실천의 결합, ④ 국가의 교육사업에 대한 조직 진행의 책임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테제」의 발표 후, 북한에서는 이를 「주체사상을 구현한 교육강령」,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양성의 참다운 교육강령」 또는 「교육에 관한 백과전서이며 총서」라 찬양하며, 그 발표일인 9월1일을 교육절로 제정,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⁶⁾

이 「테제」가 규정하고 있는 「사회주의교육」의 개념은 이미 1968년 3월 金日成이 「교육부문 일꾼」들에게 행한 연설로 부터 유래된다. 이 연설에서 金日成은 “공산주의에 적대되는 사상인 낡은 사상,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부르주아 자본주의 사상이 특히 교육부문에 만연되어 있다”며 그런 현상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질책했다. 이러한 적대사상과 낡은 부르주아적 교육방법과 같은 教育事業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육학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여

6) 「北韓總覽」, 북한연구소, 1983, p.125

기에서 “후대들에게 개인과 집단을 결합하는 교양을 주어 모두가 다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 되도록하여야 한다”면서 이것이 곧 사회주의 사회에서 敎育學의 원리이며 기본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1971년 12월 27일에 개최된 「전국교원대회」에서 金日成은 독창적인 社會主義敎育學을 창조하고 이를 완성하여 敎育에 적용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는 북한에서 독창적인 사회주의敎育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들고 있다.

① 현재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敎育은 어느 나라의 것을 막론하고 사상혁명에 철저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으며, ②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서 청소년들이 놀고 먹기를 좋아하며 자본주의제도와 부르주아 생활양식을 동경하는 수정주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어린이 보육교양법」과 「사회주의敎育에 관한 테제」가 나왔다. 「테제」에 나타난 敎育政策方向은 전과 비교하여 더욱 교조적인 측면을 나타내고 있다. 政治思想敎育을 여타의 敎育보다 최우선시 하면서 전보다 강도 높게 강조하였으며 다음 敎育의 내용과 방법, 敎育제도 등 敎育의 모든 것을 구체적이며 획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별, 개인별로 발생할 수 있는 차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敎育테제」는 다양한 품성과 자질을 가진 個人을 모두 같은 수준의 같은 모양을 가진 인간집단을 형성하는 규범으로 되고 있다 하겠다.

「사회주의敎育學의 원리」나 「사회주의 敎育에 관한 테제」가 보여주고 있는 敎育 정책상의 특징을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敎育에 대한 당의 완전통제
- ② 조기 정치사상 敎育
- ③ 집단주의에 입각한 敎育
- ④ 노동력과 군사동원 敎育

북한의 교육은 勞動黨의 엄격한 통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 교육을 장악하고 있는 黨의 전담부서는 黨 中央委員會 비서국 산하의 「교육부」이다. (초기에는 黨中央委 「선전선동부」에서, 최근까지는 「과학 및 교육부」에서 관장) 이곳에서 세부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며 그 집행과정을 지도라는 이름으로 통제를 가하고 있다. 또한 지역당과 교육기관의 黨機構도 교육을 일일이 감시,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도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사로청)등 黨의 외곽단체들도 교육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매 시기 제기되는 黨政策을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한다. 黨의 통제로 북한의 교육은 政治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교육이 黨의 정치 선전·선동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된데에는 공산주의체제의 일반적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북한은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효율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조기교육에 힘을 기울이며 의무교육을 외형적으로 확장해 왔다. 현재 북한에서는 일부 특권층을 제외하면 幼兒가 태어나서 생후 30일 이후는 託兒所에서, 만 4세 부터는 幼稚園(낮은반)에서 양육·교육할 것을 권장 내지는 강요하고 있다. 만 5세의 유치원 높은반 과정부터는 의무교육기간으로 들어간다. 북한의 의무교육기간은 1972년부터 취학전 1년을 포함,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을 합쳐 11년제로 하고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早期教育을 강화한 것은 집단주의 정신함양 등 政治思想教育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라 보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처럼 취학전 아동의 早期教育에 역점을 두며 의무교육을 외형적으로 확장시켜 온 것은 ① 어릴때부터 가정과 전통문화체계로 부터 격리하며, ② 부녀자의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도 효율적으로 통제 동원할 수 있으며, ③ 궁극적으로는 金日成 父子를 무조건 따르는 人間을 만든다는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⁷⁾ 託兒所·幼稚園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철저하게 金日成 父子의 우상화, 반미사상과 대남혁명의식을 고취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

이러한 조기교육과 11년제 의무교육은 대남 및 국제적 선전효과도 노린 정책이기도 하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일일, 주, 월 탁아소와 유치원, 11년제 의무교육, 무상교육을 대내외에 크게 선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生産手段이 국·공유화되어 개인의 사유재산의 형성이 불가능하며 모든 소비가 국가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共產主義體制에서는 유상교육이란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의무교육, 무상교육에 대한 선전은 마치 「세금없는 나라」라는 선전과 같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허구의 선전인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개인의 개성과 소질등 특성을 무시하고 집단에 귀속시켜 당과 수령을 무조건 따르는 같은 定型의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서 집단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체주의적 집단교육은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된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第49조)는 규정에 따라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에서는 집단주의원칙에 입각한 교육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전체를 위한 하나는 있어도 하나를 위한 전체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 「하나」는 金日成 밖에 없다. 北韓 教育에서 個人은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집단의 한 구성원에 불과하다.

집단적 조직생활에 관해 「태제」에서는 “조직생활, 사회정치생활과 교육 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야 한다. 조직생활은 사상 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다. 조직생활은 곧 정치생활이며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는 과정이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학교의 집단적 조

7) 都興烈, 「北韓靑少年의 社會化實態」, 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연구, 국토 통일원, 1978, pp. 187 - 190

직생활에서는 정치사상 교양이 여러 형태로 부단히 반복되고 있다.

북한의 각급학교에 조직되어 있는 사상교양 단체로는 「소년단」(8~13세), 「사회주의 로동청년동맹」(14~28세)이 있으며, 그밖에 고등중학교에 「붉은 청년근위대」 등이 있다. 모든 학생들은 이같은 청소년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공산주의 후비대가 되기 위해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는 기치하에 각종 모임과 會議, 集團行軍과 야영등 군대의 병영생활과 같은 집단생활에 참가한다.

이러한 北韓의 集團主義 價値觀에 기초한 교육은 집단보다 개인을 우선시하는 西歐의 自由民主主義의 教育觀과는 완전배치되고 있다.⁸⁾

북한의 각급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노동력 동원이 제도화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에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생산노동을 밀접히 결합시킨다」는 규정과 「테제」에서 사회주의 교육방법으로서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명시한 바와 같이 학생들의 노동현장 투입은 정규 교육의 일환으로 취급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共產政權이 들어선 이후, 학생의 노동력 동원이 강제되어 오다가 1959년 부터는 이것이 「학생사회의무노동」이라는 이름으로 제도화되었다. 학생노동력 동원의 대상 범위는 대학생에서 인민학교 학생까지 포함된다.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勞動은 무보수로 1일 작업량이 할당된다.

북한에서 전학생에게 수업료가 면제된 시기가 바로 1959년의 「학생사회의무노동」제가 도입되면서 부터인 점을 감안할 때, 수업료의 면제액은 사실상 학생들의 노동력동원의 대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 대학생은 연간 3개월, 고등전문학교 학생은 연간 10주, 고등중학교 학생은 연간 4~8주, 인민학교 학생은 연간 2~4주의 의무노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⁹⁾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긴급을 요하는 과업을 해결한

8) 金東奎, 「北韓의 社會主義 教育에 관한 研究」 統一論叢, 제 3 권 1호 국토통일원, 1983, p.84

9) 「南北韓社會文化現況比較」, 국토통일원, 1983, p.26

다는 구실로 학생들을 수시 동원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부과된 의무노동 시간은 매년 초과되게 마련이다.

북한에서는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강도 높은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軍의 幹部化를 추진하며 軍事力 증강에 노력해 왔다. 만 14세가 되는 고등중학교 고등반 학생들부터는 정규군 못지 않은 고도의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대학의 경우는 매주 교내 군사훈련 이외에 야외훈련과 입영훈련을 받고 있다. 고등중학교 고등반에는 「붉은 청년근위대」가, 대학에는 「敎導隊」(1959년 「대학노동적위대」로 발족하여 1974년 교도대로 개편)가 조직되어 있다.

대학의 軍事組織 편성을 보면, 학교단위는 연대, 학부(전학년)단위는 대대, 학급단위는 소대로 하고 지휘관은 학교의 黨委員長이 맡고 있다. 대학의 1~2학년은 주당 7~8시간, 3~4학년은 5~6시간의 校內訓練 이외에 매학기말 1~2주의 야외훈련을 받는다. 대학 4년간에 교내훈련 960시간, 入營訓練 1,780시간 도합 2,740시간에 달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한다. 대학졸업전에 실시하는 40여일의 入營訓練에서 예비군 소위의 자격을 취득해야만 졸업장을 받을 수 있다.¹⁰⁾

군사훈련을 받는 대학생들에게 학교별 특성과 전공에 따라 육·해·공군 등의 軍種과 兵科가 부여되는데, 예컨대 金日成綜合大學은 보병, 金策工業大學은 포병, 元山水產大學은 해군 등으로 분류된다.

그밖에 북한에서는 「국방체육」을 위주로 한 體育의 대중화라는 명분하에 학생들의 전투능력을 향상하고 호전성을 기르는데 힘써 왔다.

각급학교에는 행정단위 지역과 각급단체와 같이 국방체육구락부나 해양체육구락부 등 체육구락부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의 지도하에 국방체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인민학교 學生들에게는 「전쟁놀이」, 「남조선 달리기」 등의 체육

10) 金昶泰, 「北韓의 教育」, 北韓實態, 統一研修所, 1983, p.170

종목이 부과되어 순수한 체육의 범위를 넘어선 정치사상교양 및 군사훈련과 결합된 체육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테제」의 발표이후 이상 열거한 북한 교육정책상의 특징은 날이 갈수록 더욱 교조성을 띠며 金日成이란 「人間神」에 대한 무조건성, 충성심을 고취하는데로 모아졌다.

「테제」는 주체사상을 사회주의교육에 반영시키려 한 시도였지만 이들은 서로 조화롭게 연결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유일사상 체계의 도입은 사회주의적 교육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일반적 교육원리가 희생되고 대신 김일성교시라는 주체사상의 교리가 사회주의교육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북한교육에서의 김일성, 김정일 우상화 경향이다.¹¹⁾

(3) 교육행정 및 학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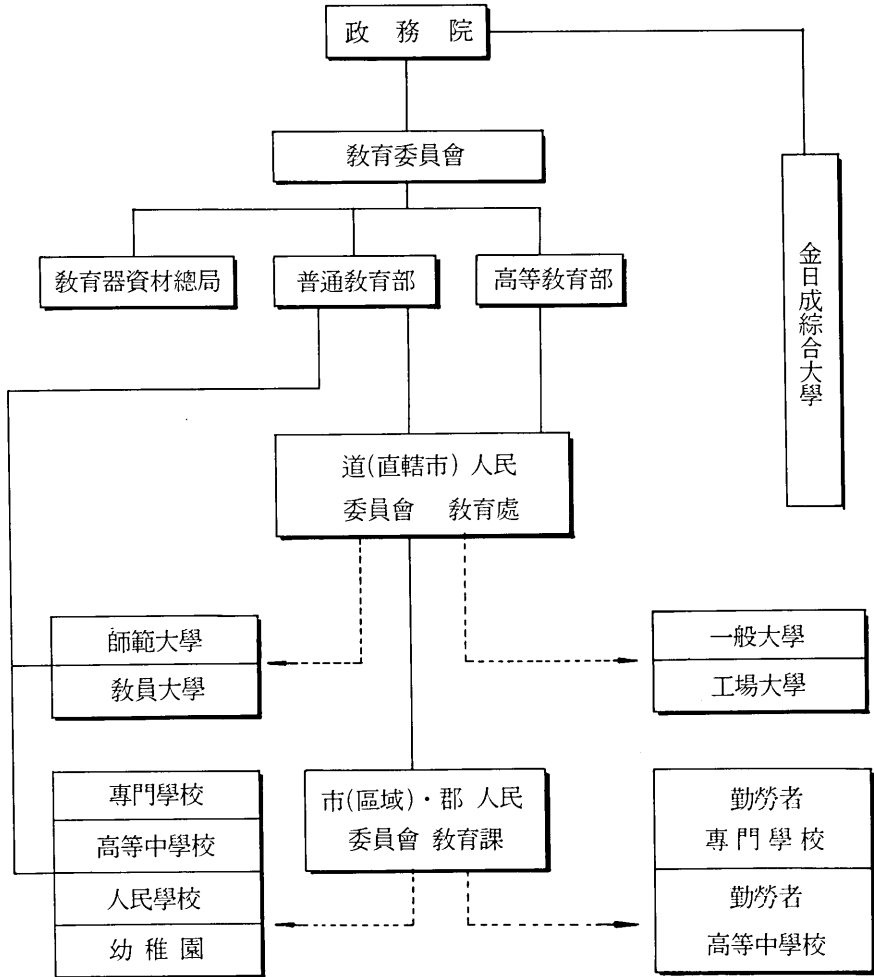
북한의 教育體系는 이미 언급한 대로 勞動黨의 완전 통제와 감독하에 놓여 있다. 교육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총괄적 지도·감독은 勞動黨 中央委員會의 「교육부」에서 관장한다. 한편, 행정부서인 政務院 산하의 教育委員會는 교육정책의 집행과 행정을 통할한다.

북한의 교육행정체계는 黨과 政務院의 통합적이고 2중적인 행정체계의 한부분으로 간주되어 일반행정에서 교육분야가 독립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정무원의 교육위원회 밑에는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있는데, 전자는 일반대학을, 후자는 교원대학을 포함한 그 밖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예외로 金日成綜合大學은 정규의 교육행정 체계에 망라되어 있지 않고 政務院에 직속되어 있다.

11) 문용린, 「교육제도와 정책」, 북한개론(책임 편집; 최명) 을유문화사, 1990, p.392

教育行政 및 統制體系圖



凡例：→行政指導體系

북한의 기본학제는 4~6~4(6)制로서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 대학은 4~6년으로 되어 있다. 대학은 종합대학, 단과대학, 교원대학의 3종류가 있는데, 단과대학은 대부분 4년제이나 교원대학은 3년제이다. 북한에서 대표적인 종합대학인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 社會科學部는 5년, 自然科學部는 6년제이다.

정규교육의 기본학제 이외에 기업소, 공장, 협동농장, 어촌과 광산 등에 근로자고등중학교와 각종 생산노동대학이 설치되어 있다.

북한의 學校教育의 특징적인 부분이 취학전 교육과 초등교육이라 할 수 있다. 취학전의 1년을 의무교육화한 것도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76년 제정된 「어린이 보육 교양법」 제 6 조에는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인간으로 키우며 여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역사적 위업 수행에 이바지 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조기교육 단계에서 共產主義思想을 효과적으로 주입하기 위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취학전 아동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목적하에 2년제인 유치원의 후기(유치원 높은반)부터 義務教育으로 삼고 있다.

초등교육은 4년제의 인민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이 시기에도 취학전 교육과 마찬가지로 共產主義革命思想의 주입에 역점이 주어지고 있다. 기초교육 과정인 인민학교의 教科에서부터 「혁명투쟁」(외적지향)과 「복종과 충성」(내적지향)을 공산주의 도덕, 윤리의 규범화 내용으로 편성하고 있다. 이같이 규범화된 인간을 보편화하는 데에는 감수성이 예민한 자라나는 世代들의 여린 감성을 유발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까지만해도 人民學校의 教材에 黨에 대한 충성이나 人民全體에 대한 가치 지향을 담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黨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는 대신 金日成·金正日 후계체제의 합리화가 주류를 이루

고 있다.

다음으로 6년제의 고등중학교에서 실시되는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의 완성 기간으로 되어있다. 중등교육기간에는 기초지식과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主體型的의 共產主義的 人間을 키운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金日成은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여 모든 학생들을 혁명적 세계관의 골격이 확고히 서고 자연과 사회에 관한 튼튼한 기초지식과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워낼 것이다.”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중학교는 4년의 중등반과 2년의 고등반으로 나누어 학습이 이뤄지고 있다. 중등교육 과정에서의 教育內容 역시 인민학교와 같은 맥락에서 혁명사상의 고취와 김일성 우상화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중등교육기관으로는 고등중학교 이외에 특수교육을 목적으로 한 특수학교(외국어, 예능, 체육 등)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1985년에는 平壤을 비롯하여 各道에 1개씩 전문 과학기술자의 조기양성을 위한 特殊科學英才學校로 「제 1 고등중학교」를 신설하였다.

북한이 최근에 와서 「제 1 고등중학교」이외에 고등교육기관도 대폭 증설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까지 김일성 우상화에 초점을 맞춘 思想教育에 만 치중함으로써 과학기술 발전이 어렵게 되자, 「합영법」의 추진등 점진적인 대외개방의 준비에 따른 技術人力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는 데에서 나오는 教育政策의 변화라 볼 수 있다.

북한에서 고등교육은 일반대학(4~6년)과 그 위에 연구원(3~4년), 그리고 박사원(2년)으로 연결된다. 일반대학과 병행하여 高等教育機關으로서 교원대(3년)와 고등전문학교(3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런 정규과정의 고등교육기관 이외에 노동 현장에 공장대, 농·어장대 등 성인교육기관도 운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진학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2~5年間 기업소등의 직장생활이나 7년 이상의 軍服務를 마치고, 그동안 黨이나 「사회주의로

동청년동맹」의 조직생활에서 인정을 받아, 黨의 영향하에 있는 각 지방의 대학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진학할 수가 있다. 가족과 친척의 출신 성분이 불확실한 사람(과거의 지주나 상인, 종교인, 6·25 당시 국군 동조자 후손)은 자격 심사에서 제외 된다.

1980年度부터 대학입학 자격고사제가 실시되고 있는데, 이는 그동안 출신 성분 위주의 대학 추천으로 많은 불만이 쌓이고, 人力資源管理에도 문제점이 생겼기 때문에 실시되고 있으나, 成分 中心의 추천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추천을 받은 者에 대한 선발 기준은 ① 出身成分 1/3 ② 團體生活評點 1/3 ③ 入學試驗成績 1/3의 비율로 평정되기 때문이다.

대학진학에 있어서 개인의 지망에 의한 學科의 선택은 거의 불가능하고 黨의 인력양성계획에 의해 배정 받는다. 보통 高等中學校 졸업생의 70% 정도는 軍에 入隊하고 20%는 직장에 배치되며, 약 10%에 해당하는 특권층 자녀 등이 예외로 卒業과 동시에 대학에 진학하는 특전이 부여된다.¹²⁾ 萬景臺革命學院 출신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대학졸업자들에게는 學位를 수여하지 않고 자격증을 준다. 인문·사회·예술분야 학과의 졸업자에게는 전문가의 자연과학과 기술분야 학과 졸업자는 技士의 자격증을 수여한다. 사범대학과 교원대학 졸업자들은 해당되는 敎員자격증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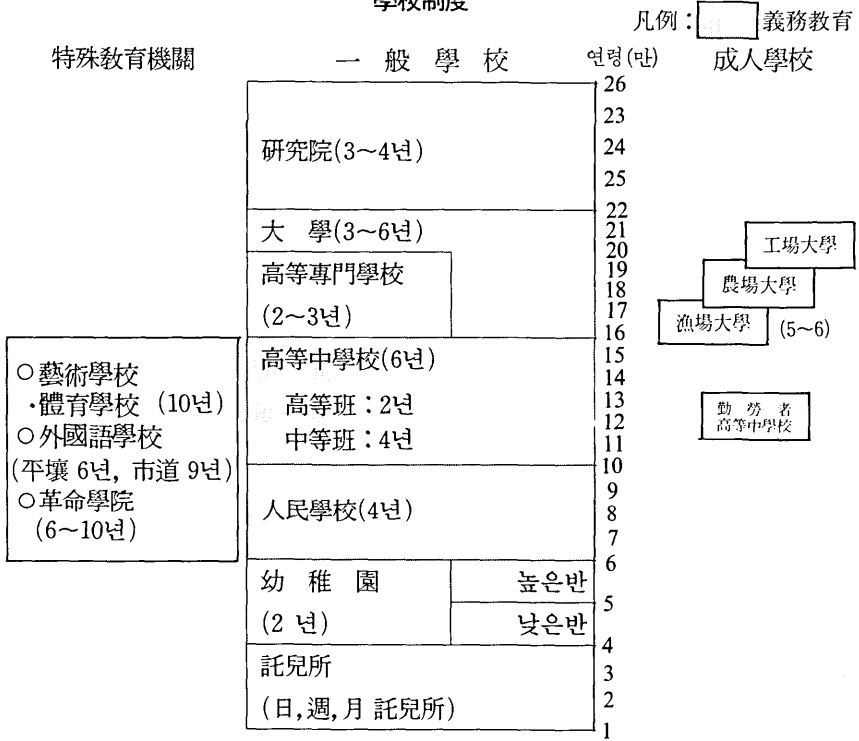
學士學位는 연구원(우리의 석사과정)에서 공부한 사람에게 부여되며, 박사학위는 박사원을 이수하고 학위 논문을 끝낸 사람에게 수여된다.¹³⁾

북한에서는 金日成綜合大學, 金策工業大學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학이 단과대학으로 전문대학의 성격을 띠고 있다. 상기 대학과 平壤醫學大學, 金亨稷師範大學등 몇개의 수준급 대학만을 中央(敎育委員會)에서 관장하고 그 밖의 많은 대학은 地方級 大學이라하여 시·도단위 행정기

12) 위의책 : p.178

13) 金東奎, 「북한의 대학과 대학생」, 민족통일 중앙 협의회의, 1987, p.84

學校制度



관에서 관장한다. 이들 지방급의 단과대학은 실제로는 韓國의 각 대학에 설치된 하나의 전공학과에 해당할 만한 것들이다.

북한은 최근 기술자, 전문가의 양성을 확대할 필요성에서 高等教育機關을 크게 신설하고 있다.

1984년에는 한 해에 40개의 단과대학과 8개의 工場大學을 새로 설립하였다고 선전하였다. 최근년에 와서는 매년 약 15개의 전문교육기관을 증설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다. 1986년에 원산 철도차량 단과대학, 은천 제염단과대학, 홀동공업대학 등 6개의 대학 등이 신설되었으며, 1988년에는 강계공업단과대학 등 4개의 단과대학과 11개의 고등전문학교를 설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이들 신설학교는 특수교육과 사회교육기관에 해당하는 것들도 있으며 그 밖에는 기능공 양성소와 같은 專門大學들이

다.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1960년에 140여개교, 1982년에 186개교였던 대학의 수가 1989년에는 235개교로 늘어났다고 한다.

북한의 敎員大學은 명칭 그대로 인민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있다. 한편 師範大學은 고등중학교 高等班의 敎師를 양성하는 제 1 사범대학과 고등중학교 中等班 敎師를 양성하는 제 2 사범대학으로 나뉘어 지며 이들 교원대학, 제 1 사범대학, 제 2 사범대학들은 각 道별로 1개교 이상씩 설치되어 있다.

1990년 10월에는 대부분의 사범대학과 기타 일부 대학의 교명을 개명하였다. 소위 金日成과 黨의 혁명 업적이 깃든 곳이라는 구실로 金日成의 혈족과 과거 그에게 충직하였다는 사람들의 이름을 교명으로 붙였다. 예컨대, 회령교원대학은 김정숙교원대학으로, 평양사범대학은 김철주사범대학으로, 함남 제 1 사범대학은 김형권사범대학으로, 청진제 1 사범대학은 오증흡대학으로, 신의주 제 1 사범대학은 차광수대학 등으로 개명하였다. 그리고 개명된 각 대학별로 북한의 당 지도층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개명 기념식을 대대적으로 갖고 金日成과 金正日에 대한 충성을 고취하였다.

北韓의 各道와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는 高等專門學校는 3년제의 직업전문학교로서 각 산업분야에 필요한 숙련공이나 기능공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양성하게 되었는데, 두종류로 대별 할 수 있다. 하나는 北韓全域에 공통으로 필요한 직종의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建設專門大學, 藝術專門大學등이 이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을 전문으로 하는 곳으로 茂山高等鑛業專門學校, 第 2 高等陶磁器專門學校등이 이에 속한다.

成人教育機關으로는 공장대학, 광산대학, 농장대학, 어장대학 등이 공장, 기업소, 광산, 협동농장 등에 부설되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직능 교육을 시키고 교육기간은 5~6년으로 2部制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學校는 대학이라기 보다 工場·企業所 근로자들의 기능 향상을 위한 기능

인 養成所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증설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들은 세분화된 직업별 전문 대학이 아니며 工場大學, 農場大學 등 직장부설 성인교육기관들이다.

北韓은 특수학교들을 설립·운영하고 있는데, 萬景臺革命學院, 康盤石革命學院과 같은 특수층 자녀가 들어가는 교육기관과 무용, 음악, 조형예술 등의 특기자가 들어가는 藝體能系 學校가 있다. 이들 학교의 대부분은 유치원의 「높은 班」과정부터 고등중학교까지의 11년제로 되어 있다. 해외 선전활동에 종사할 特技者를 양성하는 예체능계 학교의 학생 선발에 있어서는 特技 이외에도 출신성분과 사상성이 중요시 된다. 이런 특수학교들은 장기간 일정한 틀 속에서 學生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제도적 利點을 가지고 있다.

북한이 매년 발간하는 「조선중앙년감」에는 취학전 유아교육기관인 탁아소, 유치원이 6萬에 거기서 약 3백만의 어린이가 양육되고 있다는 선전을 하는데, 평양의 다른 선전자료에는 탁아소가 28,358개, 유치원은 19,262개가 도시와 농촌에 분포되어 거기서 200만의 유아가 양육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¹⁴⁾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1985년 현재로 인민학교는 4,792개교, 고등중학교는 4,738개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생의 총 수는 492만3천명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郡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고등전문학교의 수는 약 600개가 있다고 한다. 현재 대학은 235개교로 추정되며, 그중 40%는 공장·농장대학들이다.

다. 教育內容과 方法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는 “모든 교육 조건과 수단은 사람의 사

14) 朝鮮概觀(평양외국문 출판사, 1987) 번역자료, 국토통일원, 1988, pp.161~

상을 개조하는데 복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은 그들의 교육이념과 목표 달성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人間改造에 의한 「공산주의적 새인간」의 양성- 이것이 교육내용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1) 教育내용

北韓의 초중등학교 교과내용을 크게 둘로 대별한다면 ① 김일성 우상화와 대남혁명의를 고취하는 政治思想教育과 ② 생산·건설에 필요한 기술인력양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생산현장교육을 들 수 있다.

북한학생들이 의무교육기간중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인민학교 교과목 명칭 및 비중 순위

순위	교 과 목	비중치 (%)	순위	교 과 목	비중치 (%)
1	국 어	32	6	자 연	6.2
2	수 학	23	7	*경애하는 수령 김 일성 원수님 어린시절	4.2
3	체 육	8.4	8	*특 강	4.2
4	음 악	8.4	9	공산주의 도덕	4.2
5	도 화 공 작	8.4	10	*위생독본	1.0
				總10科目	100(%)

출처：北韓의 學校教育課程分析, 文龍麟, 국토통일원, 1987

북한의 학교교육과정 분석결과 나타난 人民學校의 교과목 구조상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國語, 數學, 政治·思想教育(경애하는 김일성, 특강, 공산주의 도덕) 이 전체교육의 67.6%에 이르고 있어 이 세 영역에 매우 큰 강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 즉 과학분야에 대한 강조가 특이하게 낫다. 人民學校 教育課程은 학생들에게 통합적 경험을 주기 보다는 교과영역별 경험을 주기에 합당하게 꾸며져 있다.

人民學校의 教育課程은 道具教科(국어, 수학) 및 政治教育(金日成 思想, 특강, 공산주의 도덕)에 너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全人的 人格育成과 有關한 교과(체육, 음악, 미술, 순수도덕)에 대한 比重이 高르지 못하다.

高等中學校에서는 1~6년간에 걸쳐서 다음 표와같이 총 24개 教科目を 가르친다.

고등중학교 교과목 명칭 및 비중 순위

순위	교 과 목	비중치 (%)	순위	교 과 목	비중치 (%)
1	수 학	18.4	14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	2.7
2	국어문학	11.6		수님 혁명활동	
3	물 리	8.3	15	기술기능실습(5,6년)	2.7
4	외 국 어	7.5	16	음 악	2.1
5	화 학	5.8	17	현행 당정책	1.5
6	생 물	5.6	18	공산주의 도덕	1.0
7	지 리	5.1	19	자 연	1.3
8	체 육	4.5	20	위생독본	1.0
9	역 사	4.2	21	미 술	1.0
10	한 문	3.7	22	제 도	0.9
11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 혁명 역사	3.0	23	기초기술	0.8
12	특 강	2.9	24	전기·농업기본	0.8
13	여학생 실습 및 공작실습(남)	2.8			
				총 24과목	100(%)

출처 : 北韓의 學校教育課程分析, 文龍麟, 國道 통일원, 1987

상기 표에서 보듯이 北韓은 高等중학교의 教科科目을 統合的으로 構成하려는 努力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학과목영역의 비중을 살펴보면 數學을 위시한 科學系統의 學科科目이 전체비중의 41.6%를 차지 한다. 그 다음이 語學(國語, 文學, 漢文, 外國語)으로 22.8%, 政治思想教育領域(金日成 革命歷史 및 活動, 現行 黨政策, 特講, 共產主義 道德等)이 11.6%, 社會領域이 9.3%, 藝·體能이 7.6%의 構成比를 갖는다.

학교별 교과내용

학 교	과 목
인 민 학 교	국어, 산수, 김일성혁명활동, 공산주의도덕, 역사, 지리, 자연, 음악, 미술, 체육 등 10~12과목
고 등 중 학 교	국어, 수학, 김일성혁명활동, 공산주의도덕,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역사, 세계사, 외국어, 음악, 미술, 체육 등 20여과목
대 학	전공·학교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당 투쟁사, 김일성주의철학, 정치·경제학 등은 필수 과목으로 이수

출처：北韓의 實相(韓國精神文化研究院편)1986. p.220.

이들 교과서에서 정치사상적 내용을 담고 있는 요소들을 보면

- ① 주체사상으로의 무장과 이를 위한 혁명전통교양
- ② 공산주의의 승리에 대한 확신과 혁명적 낙관주의 견지
- ③ 제국주의, 지주·자본가 계급에 대한 증오심의 고취
- ④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정신의 함양
- ⑤ 집단주의 정신의 교양
- ⑥ 노동을 사랑하는 정신의 함양등이다. 이러한 정치사상교육 내용은 인문계통의 교과에서는 물론, 자연과학계통의 교과들인 수학이나

물리학의 교재들에도 들어 있다.

「테제」는 “정치사상교육을 잘하는 기초 위에서만 과학기술교육과 체육교육도 성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미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에서 “어떤 과학이나 모두 혁명에 복종해야지 우리 혁명에 이바지하지 않는 지식은 아무 소용도 없다”라고 하였듯이 數學이나 體育까지 정치사상교육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數學教育에서는 數의 구조적 개념을 이해시키기 보다는 실용성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계산문제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政治, 經濟, 軍事問題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북한의 인민학교 교과서 국어, 산수, 공산주의 도덕, 김일성혁명활동, 음악, 글씨, 圖畫工作 등 7개 과목을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총 304개의 단원 중에서 金日成과 그의 家系 우상화가 96개 단원으로 32%, 대남적대의식과 反美思想 고취가 81개 단원으로 27%, 北韓體制 찬양이 28개 단원으로 9%이다. 이 세가지가 도합 205개 단원에 68%에 이르고 있다. 여타의 組織 및 一般教養은 99개 단원으로 32%에 불과하다.

北韓의 각급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政治思想 內容의 일부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¹⁵⁾

〈김일성 우상화〉

- 태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원수님 은덕(인민교4 국어)
-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르듯 수령님 교시따라(고중3 국어)
- 수령의 방문과 밤잠(고중3 국어)

〈대남적개심 및 계급의식 고취〉

- 남조선 실업자수의 증가율(고중1 대수)
- 남조선 매혈매안구 $5+5=?$ (인민1 산수)
- 욕심 많은 개(인민1 국어)
- 어린이에 대한 지주의 만행(공산주의 도덕)
- 욕심장이 지주를 인민들이 죽여버렸다.(공산주의 도덕)

15) 金昶泰, 「北韓의 教育」, 北韓實態, 統一研修所, 1983, p.177

〈배외사상(반미·반제)〉

- 명성 아버지 얼굴 흠집은 미국놈이(인민3 국어)
- 미국놈 탱크 50대중 인민군이 30대를 까부셨다. 앞으로 몇 대를 더 까부셔야 하는가?(인민1 산수)

北韓의 정치사상 교육내용 가운데, 특히 주목할 점은 「제국주의, 지주·자본가 계급」에 대한 증오사상의 고취이다. 金日成은 비논리적으로 과거를 뜯어 맞춘 「혁명적 세계관 형성의 3단계론」을 제시하면서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을 증오하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⁶⁾ 여기서 착취사회와 착취계급이란 韓國社會를 다른 말로 지칭한 것에 불과하다.

북한의 대남 적개심을 고취하는 지속적인 교육은 民族·民主教育에 명백히 배치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教育內容은 남북한의 이질화와 적개심을 더욱 심화·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온 기본적 요인으로 民族의 同質化와 和음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북한의 政治思想內容을 담은 교과서에는 호전적 언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 북한의 교과서는 물론 신문, 라디오 등 매스컴에서도 적개심을 고취하는 호전적, 혁명적 용어들을 일반 생활언어로 사용하고 있다. 즉, 까부시다, 원수, 놈, 피바다 등의 말이 통상어로 사용되고 혁명의 전취물, 타승(승리), 고지점령(목표달성)등과 같은 군사적 용어가 계속 만들어 지며 교육용어로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言語를 「혁명과 건설의 무기」¹⁷⁾로 간주하고 있는데에서 연유한다. 「원수」, 「놈」, 「피바다」와 같은 전투적 말을 계속 사용케 하는 것은 청소년때부터 평화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고 투쟁적인 의식구조를 형성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체제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

16) 「사회주의 교육학에 대하여」(평양 :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3) pp. 375~378
 및 문용린, 北韓 共產主義 教育 方法 分析, 國토통일원, 1989, pp.8~13 참조

17) 「문학예술사전」(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2), p.1076

성된 人格形成을 목표로 體育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체육은 신체를 다방면으로 발달시켜 집단주의 정신과 혁명적 동지애, 군센 의지, 그리고 규율 준수에 대한 자각성과 책임성 등 고상한 사상과 도덕적 품성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이바지하는 수단이다”¹⁸⁾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體育을 통해 革命과 建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강인한 투사형의 인간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체육정책은 金日成의 「항일혁명투쟁」 시기에 독창적으로 창조했다는 소위 「혁명적 체육전통」에 기본을 두고 모든 政策을 이와 병행하여 발전시켜 나간다고 강조한다. 그 內容은 국방체육의 대중화, 생산노동과 체육활동의 결합, 體育을 통한 金日成 우상화인 것이다.

북한에서는 군중체육 혹은 체육의 대중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노동과 국방에 기여하는 國防體育의 강화를 강조한다. 國防體育을 위주로 한 체육의 대중화라는 기치 아래 전주민의 전투능력 향상을 꾀해 오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體力向上을 위한 경기종목으로 사격, 산악훈련, 장애물 넘기, 격검, 수류탄 던지기, 트랙터 운전, 응급처치법, 독도법, 수기 신호, 무기 분해 결합 등 20여종에 달하는 국방체육의 경기를 시키는데, 이렇게 실질적인 군사훈련을 통해 군사기술 향상은 물론 호전적인 기질을 갖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 고등반이상에서는 학교 「사로청」지도하에 과외활동시간과 매주 토요일(체육의 날)을 이용하여 사격과 제식훈련을 포함한 각종 군사기재의 조작성은 물론, 인접지역의 지형지물을 익힘으로써 유사시에 대비한 지역단위 방위훈련까지 겸하여 실시하고 있다.

북한 학생들은 일반주민에게 生産活動과 體育을 결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급한 「업간체조」(業間體操)나 「생산체조」(生産體操)도 하고 있다.

18) 「정치 용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0), p.1076

北韓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동자원 확보와 부진한 생산실적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體育活動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로하여 “사회주의의 체육은 노동에 몸 바쳐 일하도록 하여 나라의 경제에 이바지함으로써 인민생활을 향상시킨다”고 합리화하고 있다.

북한에서 실시되는 體育은 순수 아마추어정신의 발휘보다는 金日成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한다는 政治思想性이 강조되고 있는 등, 어떤 體育活動이든 정치생활의 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體育에서도 金日成思想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은 「주체사상」과 「혁명전통」을 매개로 한 金日成우상화가 본격화된 시기부터였다.

金日成 우상화와 관련된 체육경기의 명칭으로는 「4천만 조선인민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 드리는 충성의 편지 전달」, 「우리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의 배움의 천리길 이어달리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돛기념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김일성 우상화를 위해 대규모로 진행하고 있는 集團體操(마스케임)의 구호도 「김일성 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을 따라 배우자」, 「대를 이어 혁명의 꽃을 피우자」, 「수령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김일성 원수님께 무한히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자라나겠습니다」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북한의 學校教育은 革命的 이익에 「복무」하고, 黨의 노선에 충실하며, 金日成에 대한 무한한 忠誠心 발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教育방법

북한에서는 「공산주의적 새형의 인간」양성을 위해 조기교육에서 평생교육까지, 集團教育에서 反復教育까지 다양하게 洗腦와 馴致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教育方法으로 ① 깨우쳐주는 교육 ② 이론과 실천교육, 교육과 생산로동의 결합 ③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 ④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 ⑤ 학교전교육, 학교 교육, 성인교육의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태제」에서 제일 먼저 제시하고 있는 教育方法인 「깨우쳐 주는 교육」은 물론 학교 교과목의 수업을 통한 학습을 말하는 것이다. 「깨우쳐 주는 방법」으로는 소련의 파블로프(I. P. Pavlov:1849~1936)의 조건반사理論을 원용하고 있다. 반복을 통한 조건화형성과 같은 행동주의적 이론의 적용이 인간개조에 유용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양한 현상을 단순화시켜 같은 內容을 반복적으로 학습시킨다든가, 반대로 단순한 논리를 복잡한 형식으로 전개시키어 어려움을 줌으로써, 스스로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치 않고 다만 조건반사하는 인간집단을 육성키 위해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 그 밖의 方法論으로 소련의 교육학자인 마카렌코(Makarenko)나 크루프스카야(Krupskaya)등이 제시한 이론을 적용하고 있다. 마카렌코의 集團主義教育 原理와 크루프스카야의 「이론과 실천의 결합」 이론, 「조기교육 효과」의 이론 등등이 그러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여러가지 教育方法 가운데 특히 理論教育和 實踐教育,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을 강조하고 있다. 共產主義 教育에서 교육과 생산활동이 결합되지 않은 지식은 無用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革命을 하나의 실천운동으로 보는 共產主義者들의 행동지침을 따른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학생에게 공부만 시키면 「머저리 인테리」, 「양반 인테리」가 되기 때문에 勞動을 시킴으로써만 학생들을 改造할 수 있다고 말한다. 교육과 생산활동의 결합, 혹은 산 지식을 가르친다는 명분으로 학생들은 수시로 생산노동에 동원되게 마련이다.

북한에서는 集團主義教育 理論에 입각해서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들은 “조직생활은 사상 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 교양의 학교이다”¹⁹⁾ 라는 주장을 하는 바와 같이, 조직생활에서는

19)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태제」, 北韓 概要, 국토통일원, 1983, p.341

공산주의의 적대사상으로 되어 있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부르주아思想이 용해되어 없어진다고 한다.

북한에서는 思想革命은 누구에게나 이기주의, 개인주의 사상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면서 집단주의원칙을 강조한다. 적대사상은 出身成分이 좋고 나쁨을 막론하고 農民이나 勞動者에게도 있기 때문에 組織生活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기에 학생시절부터 學校生活에서 조직생활을 일찍이 體得시킴으로써 集團主義 社會를 유지 강화해가고 있다. 집단과 조직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개인의 독창성과 자유는 위축되기 마련이며, 획일성의 요구는 비인간화와 인권의 억압을 파생시키기 마련이다.²⁰⁾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결합」은 학생들의 공산주의적 사회·정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 대학생들이 黨政策 宣傳隊, 科學 宣傳隊 등의 선전대를 조직하여 공장, 기업소, 농촌에 나아가 주민들에게 정치, 경제 선전 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다. 大學生의 경우 스스로 노력 동원에 참여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정치활동으로서 다른 사람도 노력동원에 참여시키는 선전활동을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20) 문용린, 北韓 共產主義 教育 方法 分析, 국토통일원, 1989, p.7.

3. 北韓의 文化

가. 文化構造와 政策

(1) 문화구조

북한의 공산체제는 외부로 부터 들어온 唯物史觀을 교조적으로 적용한 「인류의 역사는 階級鬭爭의 歷史이며, 계급투쟁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라는 歷史觀에 입각, 계급적이며 혁명적인 文化 價値體系를 추구하여 왔다. 그러나 金日成 1인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유물사관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면서 정치적 구호인 「김일성 주체사상」을 사회 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지도적 지침으로 내세웠다. 그 결과 한 개인에 대한 충성이 최고의 文化的 價値와 目標가 되었다.

현재 북한에서는 金日成이 모든 진리를 독점하여 중세기적인 교조주의 독단론에 바탕을 둔 획일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文化는 김일성 교시문화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여 「우상숭배 문화」, 「한사람 생각의 문화」, 「획일적 문화」, 「피바다 문화」로 정의하기도 한다.²¹⁾ 이러한 김일성 교시에 의거한 계급문화는 우리 民族의 文化 正統性에서 크게 이탈해 있다.

金日成은 우리 韓民族의 正統문화의 뿌리를 없애고 대신 자기 개인의 역사로 대치시키면서 「革命傳統 文化」 혹은 「항일 유격대식 문화」를 강조한다. 北韓共產主義者들은 1948년 9월 共產政權을 수립하기 전부터 표면적으로 日帝文化의 잔재 소탕과 민족문화 보존의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共產主義를 이식하기에 급급하였다. 그들은 6·25 남침 이후

21) 南北韓社會文化現況 比較, 國土統一院, 1981, p.61

社會主義的 改造를 강행하면서 傳統文化의 말살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했다.

북한에 공산주의가 들어온 후, 우리 民族의 전통적 미풍양속도 공산주의식으로 특이하게 해석할 뿐 아니라 새롭게 「공산주의적 도덕품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공산주의 인간성과 문화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것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와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이다. 즉 모든 사회현상과 文化的 要素들을 사회주의적인 것과 부르주아적인 것으로 구분하여 革命的이나 反動的이나를 판단한다. 북한이 공산주의 도덕품성, 혹은 공산주의 人間性과 文化性이라 하는 內容은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集團主義精神, 자력갱생의 혁명정신, 노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충실한 것이라 한다.²²⁾

集團主義精神은 자아의식을 버리고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집단에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共產主義的 人間觀에 기초한 것인데, 이에 의하면 個人은 全體主義社會의 한 구성원으로서, 組織社會의 細胞로서 부과된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 하는 존재이다. 북한에서는 유물론에 입각해서 人間의 精神을 물질의 반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창조성은 「黨의 결정」혹은 「수령의 敎示」에 충실할 때에 발휘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개인은 계급투쟁과 혁명을 위해 언제라도 희생되는 것이 가장 가치있는 행위로 된다.

共產主義를 창조적으로 적용한 것, 혹은 그것을 오늘의 현실에 맞게 더욱 심오 발전시킨 것이 주체사상이라고 선전하지만 사실은 「마르크스·레닌主義」를 극히 교조적으로 혹은 편향적으로 해석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독단적이며 비과학적이다.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가진 북한의 文化體系도 당연히 현실성이 결여될 수 밖에 없으며, 나아가 文

22) 정치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化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 영역을 확보치 못하고 政治에 예속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이 나름대로 도덕적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는 「혁명적 낙관주의」와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個人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데에서 부터 나온 발상이다. 이는 한편으로 社會主義와 共產主義의 승리를 확신하고 이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만, 다른편으로는 革命的 敵을 증오하고 타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 지적인 집단주의정신,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는 그들이 강조하고 있는 軍중문화사업, 생산문화, 생활문화의 핵심내용이기도 하다.

(2) 문화정책

북한이 확립하려는 사회주의 사회에 맞는 文化를 그들 스스로 社會主義文化 또는 階級文化라 한다. 이러한 文化는 공산주의적 世界觀과 革命思想, 그리고 계급적이며 집단적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을 총칭하는 것이다.

金日成은 文化의 형식과 내용을 구분하면서 이를 社會主義化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혁명이란 낡은 제도를 뒤집어 엮고 새 제도를 세우는 것이다. 문화혁명을 하는 데는 낡은 것을 없애고 새 것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이다. ……문화혁명을 한다고 하여 그 형식을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형식을 다 없앨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사회주의적으로 만들라는 것이다.”²³⁾

이같이 傳統文化의 정신, 혹은 그 핵심내용은 모두 빼버리고 그 형식에 사회주의적인 文化의 內容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 北韓 文化政策의 기본 방향이다.

1972년에 채택한 「사회주의 헌법」에 그들 文化政策의 기본방향을 14개

23) 金日成主義原理(통혁당 중앙위 선전부, 1974), p.182

조(제35~48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골자는 다음과 같다.

①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전면적으로 발전”(제35조), “문화혁명을 철저히 수행”(제36조), “혁명적 문화를 건설”(제37조)

② “제국주의의 문화침투와 복고주의적 경향을 반대”(제37조),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문화예술을 발전”(제45조)

③ “「공산주의적 새인간」양성의 사회주의 교육원리”(제39조), 과학, 기술, 문학, 언어, 체육, 보건, 위생, 생활양식 등의 전문화 분야에서 사회주의적 문화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헌법에 규정한 문화정책 방향을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라 지칭한다.

북한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의 건설을 위해 文化革命을 강조하는데, 이는 사람의 사고, 감정, 행동양태, 생활양식까지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은 文化革命을 수행하는 도구로서 문학·예술을 가장 중요수단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들의 文藝政策 역시 金日成의 敎示에 잘 나타나 있다. 金日成은 1970년의 勞動黨 5차 대회의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의 문학예술과 모든 문화사업은 인민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이며, 인민에게 투쟁의 무기로서 복무하여야 한다. 군중을 교양, 개조하는 데는 학교교육만으로는 안되며 선전·선동만으로도 안된다. 대중교양의 훌륭한 수단인 소설, 시, 연극, 영화, 음악 등 모든 형태의 문학예술을 다 동원해야만 군중을 교양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文藝觀과 文藝政策 方向에 관한 논조는 그들의 출판물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문학예술은 사람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서 큰 역할을 맡고 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절대로 혁명적 리익과 당의 로선을 떠나서는 안되며 착취계급의 취미와 비위에 맞는 요소를 허용하여서도 안된다. 오직 당의 노선과 정책에 철저하게 의거한 혁명적 문학

예술만이 진정으로 근로대중을 공산주의적 혁명정신으로 교양하는 당의 힘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²⁴⁾고 하는데, 이는 政治를 떠난 文學·藝術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따라서 북한의 文藝人들은 순수한 예술가가 아닌 金日成 父子體制를 유지, 강화하는 혁명가로서 「혁명적 작품」을 통해서 「넓은 사상과 복고주의적 생활양식이 발 붙일 수 있는 사소한 틈」마저도 없애는데 전념해야 한다.

1970년대 부터는 金正日이 北韓의 文藝事業을 주도함으로써 남북한간의 이질화는 더욱 심화되었다. 金正日은 자신의 정치적·사상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文藝政策을 主體確立, 唯一思想體系確立, 革命傳統確立의 방향으로 전개해 왔다. 이에 조금이라도 배치되는 사고방식, 감정, 언어, 행동양식은 곧 反動文化로 배척한다.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문학·예술의 창작활동의 구체적 목표를 들면, ① 김일성과 그 가계의 우상화, ② 당정책의 구현과 선전, 찬양, ③ 공산주의적 인간개조, ④ 노력동원 및 노동의욕 고취등이다.

북한의 文藝政策에는 그들의 文化的 性格이 잘 나타나 있다. 그들의 文藝政策은 통합적이고 조직적으로서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政策目標은 교육과 마찬가지로 어디까지나 하나의 방향인 「金日成 父子體制의 공고화와 全國의 범위에서의 革命完遂」로 집약된다.

나. 文化生活

(1) 문예활동의 특징

북한의 작가·예술인들은 勞動黨 中央委 秘書局의 부서인 「文化藝術部」와 政務院의 부서인 「文化藝術部」로 부터 2중적인 통제를 받고 있다.

24) 「김일성 저작선집」2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p.157

黨과 政權機關의 「문화예술부」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1961. 3.2)의 조직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북한은 본래 각 예술 분야별로 구성되었던 작가 예술인들의 同盟組織을 통합하여 「文藝總」을 결성하였다. 「문예총」은 중앙조직과 각 직할시·도 조직으로 되어 있으며, 그 산하에 작가동맹, 기자동맹, 음악가동맹, 연주가동맹, 연극인동맹, 영화인동맹, 무용가동맹, 미술가동맹, 사진가동맹등 9개 단체가 있다.²⁵⁾

북한의 작가·예술인들은 이 組織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勞動黨의 창작, 연주, 공연 계획에 따라 활동해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각자의 특기와 예술적 개성을 살리는 개인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실에 출근하여 「집체창작」에 임해야 한다. 또한 文藝人들은 「작품제작을 현지에서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장, 광산, 건설장, 농어촌에 직접 나아가 일하면서 체험도 하고 군중을 黨 주위에 묶어세우는 선동요원의 역할도 겸하게 된다.

북한의 文藝活動에서 중요한 것의 하나는 소위 「예술소조」의 운영이다. 예술소조는 지역별 각 공장·기업소, 협동농장등 생산 직장별, 부대별, 학교별, 기관별로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있다.²⁶⁾ 이들 小組은 작업중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음악, 무용 등 공연 활동을 벌이며 이들 공연을 통해 金日成우상화, 黨政策의 선전, 노동의욕을 고취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북한에서는 창작활동에서 지켜야 할 몇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社會主義的 寫實主義 창작방법이다. 그들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란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창작법이라한다.²⁷⁾ 이 창작방법은 “전형적 환경에서 전형적 성격을 역사적 구

25) 任鍾楸, 「北韓의 教育·文化」 民主統一論, 統一研修院, 1989, pp. 182~183

26) 1979년에는 「예술소조」가 11만 2천개가 된다고 발표한 바가 있다.

27) 「문학 예술사건」(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2), p.497

체성과 혁명적 발전 속에 진실하게 묘사하되, 공산주의적인 긍정적 주인공을 주도적인 입장에 세워 그가 승리하는 과정을 형상화하는 창작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주제와 내용으로는 「金日成의 업적과 덕성」, 「혁명전통」, 「혁명의 전취물 수호」, 「조국해방전쟁」, 「사회주의건설」, 「조국통일」등 순수예술의 추구보다는 목적의식적으로 黨政策의 선전과 사상교양에 관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둘째, 黨性, 階級性, 人民性의 구현이다.

階級性이란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적 의식의 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는 文學·藝術은 어느 한 계급의 입장을 대변하여야 한다며, 그것을 절대 지지 옹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주장하는 黨性이란 문학·예술이 철저히 계급성을 띠며, 黨性·階級性을 분리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것은 바로 목적의식적으로 표현되는 강한 계급성을 黨性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문예활동은 美의 창조보다는 黨政策의 선전선동에, 창작보다는 모방에, 예술성 보다는 思想的 表現에 주력하게 된다.

셋째, 종자이론(種子理論)의 적용이다. 이 종자이론은 金日成의 文藝理論에 기초하여 金正日이 독창적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여기에서 종자란 작품에서의 주제와 소재를 결정하는 요소, 즉 中心思想을 가리키며, 그 중심사상이란 金日成 主體思想과 黨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충실성을 말한다.

북한에서는 종전의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이론에 이 종자론을 가미한 것을 문학·예술의 기본원칙이라 하는데, 이를 「金日成主義의 실천적 美學」이라 표현하고 있다. 그들은 革命思想의 核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씨앗을 생산한다는 뜻에서 이 理論을 내놓고 있다.²⁸⁾

28) 「북한총람」, 북한연구소, 1983, p.1084

文藝作品的 창작에서 主題別 비율은 1964년 11월 7일 「문학·예술부문 일꾼」들 앞에서 한 金日成의 연설에서 제시한 敎示에 따라 사회주의건설과 혁명투쟁에 관한 것을 각각 5:5로 하되, 그 가운데 혁명투쟁에 관해서는 북한의 혁명생활을 4, 남한의 혁명투쟁을 1의 비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²⁹⁾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金日成 族벌정치의 중심과제로 金正日의 권력세습의 문제가 대두되자 문학예술분야에서는 金日成과 그 가계를 우상화하는 작품 생산이 최우선 과제로 제기되었다.

북한에서는 金日成이 절대적 존재이기에 그에 관한 형상화가 어느 한 작가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하여 集體創作을 강요하기에 이르러 소위 「4·15」 창작단을 만들었다. 여기에서 金日成을 주인공으로 하는 장편집 「불멸의 역사」를 비롯한 우상화 작품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예사업에 金正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데, 1982년 金日成 70회 생일을 기해서 많은 기념 작품을 제작하였다. 북한은 이러한 작품들이 金正日의 천재적 지도하에 완성되었다며, 「기념비적 창작물」 또는 「세계적 명작」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문예활동은 집단체제 지향의 내용과 정치이데올로기의 정당성 묘사 및 선전 선동 도구로서 그 가치를 인정 받게 된다. 그리고 모든 작품은 黨의 통제·조정하에 계획, 생산되고 있으므로 作品에 대한 批判이란 있을 수 없으며, 단지 특정인을 숙청, 제거시켜야 할 정치적 필요성이 있을 때에만 비판이 있을 뿐이다.

(2) 분야별 문학·예술실상

가) 문학

북한의 文學은 순수문학의 범주를 벗어나 黨의 政策을 구현하며, 「인민」들을 공산주의적 世界觀으로 무장시키는데 봉사해야 하므로 주제나

29) 「김일성 저작 선집」4권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소재의 선택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작품의 素材는 대부분 革命性을 중시한 사회주의적인 내용들이고, 등장 인물들도 金日成과 黨에 충직한 소위 영웅들만 묘사하고 있는등, 혁명적 낙관주의와 집단적 영웅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근래에는 소위 金日成의 革命鬪爭과 家系の 美化, 그리고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 투쟁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창작되고 있는데, 「피바다」, 「어느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등의 장편 소설이 그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꽃파는 처녀」는 이른바 항일투쟁시기에 金日成이 직접 창작한 원작을 그대로 장편 소설화하였다는 것으로, 이 소설을 “혁명적 문학·예술이 지켜야 할 미학적 원칙들을 가르쳐 주는 참된 교과서”라고 선전하고 있다. 1987년 7월 15일에는 날조한 金日成의 항일투쟁을 주제로 한 전 15권의 혁명 역사 소설인 「불멸의 역사」의 창작을 완성했다고 선전하며 주민들에게 읽히고 있다.

나) 음악

북한은 음악을 주민의 심성을 자극하여 金日成 父子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케하는 등, 思想敎養 手段으로 간주, 음악의 대중화와 집중 보급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한의 音樂은 다른 예술부문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創作原則과 首領과 黨에 대한 충성심을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는 「主體文藝理論」에 입각하여 창작, 연주되고 있다.

북한에서는 1950年代 중반까지만 해도 베토벤, 차이코프스키 등의 작곡이 연주되었으나, 그 후부터는 음악이 金日成 찬미와 革命化, 勞動階級化를 위한 선동수단이 되었다. 김일성 1인지배체제가 완전히 구축된 1970년대에 와서는 金日成과 그의 가계를 찬양하는 음악 작품들이 증가되었다. 1977년 평양 문예출판사 발행 「조선 음악 600곡집」에는 302개의 가곡이 수록되었는데, 이 가곡들을 분류해 보면 232곡이 金日成을 찬양하는 노래로서 80%를 차지하고 있다. 1990년 문예출판사에서 발간한

「조선음악전집-7」에도 김정일이 친히 지도한 노래 432편이 수록되었다고 선전한다.

북한의 음악도 선율면에서 소련 민요와 중국풍의 양식을 따르고 있고 노래는 韓國의 국민가요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唱法은 「鼻聲」 중심의 독특한 발성법을 요구하고 있다. 즉, 북한 音樂의 기본형태는 민족전통음악과 서양음악을 배합한 독특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음악의 내용은 대중에게 黨政策을 주입시키기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악곡에 치중한다. 성악곡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것은 노래보다 思想이 담긴 가사를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歌劇(가무극)을 집체적으로 작사, 작곡, 안무하여 많이 공연하고 있다. 이른바 5대혁명가곡인 「피바다」, 「꽃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별」, 「금강산의 노래」등은 모두 集體作들이다.

북한에서 연주되는 전통음악의 장르는 주로 민요이며, 그 밖에 가야금 병창, 농악등이 있을 뿐이고 아악, 판소리, 산조, 종교음악, 잡가등은 연주되지 않는다. 연주되고 있는 것이라해도 전통적 內容이 아니라 가사를 새롭게 만들어 부른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보편적인 악기는 아코디온과 기타인데, 이는 각 공장, 농장등 직장별 예술소조가 가장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악기이기 때문이다.

다) 무용

1950년대에는 주로 고전무용 위주로 발전했는데, 이는 黨의 문예정책인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 내용」을 담는다는 것과 어느정도 일치하는 점이 있어서다. 고전무용등은 1946년에 월북한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주축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에 의해 북한 무용의 근간이 형성되었다.

고전무용 형식은 1960년대 이후로 대두된 4대군사노선등 革命을 위한 투쟁의식의 고취, 사회주의사회의 건설을 위한 전인민적 생산활동의 강요, 무력통일의욕의 고취등과 같은 內容을 담기에는 적절치 않았다. 예

를 들면, 춤을 쏘는 동작, 삼질하는 동작등이 고전무용의 우아한 율동과는 일치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최승회를 비롯한 고전무용의 전수자들은 숙청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분야에서의 傳統文化 왜곡 양상을 보면 비록 고유의상을 변형·모방하고 민속무용의 형식을 취하여 전통적인 것이 일부 잔존되고 있기는 하나, 기본 동작과 율동방법, 그리고 속도 등을 변질시켜 鬪爭的인 內容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날 북한 무용예술의 主流를 형성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군중무용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당이 요구하는 군중문화운동에 기여케 한다.

그들의 대표적인 가극인 「피바다」와 「꽃파는 처녀」등에서 나타난 무용의 형식은 육체의 아름다움이나 율동미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힘과 웅장한 규모의 조직을 과시하는데 있다. 한편, 「옹해야」등 민요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노동을 찬미하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아직도 장고춤이나 부채춤은 해외공연과 외래인사들의 관람용으로 일부 남아 있다.

라) 영화, 연극

북한에서는 영화와 연극을 「직관예술」이라고 하여 다른 共產國家들이 그러했듯이 다른 어떤 예술분야보다 住民들을 政治思想 敎養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영화 제작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적 배려를 하고 있다. 그것은 映畵나 演劇을 예술분야의 한 장르로 취급하기 보다는 體制維持와 주민사상교양의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 보기때문이다.

金正日이 저술했다는 「영화예술론」(1973.4.11)은 주체사상과 주체적 文藝理論을 영화분야에 구체적으로 적용시킨 문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1970年代 중반부터 제작된 모든 映畵는 이 영화예술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았다.

북한의 영화예술인들도 다른 분야의 문예인과 같이 創作活動의 계획 작성에서 부터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黨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으며, 文藝政策 방향에 부응한 소재 및 主題로 시나리오 창작, 촬영계획을 年·分期·月別로 작성, 영화인 동맹, 문학예술총동맹을 거쳐 黨 문화예술부의 비준을 받게 되어 있다.

영화제작에 대한 金正日의 관심은 지대하여 시나리오 작성, 배역 및 감독선정, 심지어 영화 보급에 이르기 까지 직접 관여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金正日이 「피바다」, 「꽃파는 처녀」, 「한 자위단원의 운명」등과 같은 영화의 제작을 지도하였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영화·연극 내용은 대부분 긍정적 인물과 부정적 인물을 대비시키고 있다. 부정적 人物의 경우, 해방전의 소재로는 日本人과 地主, 해방이후 시대는 美國人이나 남쪽 사람, 또는 보수적 인텔리등이며, 긍정적 人物로는 金日成과 그에게 충성하는 革命家, 노동자와 농민을 등장시키고 있다.

1960년대 천리마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영화·연극도 대형화되었으며, 黨의 유일사상체제와 혁명전통을 체계화한 金日成의 神格化의 내용이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1970년대에 특기할 사항은 권력의 세습과 관련하여 金日成 家系의 血統 美化를 위한 혁명전통적인 영화·연극의 창작과 공연을 강조한 것이다. 이 때에 두드러진 경향은 集體作의 양산이다. 1970년대 후반부터 연극은 빛을 잃어가고 있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金正日이 연극보다 영화나 가극을 더 좋아하는 취향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북한에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2·8영화촬영소, 기록영화촬영소, 과학·교육영화촬영소등이 있으며, 영화기계공장, 평양영화필름복제공장 등 영화관계의 공장 및 영화과학 연구기관과 영화대학등이 있다. 최근에는 金正日의 지시로 대규모 영화촬영거리도 만들었다.

마) 미술

북한의 美術은 동양화와 조각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해방이후 6·25남침시까지의 초상화와 같은 선전벽화등 共產主義 宣傳포스터 종류가 대부분이어서, 1945년 한해 동안에 그려진 金日成 초상화만 해도 9만 여점이나 되었다.

1950년대 중반까지는 월북한 미술인들에 의해서 비교적 自然主義的인 方法으로 풍경이나 화초, 또는 사람들의 生活相등이 묘사되었고, 고미술에 대한 소개도 자주 있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는 金日成의 초상과 공장, 기업소들, 전후복구와 천리마운동등과 같은 경제건설이 주요 주제로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金日成이 화판에 등장하는 비율은 전체 작품의 20% 정도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거의 90% 이상의 美術 作品에 金日成이 등장하여 美化되었다. 1960년대 중반부터 作家의 主觀이나 個性이 일체 배제된 集體畫가 빈번히 등장하였으며 목적화의 형식이 뚜렷해졌다. 극심한 전통의 왜곡과 金日成의 偶像化가 오늘날 북한 미술의 양식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북한이 조각에 치중하는 것은 金日成의 동상 건립과 날조된 革命傳統을 造形化해야 할 필요성에서 연유한다.

북한회화의 특징은 대작위주, 관화위주의 美術이 주류인바, 그 이유는 화가 개인보다 집단 창작품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3) 언론활동

가) 북한 언론의 성격

북한의 언론은 공산주의의 언론관에 입각하여 「선전자·선동자·조직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예컨대 北韓言論을 대표하는 「로동신문」은 「金日成主義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 신문」이 되어야 한다는 黨의 지침에 따라 주체사

상으로 철저히 무장될 것이 요구되며, 金日成과 金正日, 黨에 대한 충실성을 생명으로 삼고 있다고 한다.³⁰⁾

北韓言論의 기본성격은 당성, 계급성, 대중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黨性은 현실을 보는데 있어 계급성을 강조하는 입장에 서야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당의 노선과 정책을 선전하는데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의 黨性을 띤 언론이란 모든 사회현상과 사건을 黨政策의 시각과 계급적 입장에서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산주의에 있어서의 思想性和 黨的 性格은 실제에 있어서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에 봉사한다는 계급의식적 성격과 같은 뜻으로 통한다. 왜냐하면 이 개념은 계급성을 전제로 한 現實의 파악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르크스 레닌主義 이론에 따르면 모든 신문은 특정한 계급의 이익을 위한 특정 이데올로기의 소산으로 당파적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共產主義社會의 言論은 「계급투쟁의 무기」로서의 임무를 띠게 되고, 言論의 대중적 성격은 대중이 言論에 협력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北韓言論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김일성 1인지배체제의 특성상, 개인의 기본권이 원초적으로 유린·박탈 당한 상태에서 표현의 자유는 존재할 수 없다.
- ②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제53조에서 “국민은 언론, 출판, 결사,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형식상 표현의 자유가 있는 듯이 규정했으나, 실제적으로는 동법 제 4 조에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지도지침으로 삼는다」는 규정과 제10조에 「계급노선과 군중노선을 관철한다」라고 못박아 분명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 ③ 김일성은 “신문, 잡지, 서적같은 출판물이야 말로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제시하는 혁명과업 실천을 위해

30) 「내외통신」주간판 제716호,, (1990. 11.2) 내외통신사. p.4

로동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선전선동의 도구”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당의 노선과 방침에 배치되는 언론은 있을 수 없다.

- ④ 북한의 대중매체도 정보의 전달과 오락·교양의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당과 정권기관이 주민을 통제·동원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언론기관은 당에 완전히 예속되어 있다.

이와같이 북한에서는 출판, 보도물들이 뉴스의 전달자나 정보의 교류 수단 내지는 오락 수단으로서가 아닌, 黨과 政權에 의한 주민의 지도·통제와 金日成 思想 교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다른 공산주의국가와 같이 보도, 출판 등 순수한 의미에서의 言論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고 또 존재할 수도 없다.

(4) 보도, 출판현황

新聞을 보면 중앙에는 勞動黨의 기관지로서 매일 6면씩 발행되는 「로동신문」(150만부), 政務院의 기관지로서 「민주조선」, 社勞靑의 기관지인 「로동청년」등이 있으며, 정무원의 각 부처에서 발행하는 「교통신문」, 「건설신문」, 「교원신문」 등이 있고 그외에 「소년신문」, 「통일신보」 등이 있다. 地方紙로는 각 市·道黨에서 발행하는 「평북로동신문」, 「황해로동신문」 등이 있으며 外國語新聞으로는 週刊인 「The Pyong Yang Times」가 英文과 佛文으로 발간되고 있다.³¹⁾

이같이 北韓의 新聞들은 모두 당과 정부 및 사회단체의 기관지로서 발행되고 있을 뿐이다. 어떤 신문이든 뉴스의 전달자나 교양과 오락의 수단이 아니라 「黨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는 위력한 사상적 무기」임을 스스로 자처하고 있는 것과 같이 「공산주의 건설의 물질적 요새, 사상적 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사상교양과 대중동원의 도구인 것이다.

북한은 「로동신문」의 전신인 「正路」의 첫 발행일인 11월 1일(1945년)

31) 朝鮮概觀 (평양: 외국문 출판사, 1987) 번역자료, 국토통일원, 1988, p.189

을 出版節(1970년 12월 정령)로 정하고 매년 기념 행사를 하고 있다.

북한 신문의 특징은 언론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속보성과 진실성이 결여된 점이다. 「로동신문」등의 1면을 차지하고 있는 金日成과 金正日에게 보내온 각종 축하전문소개 기사들은 電文 발신일 이후 1주일 것들이 대부분이며, 生日祝電의 경우 2~3개월간에 걸쳐 반복 소개되고 있다.

北韓新聞의 편집 활동이 黨의 선전 선동부의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사 내용은 미리 짜여진 黨의 선전 선동 계획을 편집위원회의 형식적인 결정과정을 거쳐 이를 알리는데 불과하며 신문의 주요 기사들은 거의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를 인용, 보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기사의 게재는 紙面의 위치와 크기까지도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문 편집이 끝나면 인쇄 직전에 마지막 黨의 검열 단계를 거쳐야 한다.³²⁾

북한의 신문기사 특징은 사건기사나 사회비판기사는 물론 생활정보기사, 오락기사, 특파원기사, 신문소설등은 찾아 볼 수 없고 광고는 취급하지 않는다. 반면에 金日成·金正日의 혁명사상과 지도이념을 찬양하거나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주민들의 노력동원을 고무하는 사상 선전적 기사는 하루도 빠짐없이 게재된다.

通信機關으로서는 政務院에 직속된 북한의 유일한 日刊通信인 「조선중앙통신」(북한, 남한, 국제뉴스)이 사진 통신외에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으로 通信을 내고 있으며, 이 외국어 통신은 외국에 송신된다.³³⁾

북한에서는 「조선중앙통신사」가 북한을 대변하는 언론기관이라면서 이 通信의 임무는 黨의 노선과 대외 정책을 국내외에 널리 보도 선전하는 동시에 국제적 범위에서 일어나는 주요사변들과 국제생활들을 국내에 소개, 선전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면서 “통신보도의 정치·사상성과 전투성, 신속정확성을 보장하기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32) 「내외통신」 주간판 제716호(1990. 11. 2) 내외통신사, pp.3~4

33) 朝鮮概觀(평양: 외국문 출판사)번역자료, 국토통일원, 1988, p.190

강조한다.

北韓의 放送은 勞動黨의 강력한 사상적 무기로서 黨의 지시 통제를 받고 있는 점에서는 다른 언론기관이나 마찬가지로이다. 방송의 지도기구로는 형식상 政務院의 관할하에 「중앙방송위원회」가 있으며, 그 산하에 市·道放送委員會와 郡방송위원회가 있으며, 그 하부기관으로 유선방송 중계소가 있다.

라디오의 경우 北韓의 정규방송인 「조선중앙방송」, 대외·대남 병용인 「평양방송」, 대남 흑색방송인 民民戰의 「구국의 소리 방송」(과거 統革黨 목소리 방송) 및 제 3 방송(유선방송)이 있으며, 이들은 黨의 선전 선동부와 문화예술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

텔레비전방송으로는 「조선중앙 텔레비전」, 「개성 텔레비전」, 「만수대 텔레비전」이 있다. 중앙 텔레비전 방송은 대내용 칼라와 흑백 겸용이며, 개성 텔레비전 방송은 순전히 대남용이고, 만수대 텔레비전 방송은 칼라로 예술공연 및 국내외 영화를 위주로 일요일만 방영하는데 이 방송이 시청율이 높다고 한다.

중앙텔레비전 방송과 만수대 텔레비전 방송 송출방식은 유럽권에서 쓰고 있는 PAL식인데, 개성텔레비전 방송은 對南放送이기 때문에 韓國과 같은 NTSC식을 사용하고 있다.³⁴⁾

北韓의 出版도 다른 언론분야와 같이 黨의 강력한 선전선동수단의 하나로서 金日成의 敎示에 따라 그 사업 방향을 정하고 있다. 金日成은 “혁명군대가 무기를 가져야만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처럼, 혁명조직은 출판물과 같은 그러한 예리하고도 전투적인 사상적 무기를 가져야 대중을 승리로 이끌수 있다.”고 하였다.

북한에는 주요 출판기관으로서 사상혁명과 관련된 출판을 주로 하는 「조선로동당 출판사」, 「금성청년 출판사」등과 과학 지식 보급을 위한

34) 「북한의 실상」,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p.211

「사회과학 출판사」, 「과학원 출판사」와 문예작품을 취급하는 「문예출판사」등이 있다. 그 이외에 교육도서를 출판하는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고등교육도서 출판사」, 「외국문교육도서 출판사」가 있다.

북한에서 출판되는 잡지로는 勞動黨의 이론지인 「근로자」를 비롯하여 「조선문학」, 「조선무역」, 「대중과학」, 「체육」등 각 분야별로 30여종이 있으며, 최근에는 國際問題 시사 전문 월간지인 「국제생활」을 창간했다.

그리고 「오늘의 조선」, 「천리마」, 「조선무역」등 8종은 외국어로 번역, 해외에 배포하고 있다.

4. 結 論

북한공산주의자들은 自我實現이라는 교육의 일반적 기능에 역행하여, 「공산주의적 새인간」을 육성한다는 목표아래 政治思想教育에 치중하여 폐쇄적, 맹종적, 호전적 人間의 양성에 주력해 왔다. 北韓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는 출발부터 非教育的이며, 「공산주의적 새인간」양성이란 교육목표도 反民主的이다.

北韓에서 「문화혁명」 혹은 「군중문화사업」을 통한 사회주의문화의 건설이란 이름하에 문학, 예술, 출판, 보도활동을 완전히 政治 도구화함으로써 反文明的인 社會로 이끌어 가고 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지난 45년간 폐쇄사회 속에서 政治敎化와 획일적인 文化構造를 통해 北韓住民의 사상, 가치관, 의식구조와 사고방식, 행동양태까지 共產主義化를 추구하여 남쪽의 우리와 민족적, 문화적 유대감을 희박케 하고 민족이질화를 촉진시켜 왔다. 북한의 敎育과 文化는 분명히 평화적인 民族統一을 저해해 왔다.

그러나 人間의 本性和 인류의 보편타당한 가치관과 배치되는 文化와 政治敎化, 思想革命은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北韓에서 反動思想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부르주아思想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人間本性的의 자연스러운 발로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본성의 발로를 인위적으로 억제 말살하려고 노력해도 완벽하게 근절시킬 수는 없다.

지난 45년간 人間改造에 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北韓에서는 북한안에 「혁명의 배신자», 「혁명의 변절자」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북한이 경계하고 있는 외부사조의 침습과 부분적 개방의 필요성은 思想革命의 한계점이 있음을 말해 준다.

북한이 사상혁명을 강조하며 계속 이를 추구하는 한 民族統一의 실마리는 풀기 어렵다. 지금 北韓共產主義者들이 教育과 文藝活動을 통해 「오직 한 길 따라」, 「우리식대로 살자」라는 구호하에 계속혁명을 전개하고 있으나 세계사적 추세인 變化의 물결을 거역할 수 없을 것이다.

北韓 教育과 文化의 變化를 바로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民主統一論

—北韓實態—

(통연 91-1-2)

1991年 1月 25日 印刷

1991年 1月 30日 發行

發行處 統一研修院

서울特別市 道峰區 水躑2洞 山 73-13

電話 901-7120~4

印刷處 廷文社文化(株)

